

2012.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 보고서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000-000470-01

# 수상레저관광 활성화 관련 법제개선 연구

2012. 12.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수상레저관광 활성화  
관련 법제개선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12. 31.

한국법제연구원  
원 장 김 유 환

## 《 참여연구진 》

연구책임자    박 영 도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강 현 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 세 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윤 석 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승 렬 (전 법제처 법제심의관)

## 목 차

제 1 장 연구목적 및 범위 .....	11
제 1 절 연구목적 .....	11
제 2 절 연구범위 .....	14
제 2 장 수상레저관광의 개념과 관련 법제 개관 .....	17
제 1 절 수상레저관광의 개념 및 특징적 요소 .....	17
제 2 절 외국의 수상레저관광 관련 정책동향과 법제 개관 .....	21
I. 일본의 수상레저관련 정책동향과 법제 .....	21
1. 개 설 .....	21
2. 수상레저 관련 법제 .....	23
3.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	36
II. 독일의 수상레저관련 정책동향과 법제 .....	39
1. 개 설 .....	39
2. 수상레저 관련 법제 .....	42
3.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	47
제 3 절 우리나라의 수상레저관광 관련 법제 개관 .....	49
I. 개 설 .....	49
II. 수상레저관광 활동장소 관련 법제 .....	52
1. 내수면과 관련되는 법률 .....	54
2. 해수면과 관련되는 법률 .....	62
3. 내수면 및 해수면과 관련되는 법률 .....	64
III. 수상레저기구 관련 법제 .....	65
1. 수상레저안전법 .....	66
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68
3. 선박법 .....	68

IV. 수상레저관광 인프라 구축 관련법제 .....	69
1. 관광진흥법 .....	74
2. 농어촌정비법 .....	74
3.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75
4.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	76
5. 어촌·어항법 .....	77
6.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78
7. 연안관리법 .....	78
8.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79
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80
10. 항만법 .....	81
1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82
V. 수상레저관광 안전관리 관련 법제 .....	83
1. 개항질서법 .....	85
2. 수난구호법 .....	86
3. 수상레저안전법 .....	88
4. 해사안전법 .....	99
VI. 기타 관련 법제 .....	100
1. 레저스포츠 관련 법률안 .....	100
2. 자치법규 .....	104
제 3 장 수상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	107
제 1 절 법제개선의 방향성 .....	107
제 2 절 수상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 개선방안 .....	111
I. 수상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	111
II. 관련 법제개선의 방향 및 검토 .....	113
1. 수상레저관광 활동장소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	115

2. 수상레저관광 인프라구축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	120
3. 수상레저관광 안전관리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	123
4. 기 타 .....	134
Ⅲ. 관광진흥법제 개선의 방향 및 검토 .....	137
참 고 문 헌 .....	143
<b>【부 록 1】 일본의 자치단체의 주요 수상레저 관련 조례 .....</b>	<b>147</b>
1. 武雄市 관광보트장 설치조례 .....	147
2. 武雄市 관광보트장 설치조례 시행규칙 .....	150
3. 山梨県 모터보트업 적정화조례 .....	151
4. 山梨県 모터보트업 적정화조례 시행규칙 .....	157
5. 和歌山県 마리나조례 .....	159
6. 和歌山県 마리나조례 시행규칙 .....	165
7. 滋賀県 琵琶湖 레저이용 적정화에 관한 조례 .....	169
8. 滋賀県 琵琶湖 레저이용 적정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185
9. 大阪北港 요트하버(Yacht harbor)조례 .....	193
10. 大阪北港 요트하버(Yacht harbor)조례 시행규칙 .....	197
11. 北海道 pleasure boat 등의 사고방지등에 관한 조례 .....	201
12. 北海道 pleasure boat 등의 사고방지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211
<b>【부 록 2】 관광수상레저 사업수행 관련 주요 인·허가 대상 법률 ...</b>	<b>215</b>

## 제 1 장 연구목적 및 범위

### 제 1 절 연구목적

관광정책을 중시하는 동향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조류이다. 국가의 관광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국민의 소득수준의 상승과 그에 따른 생활의 여유이며 기본적으로는 경제성장이다. 국제적으로 관광경쟁력이라는 개념이 생겨날 정도로 관광정책을 활성화하려는 상황은 경제발전에 따른 시장의 확대, 국제적인 이동의 용이화 기타 넓은 의미의 글로벌화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경제발전에 따른 사람들의 여가의 증대가 관광에 대한 관심을 가져오고 있다. 각국이 관광진흥을 적극 추진하는 요인은 관광관련산업이 가지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관광이 가지는 역할은 경제적인 효과뿐 아니라, 문화적 측면 및 사회적 측면까지 매우 다양하다.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서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고용창출·외화획득, 인적교류와 문화교류를 통한 세계화와 지방화를 촉진하고, 국제적 이해관계 증진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유발한다. 아울러 관광은 여가문화적 가치의 사회확산이라는 중요한 사회정책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부터 관광의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관광진흥이라는 정책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지만 관광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정책적 역할은 법체계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나라 관광진흥정책은 관광산업육성을 통한 경제적 목표 달성이라는 정책목표와 관광을 통한 국민의 참여복지 확산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문화적 정책목표와의 연계성과 상호작용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관광진흥정책은 국민관광과 국제관광의 균형을 통하여 경제적 효과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관광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관광자원개발의 과제는 현대 문화국가의 기틀을 확립하는 필수적 사안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관광의 기능과 역할에 부응하는 관광자원의 개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제도상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관광산업이 성장기여도 및 잠재력, 외화획득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고 특히, 2010.7 정부에서는 관광산업이 일자리 창출효과도 높기 때문에 성장과 고용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우리경제에 매우 긴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레저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관광·레저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sup>1)</sup> 이 방안에서는 관광자원성과 시장성이 뛰어난 관광거점을 전략적으로 선택·집중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핵심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쇼핑·생태·농산어촌·산업·레포츠 관광 등 관광의 다양성을 강화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국내 관광수요 진작 하도록 하였다.

특히,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물적·인적 기반 구축을 위해 레저수요에 대비한 레포츠 기반시설 지원 확대를 도모하고, 관련 법령을 관광·레저산업 육성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그 가운데 최근 수상레저는 체험형 관광시장의 급성장, 새로운 여가트렌드와 국가시책에 따라 국가의 전략적 동력산업으로서 급부상되고 있으며, 스포츠 기능은 물론 고부가 가치의 수상레저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리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인프라로 재편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sup>2)</sup>

이에 따라 관련 정부부처에서는 수상레저의 활성화를 위해 수상레저가 이루어지는 지리적 여건을 중심으로 한 육성정책,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의 수상레저를 활성화하려는 정책, 수상레저를 관광과 연계하여 이를 활성화하려는 정책, 수상레저의 활성화에 따른 안전관리를 도모하려는 정책 등 그 추진목적과 성격에 따라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 여가활동 증가에 따라 요·보트 등 수상레저 활동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수변레저문화 활성화 및 관광진흥 차원에서 수상레저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 **관광·레저산업 육성방안(제8차 국가고용전략회의)**, 2010.7.15.

2) 이진국, **독일의 수상레저관광 실태와 정책동향**, 수상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2.9.25, 63면 이하 참조.



그러나 수상레저와 관련하여 현행 법체계는 시설 및 안전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은 없는 실정에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5.15 관광진흥 차원에서 ‘관광수상레저업’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여기서는 관광수상레저업을 「관광진흥법」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일종으로서,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수상레저기구를 관광객에게 대여하여 이용하도록 하거나 관광객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워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으로 정의하였다.

수상레저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입법정책에 따라 수상레저 활성화 또는 안전규제와 관련한 법제유형도 다수 존재하고 있고, 또한 수상레저의 유형이나 레저활동장소 등에 따라서도 관련 법제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상레저와 관련한 현재의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수상레저관광업이라는 입법정책을 추진할 경우 현행법체계가 체계정당성을 상실하여 법의 운용과정과 해석에 있어서 모순이나 저축을 낳게 되어, 법이 추구하려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아 실무자는 물론 동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이해관계자에게도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많다.<sup>3)</sup>

특히, 수상레저와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다수의 법제가 존재하고 있고, 관련 부처에서도 부처의 소관정책을 가시화하기 위해 수상레저와 관련된 법제를 선도적으로 개편하여 관련 정책의 주도권을 가지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수상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의 정책영역을 명확하게 하고 각 부처 소관 관련 법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상레저관광 사업의 기반이 구축되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수상레저관광이 제대로 정착되고 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가능성을 항상 모색하여야 한다. 우선, 수상레저관광과 같이 특정한 문제를

3) 입법내용의 종합적 조정의 관점에서 보는 경우, 법령의 각 개별규정은 고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법령규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부하면서 종합적인 법제도·법령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며 이들 규정 사이에는 조화의 관계 내지 균형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입법에 있어서 체계성의 원리 내지 체계정당성의 원리(Prinzip der Systemgerechtigkeit oder Systemgemäßheit)라고 한다. Franz-Josef Peine, *Systemgerechtigkeit. Die Selbstbindung des Gesetzgebers als Maßstab der Normkontrolle*, Baden-Baden 1985, S.11. 또한 홍완식,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29집(2005.12), 459면 이하 참조.

새로이 입법화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현존하는 법질서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체계적 관점에 따라 체계성있게 입법하여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한 새로운 제도를 기존의 법질서의 체계 가운데 편입하여 새로운 제도가 기존의 법질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의 법령을 개정·보완할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를 기존의 법질서와 아무런 관계없이 단순히 편입하기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연구는 수상레저관광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현행 관련 법제를 추출, 이를 검토·분석함으로써 수상레저관광업이 정착될 수 있는 법제 기반을 모색한다. 나아가 수상레저관광 부문에서 부처 간 입법정책 공조방안 뿐만 아니라 현행 수상레저사업이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수요자 입장에서 인·허가 절차 등 과정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민간사업자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제적인 요소를 발굴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함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 제 2 절 연구범위

첫째, 이 연구는 수상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수상레저 관련법령의 현황과 입법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다. 현재 수상레저는 레저의 유형에 따라 관련 법제들이 산재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현행 법제로서 「수상레저안전법」이 존재하고 있으며, 동 법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이란 ‘내수면이나 해수면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상의 수상레저활동의 의미에 따라 현행법제상 ‘내수면(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 및 ‘해수면(바다의 수류나 수면)’과 관련되는 법제유형을 추출하여 해당 법제에서 수상레저활동을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검토한다.

그리고 현행 법제에서는 수상레저활동과 관련한 각종 인프라조성을 위한 정책을 규정한 「어촌어항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 「항만법」 등 관련 법제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현행 「연안관리법」을 전면 개편하여

가칭 “연안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레저 인프라 조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포함한 해양레저 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해 별도로 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부처별로 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어서 관련 법제를 면밀하게 검토한다.

그 밖에 수상레저와 관련하여 각종 안전관리법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수상레저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현행 법제 유형 및 넓은 의미의 레저스포츠 전반을 규율하는 다양한 현행 법제가 존재하고 있고, 현재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도 계류되어 있는 등 레저스포츠와 관련된 입법정책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들 법제에 대해 검토한다.

둘째, 이 연구는 위의 수상레저 관련 법제들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관광진흥의 차원에서 수상레저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수상레저와 관련한 규정이 없고, 이미 살펴본 것처럼 2012.5.15.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에서 ‘관광수상레저업’을 신설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진흥차원에서 수상레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와 관련된 법률 및 제도를 정비하여 수상레저관광에 대한 기반조성,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 수상레저관광 전 부문에 대해서 정책적 통일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제를 기반으로 수상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에 산재되어 있는 입법정책영역을 명확하게 하고 각 부처의 법제와의 모순과 저충없이 효율적인 기반조성이 될 수 있게 「관광진흥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셋째, 이 연구는 현행 규제·관리 위주의 수상레저관광 관련 법체계에서 진흥 및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체계정비를 추진한다. 수상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려는 민간사업자의 진입이 원활하도록 관련 규제적인 요소를 완화하는 한편 수상레저관광을 이용하는 일반 고객들에게도 이용규제가 될 가능성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여 최근의 규제완화 추세에 부합하게 관련 법제를 개선한다.

규제는 사업자의 공정·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없는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이며, 규제의 재검토에 있어서는 그 규제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이 경쟁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보다 우선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그 규제의 존속이 인정될 수 있다.<sup>4)</sup> 또한 국민의 안전·건강의 확보 등 사회적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규제가 필요한 경우라도 규제의 내용을 본래의 규제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에 한정하고 또한 규제수단도 경쟁제한적 효과가 적은 것을 채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제완화론은 단순한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경제의 국제화에 대응한 국제 경쟁력의 강화와 경제활성화 등의 필요성에 의거한 것이다.<sup>5)</sup>

그러나 현재의 수상레저관광과 관련한 규제완화에 관한 논의의 전부가 규제의 완화·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물론 아니며, 완화·폐지되어야 할 규제와 향후 바람직한 시장의 기본원칙으로서 유지·설정되어야 할 규제를 구별하여 검토한다. 즉, 시장의 성숙성의 단계에 대응하여 규제의 내용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기술진보의 단계에 대응하여 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 점에서 수상레저관광과 관련한 규제완화론에 있어서 본질적인 과제는 사실 규제 그 자체의 완화·폐지라기보다는 각종 사회적·경제적 또는 기술적인 조건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4) 자세한 내용은 홍두표·한상우, **규제개혁의 과제와 추진방향**, 법제처 법제개선연구 제2집(1996), 73면 이하 참조.

5) 규제완화가 필요한 분야는 다방면에 걸친다. 특히, 운수, 전력, 통신 기타 이른바 기간산업에 있어서 비용의 문제는 사회전체로서 생산비용 및 유통비용을 인상할 정도로 경제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인식되며, 또한 경제와의 관련뿐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이익의 보호라는 관점에서도 규제완화가 요구되고 있다.

## 제 2 장 수상레저관광의 개념과 관련 법제 개관

### 제 1 절 수상레저관광의 개념 및 특징적 요소

수상레저관광이라는 의미는 학문적으로 정의된 용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그 의미는 명확하지 않다. 현행 법제상 ‘수상레저’의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고, ‘관광레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입법례(「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1호 다목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어촌어항법」 제19조제4항의 “어촌관광레저” 등)도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서는 ‘관광수상레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관광수상레저업의 의미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한 수상레저기구를 관광객에게 대여하여 이용하도록 하거나 관광객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워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상관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여가를 목적으로 해수면과 내수면을 포함하여 수상, 수변 및 수중에서 이뤄지는 모든 활동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구체적으로 수상관광을 “여가를 목적으로 레저기구나 선박, 수상구조물을 활용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이뤄지는 관광활동”으로서 정의하는 한편 외양크루즈·스킨스쿠버·해저관광·납시관광 등의 영역은 제외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수상관광을 그 활동 유형에 근거하여 스포츠형 수상관광, 관람형 수상관광, 문화이벤트형 수상관광으로 유형화하고 있다.<sup>6)</sup>

가장 넓은 의미에서 보면, 수상레저관광은 물과 관련된 모든 관광산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상레저관광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일정한 기준, 즉 물과 관련한 관광을 하는 동기에 따라 수상레저관광을 개념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상레저관광과 관련한 부분을 망라해보면, ①

6) 김윤영, 수상관광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6면 이하 참조.

좁은 의미의 수상레저관광, ② 넓은 의미의 수상관련관광, ③ 수상레저관광과 결합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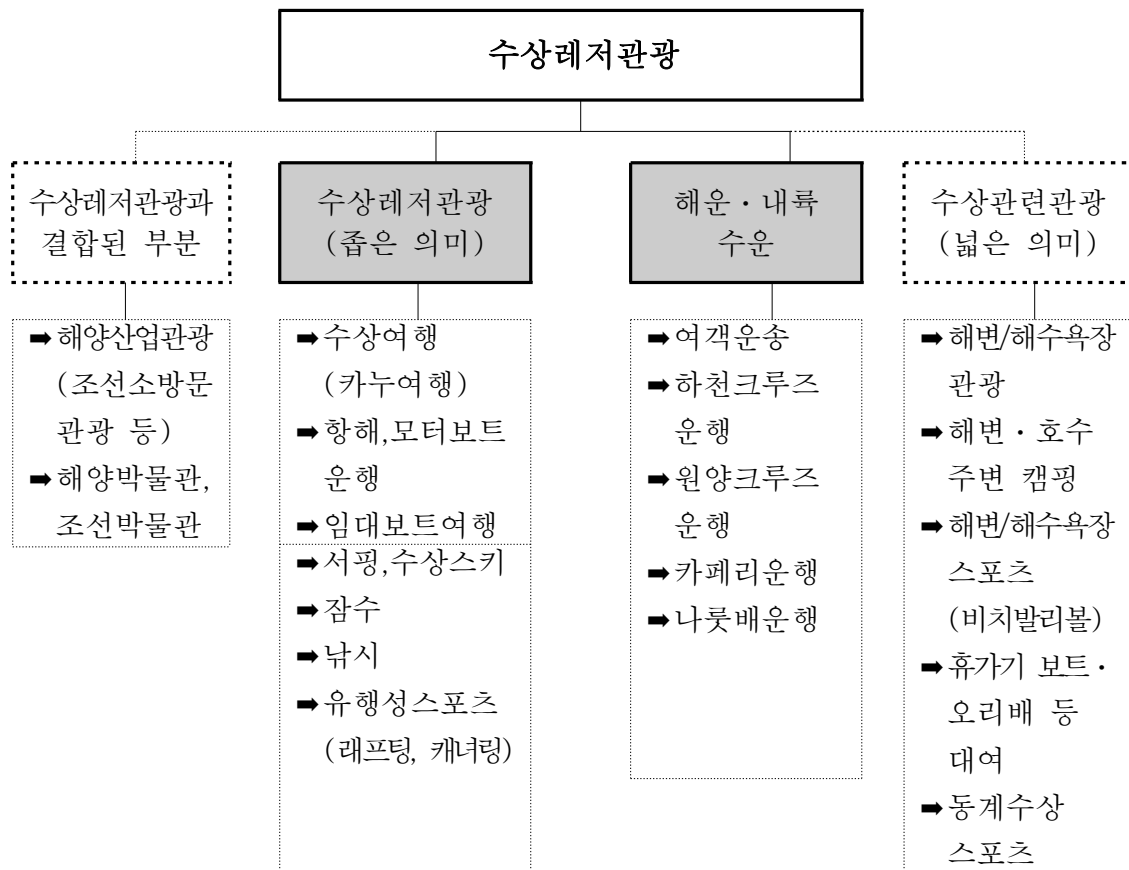
좁은 의미의 수상레저관광은 물위(auf Wasser) 또는 물안(im Wasser)에서 체류하는 것을 주된 동기로 하는 관광을 의미한다. 이에선 예컨대, 수상여행(카누여행), 항해, 모터보트운행, 임대보트여행, 서핑, 수상스키, 잠수, 낚시, 유행성 스포츠(래프팅, 캐녀링) 등이 포함된다. 한편, 좁은 의미의 수상레저관광은 수로를 통한 여객운송(일반 여객운송, 하천크루즈운행, 원양크루즈운행, 카페리운행, 나룻배운행 등)도 포함된다.

이에 반해 넓은 의미의 수상관련관광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물이 중요하게 다가오지만 다른 여행동기가 중심을 이루는 관광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의 수상레저관광에는 해변/해수욕장 관광, 해변·호수 주변에서의 캠핑, 해변/해수욕장 스포츠(비치발리볼 등), 휴가기 보트임대, 오리배 등 대여, 동계수상스포츠 등이 포함된다.

한편, 수상레저관광과 결합된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수상레저관광과 결합된 부분은 물론 물과 관련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물을 수동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속하는 예로는 해양산업관광(조선소 방문관광 등), 해양박물관, 조선박물관 등에서의 방문 등이다. 이러한 수상레저관광과 결합된 부분은 엄밀히 말해서 수상레저관광과 동떨어진 형상이지만, 수상레저관광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의미한 것이다. 예컨대, 수상레저관광 타운을 건설함에 있어 해양박물관 등과 같은 부대시설도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수상레저관광과 그 인접개념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sup>8)</sup>

7) 일반적으로 수면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은 보트, 낚시 등과 같은 고전적인 수상스포츠 또는 해수욕 및 해변스포츠와 같은 수상활동도 포함되나, 나아가 전통 축제나 해양박물관 등 수상지향형 문화관광도 포함한다. 그리고 해변에서의 당일관광이나 면세점이 있는 크루즈 관광 등도 포함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또한 항구와 연안의 풍경도 관광객들에게는 물과 선박에 관한 실제적인 경험을 가져다주는 등 이것도 수상관광의 하나의 형태이다. Ralf Scheibe, **ICZM and Tourism -- A Field Study. The Present State and the Future Challenges for Tourism in the Odra Lagoon Region**, in : Glaeser Schemewski/Sekšćićińska Scheibe & Thamm(eds.), Coastal development. The Oder estuary and beyond, Coastline Reports 8 (2007), S.61.

8) Hamburg Messe und Congress GmbH/DTV, **Grundlagenuntersuchung Wassertourismus in Deutschland, Ist-Zustand und Entwicklungsmöglichkeiten**, Bonn/Hamburg 2003, S.6.



수상문화관광 (Water based cultural touri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박물관(Maritime museums)</li> <li>• 유적지(Historical sites)</li> <li>• 이벤트(Events)</li> <li>• 아쿠아 공원(Aqua-Parks)</li> </ul>
수상스포츠 및 변형 (Water sports and varia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터보트(Motor boating), 요트(sailing)</li> <li>• 스쿠바다이빙(Scuba diving), 스노클링(snorkeling)</li> <li>• 낚시(Angling)</li> <li>• 윈드서핑(Wind surfing), 연서핑(kite surfing)</li> <li>• 카누(Canoeing)</li> <li>• 수영(Swimming)</li> <li>• 얼음 낚시(Ice angling)</li> <li>• 얼음 항해(Ice sailing)</li> <li>• 아이스 다이빙(Ice diving)</li> </ul>

관광유람선 (Touristic shipp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크루즈(Oversea cruises)</li> <li>• 강변 크루즈(River cruises)</li> <li>• 당일 관광(Daytrips)</li> <li>• 전통 선박(Traditional ships)</li> </ul>
-------------------------------	---

관광수상레저 또는 수상레저관광라는 용어를 사용하든 기본적으로 이는 관광진흥 차원에서 수상레저 활성화정책을 추진하려는 입법정책에서 유래된 용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용어는 ‘관광’과 ‘수상레저’의 개념이 혼재된 의미로서 일반적으로는 여가를 목적으로 레저기구나 선박, 수상구조물을 활용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이뤄지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이 용어를 사용하는 영업활동이 현행 「관광진흥법」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위해서는 정확한 개념을 추출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것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사업의 종류인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제3조제1항제3호의 가목)”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수상레저관광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본다면 이를 관광객을 위하여 수상레저활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형태인 ‘일반관광유람선업’(「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크루즈업’(「해운법」에 따른 순항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을 제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수상레저관광은 ‘관광과 수상레저의 공생’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다. 물론 이는 관광정책의 다양한 가능성, 각종 관광진흥책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



수상레저관광은 일종의 ‘체험형 관광’이라는 점에서 생태관광 등과도 공통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또한 수상레저관광이 가능한 지역에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주도의 ‘착지형관광’이기도 하다.

다만, 수상레저관광은 수상이라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예컨대, 요트나 보트 등을 이용한 수상레저관광에는 넓고 안정된 수면을 필요로 한다. 수상레저관광은 수상생태 및 환경보전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 수상레저관광이 이루어지는 해수면 및 내수면은 환경변화에 민감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인위적 활동 등으로 환경오염물질에 취약한 환경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들 환경보전과 수상레저관광은 전혀 별개의 형상이 아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자연에서 휴양을 증진시키고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수상레저관광을 통하여 자연환경과 풍경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환경보전과 수상레저관광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수상레저관광은 기후와 기상변화에 민감하다. 수상레저관광 활동은 바람, 안개나 태풍 등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그 활동시기가 한정적이다.

## 제 2 절 외국의 수상레저관광 관련 정책동향과 법제 개관

### I. 일본의 수상레저관련 정책동향과 법제

#### 1. 개 설

일본의 경우 관광진흥을 국가의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1963년 6월 20일에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던 「관광기본법」을 전면 개편하여 2006년 12월 20일 의원입법으로 「관광입국추진기본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8년 10월 1일에는 국토교통성의 외청으로 “관광청”을 설치하였다. 특히, 새로이 개편된 「관광입국추진기본법」에서는 그 전문(前文)에서 “관광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고용기회의 확대 등 국민경제의 모든 영역에 걸쳐 그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강증진, 윤택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의 창조 등을 통해 국민생

활의 안정향상에 공헌하는 것 외에 국제상호이해를 증진하는 것이다”고 하여 관광이 거두는 광범한 역할과 그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 「관광입국추진기본법」에 따라 현재 일본에서는 근래 국민생활의 다양화에 따라 새로운 관광유형(New Tourism)을 창출하여 관련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광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관광유형은 다음과 같다.

종 류	정 의
Eco Tourism	자연환경이나 역사문화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손상하지 않고 체험하고 학습하는 관광
Green Tourism	농산어촌지역의 자연, 문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한 체재형 여가활동(농작물체험, 농림어촌 민박, 식육 등)
문화관광	역사, 전통 등 문화적인 요소에 대한 지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관광
산업관광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공장 등이나 그 흔적, 기계기구, 첨단기술을 갖춘 공장 등을 대상으로 한 관광
Health Tourism	자연지역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자연, 온천이나 요리를 음미하고 심신을 수련하는 등 건강의 회복, 증진, 유지 관광
기 타	장기체제형 관광, 필름관광, 의료관광, 스포츠관광

한편 일본에서는 근래 여가활동의 다양화에 수반하여 각종 수변공간에서 다양한 레저활동이 행해지고 있으며, 특히 pleasure boat(여객, 화물운송이나 어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레저용 보트 또는 요트 등)를 이용한 이른바 marine leisure에 대한 국민관심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들 활동에 대해 종전에는 주로 리조트개발이나 관광진흥의 관점에서 공공공간이나 시설 등을 정비함과 아울러 관광 캠핑이나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수상레저진흥에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수상레저인구의 증가에 수반하여 pleasure boat 숫자와 소형선박조종사의 면허취득도 매년 증가하면서 소형선박의 건전한 이용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거점을 확대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수상레저의 매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확보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레저로서 정착을 도모하며 순환형사회의 형성이나 환경보전 등 사회적 요청에 부응해가는 등 소형선박의 적절한 이용기반을 정비하고 있다.

이 수상레저가 활성화된 계기는 수상오토바이나 소형보트 등이 다양화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저가로 시장에 등장한 것이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임대보트 등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 등 수상에서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이용형태가 출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에서의 수상레저기구를 활용한 활동은 주로 호수나 하천 등의 내수면에서 활성화되기 보다는 해수면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7년 7월 20일에 새로이 제정, 시행된 「해양기본법」 제28조에서는 국민의 해사사상의 진흥을 위해 국가는 국민이 해양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심화하도록 해양에 관한 레크레이션보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관광매력을 활성화한 선박여행의 진흥시책으로서 내해에서 소형 pleasure boat를 포함한 여객선을 활용한 관광자원의 광역적인 네트워크화에 주력하고 있다.

## 2. 수상레저 관련 법제

일본의 경우 현행 관광관련법제에서도 수상레저관광과 관련한 내용은 없고, 수상레저 전반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다만, 2002년 6월에 제정된 「선박직원 및 소형선박조종사법」에서 수상레기구의 안전이나 운항자격제도를 규율하고 있을 따름이고, 수상레저의 기반조성을 위한 법제도는 개별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수상레저의 육성이나 촉진보다도 규제적 요소가 많은 실정에 있다. 관련 법제 가운데 참고가 되는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 형	관련법제
수역 및 토지이용 관련 법제	항만법, 어항어장정비법, 하천법, 도시계획법 등
해상교통 관련법제	해상충돌예방법, 항칙법, 해상교통안전법, 선박직원 및 소형선박조종자법 등
선박등록 관련법제	선박법, 소형선박등록등에 관한 법률, 선박안전법 등
영업면허 등 관련법제	해상운송법, 항만운송사업법, 유어어선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등
환경관련 법제	자연공원법 등

## (1) 수역 및 토지이용 관련법제

## ① 항만법

**제37조(항만구역내의 공사등 허가)** ① 항만구역내 또는 항만구역에 인접하는 지역으로서 항만관리자가 지정하는 구역(이하 「항만인접지역」이라 한다)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항만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와 관련하여 수역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만구역내의 수역(정령으로 정하는 그 상공 및 수저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공공지의 점용
2. 항만구역내의 수역이나 공공공지에서 토사의 채취
3.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운하, 용수나 배수의 건설 또는 개량(제1호의 점용을 수반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전각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한 항만개발, 이용이나 보전에 현저한 지장을 부여할 우려가 있는 정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이하 생략)

**제37조의3(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항만구역, 항만인접구역, 임항지구나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대신이 인정한 항만시설의 구역(이 중 항만시

설의 이용, 배치 기타 상황에 따라 항만의 개발, 이용이나 보전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항만관리자가 지정한 구역에 한한다)내에서 함부로 선박 기타 물건으로 항만관리자가 지정한 것을 버리거나 방치해서는 아니된다.

② (이하 생략)

## ② 어항어장법

**제39조(어항의 보전)** ⑤ 누구든지 어항구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어항시설의 이용, 배치 기타 상황에 따라 어항보전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어항관리자가 지정한 구역에 한한다)내에서 함부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본시설인 어항시설을 손상하거나 오손하는 것
2. 선박, 자동차 기타 물건으로 어항관리자가 제정한 것을 제거하거나 방치하는 것
3. 기타 어항보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

**제39조의2(감독처분)** ① 항만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허가취소, 효력정지나 그 조건을 변경하거나 행위중지, 공작물 또는 선박, 자동차 기타 물건(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개축, 이전이나 소각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전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위반한 자
2. 전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
3.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전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② (이하 생략)

## ③ 하천법

**제23조(유수의 점용허가)** 하천의 유수를 점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토지의 점용허가)** 하천구역내의 토지(하천관리자 이외의 자가 그 권원에 따라 관리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다음 조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5조(하천관리자의 감독처분)** ① 하천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이 법률이나 이 법률에 따른 정령 또는 도도부현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허가나 승인을 취소, 변경, 효력정지, 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이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 기타 행위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나 제거(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계류시설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의 제거를 포함한다), 공사 기타 행위나 공작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제거 또는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기타 조치를 취하거나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이 법률이나 이 법률에 따른 정령 또는 도도부현의 조례의 규정 또는 이들 규정에 따른 처분에 위반한 자, 그 자의 일반승계인이나 그 자로부터 해당 위반과 관련한 공작물(제거를 명한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나 해당 위반자로부터 임대차 기타 해당 위반과 관련한 공작물이나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 자
2. 이 법률이나 이 법률에 따른 정령 또는 도도부현의 조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승인에 붙은 조건에 위반하고 있는 자
3.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률이나 이 법률에 따른 정령 또는 도도부현의 조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

② (이하 생략)

#### ④ 도시계획법

**제13조(도시계획기준)** ① 도시계획구역에 관해 정해진 도시계획(구역외 도시시설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은 국토형성계획, 수도권정비계획, 近畿권정비계획, 중부권개발정비계획, 北海道종합개발계획, 沖縄진흥계획 기타 국토계획이나 지방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해당 도시에 관해 공해방지계획이 정해지고 있는 때에는 해당 공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제3항

에서 같다) 및 도로, 하천, 철도, 항만, 공항 등 시설에 관한 국가의 계획에 적합함과 아울러 해당 도시의 특질을 고려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 도시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에서 해당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있는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일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도시에서 있어서 자연적 환경의 정비나 보전에 배려해야 한다.

1. 도시계획구역의 정비, 개발 및 보전방침은 해당 도시의 발전동향, 해당 도시계획구역에 있어서 인구 및 산업현황과 장래의 전망 등을 감안하여 해당 도시계획구역을 일체적인 도시로서 종합적으로 정비, 개발 및 보전하는 것을 지향하여 해당 방침에 따라 도시계획이 적절하게 정해질 수 있도록 정할 것
2. 구역구분은 해당 도시의 발전동향, 해당 도시계획구역에 있어서 인구 및 산업현황과 장래의 전망 등을 감안하여 산업활동의 편의와 주거환경의 보전과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공공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할 것
3. ~ 6. (생략)
7. 지역지구는 토지의 자연적 조건 및 토지이용의 동향을 감안하여 주거, 상업, 공업 기타 용도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도시기능을 유지증진하고 주거환경을 보호하며 상업, 공업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양호한 경관을 형성하며 충치를 유지하고 공해를 방지하는 등 적정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도록 정할 것. 이 경우 시가화구역에 관해서는 적어도 용지지역을 정하도록 하고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8. ~ 13. (생략)
14. 지구계획은 공공시설의 정비, 건축물의 건축 기타 토지이용의 현상 및 장래의 전망을 감안하고, 해당 구역의 각 가도에서 방재, 안전, 위생 등에 관한 기능이 확보되며 그 양호한 환경형성이나 유지를 위해 그 구역의 특성에 상응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행해지는 것을 지향하여 해당 계획에 따라 질서있는 개발행위, 건축이나 시설정비가 행해지도록 정할 것. 이 경우 다음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열거하는 지구계획에 관해서는 해당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정하는 바에 따를 것.

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지구계획 : 시가화구역에서 시가화의 상황등을 감안하여 지구계획의 구역주변에서 시가화를 촉진하는 것이 아닌 등 해당 도시계획구역에 있어서 계획적인 시가화를 도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할 것.

나. 재개발등촉진구를 정하는 지구계획 : 토지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고도 이용과 도시기능의 증진이 도모되는 것을 지향하여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시가지의 재개발이나 개발정비가 실시되도록 정할 것. 이 경우 제1종 저층주거전용지역 및 제2종 저층주거전용지역에 관해서는 재개발등촉진구의 주변저층주택과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정할 것 (이하 생략)

## (2) 해상교통 관련법제

### ① 해상충돌예방법

**제 6 조(안전한 속력)**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하거나 그 때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로 정지할 수 있도록 상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속력을 결정하는데 특히 다음의 사항(레이더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에 관해서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시계 상태
2. 선박교통의 상황
3. 자선의 정지거리, 선회성능 기타 조정성능
4. 야간에 있어서 육안의 등화, 자선의 등화의 반사 등에 따른 등광의 존재
5. 바람, 해면 및 해조류의 상태와 선로장애물에 접근한 상태
6. 자선의 깃수와 수심과의 관계
7. 자선의 레이더 특성, 성능 및 탐지능력의 한계
8. 사용하고 있는 레이더 범위에 따른 제약
9. 해상, 기상 기타 간섭원인이 레이더에 따른 탐지에 미치는 영향
10. 적절한 레이더 범위로 레이더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형선박 및 빙산 기타 표류물을 탐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



11. 레이더로 탐지한 선박의 숫자, 위치 및 동향
12. 자선과 부근에 있는 선박 기타 물건과의 거리를 레이더로 측정함으로써 시계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

**제38조(절박한 위험에 있는 특수한 상황)** ① 선박은 이 법률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운항상의 위험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위험에 충분히 주의하고 절박한 위험에 있는 특수한 상황(선박의 성능에 따른 것을 포함한다)에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② 절박한 위험에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절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② 항칙법

**제 3 조(정의)** ① 이 법률에서 “잡종선”이란 기정(汽艇), 거룻배 및 조각배 기타 노만으로 운전하거나 주로 노로 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18조(항법)** ① 잡종선은 항내에서 잡종선 이외의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② 총 톤수가 500톤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톤수 이하인 선박으로서 잡종선 이외의 것(이하 이 조에서 「소형선」이라 한다)은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선박교통이 현저히 혼잡한 특정항내에서는 소형선 및 잡종선 이외의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제24조(수로의 보전)** ① 누구든지 항내 또는 항의 경계외 1만미터 이내의 수면에서는 분별없이 자갈, 폐유, 석탄, 쓰레기 기타 이와 유사한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② 항내 또는 항의 경계부근에서 석탄, 돌, 벽돌 기타 난잡한 우려가 있는 물건을 선박에 적재하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려는 자는 이들 물건이 수면에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항장(港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 항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난잡한 우려가 있는

물건을 추락시킨 자에 대해 그것을 버리거나 추락시킨 물건을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해상교통안전법

**제 1 조(목적 및 적용해역)** ② 이 법률은 東京灣, 伊勢灣(伊勢灣의 항구에 인접하는 해역 및 三河灣 중 伊勢灣에 인접하는 해역을 포함한다) 및 瀬戸内海 중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해역 이외의 해역에 적용하며, 이들 해역과 다른 해역(다음 각호에 정하는 해역을 제외한다)과의 경계는 정령으로 정한다.

1. 항칙법에 따른 항의 구역
2. 항칙법에 따른 항 이외의 항인 항만과 관련한 항만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하는 항만구역
3. 어항어장정비법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정촌장, 도도부현지사나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한 어항 구역내의 해역
4. 육안(陸岸)에 유래하는 해역 중 어선 이외의 선박이 통상 항행하지 않는 해역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다

**제 3 조(피항등)** ① 항로외에서 항로에 들어오거나 항로로부터 항로외로 나가거나 항로를 횡단하려하거나 항로를 따르지 않고 항행하는 선박(어로선을 제외한다)은 항로를 이에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상충돌예방법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전단 및 제18조제1항(제4호와 관련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해당 다른 선박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하 생략)

**제 8 조(항로의 횡단방법)** ① 항로를 횡단하는 선박은 해당 항로에 대해 가능한 한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신속하게 횡단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 ④ 선박직원 및 소형선박조종법

**제 2 조(정의) 1. ~ 3. (생략)**

4. 이 법률에서 소형선박조종자란 소형선박(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및 1인으로 조종을 하는 구조의 선박으로서 그 운항 및 기관의 운전과 관련한 업무내용이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과 동등한 것으로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선장을 말한다.

5. (이하 생략)

**제20조의2(소형선박조종사의 면허) ①** 소형선박조종자가 되려는 자는 소형선박조종사의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제23조의3(소형선박조종사의 자격) ①** 조종면허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격별로 한다.

1. 1급소형선박조종사
2. 2급소형선박조종사
3. 특수소형선박조종사

② 국토교통대신은 조종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는 자의 조종기능에 상응하여 소형선박조종자로서 승선하는 소형선박이 항행하는 구역, 크기나 추진기관의 출력에 관해 한정(이하 「기능한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3조의36(소형선박조종자의 준수사항) ①** 소형선박조종자는 음주, 약물의 영향 기타 이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소형선박을 조종하거나 해당 상태의 자에게 소형선박을 조종시켜서는 아니된다.

② (생략)

③ 소형선박조종자는 충돌 기타 위험을 발생시키는 속력으로 소형선박을 유영자에게 접근시키는 조종 기타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할 우려가 있는 조종으로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형선박을 조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형선박을 조종시켜서는 아니된다.

④ (이하 생략)

### (3) 선박등록 관련 법제

#### ① 소형선박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정의)** 이 법률에서 소형선박이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중 일본선박(선박법 제1조에 규정하는 일본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일본선박 이외의 선박(본토의 각항간이나 호수, 하천 또는 항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한한다)으로서 다음의 선박 이외의 것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어선
2. 노 또는 주로 노로 운전하는 배, 계류선 기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선박

**제 3 조(등록의 일반적 효력)** 소형선박은 소형선박등록원부에 등록을 받지 않으면 이를 항행용으로 제공될 수 없다. 다만, 임시항행으로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신규등록 및 측정)** ① 등록을 받지 않은 소형선박의 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는 국토교통대신에 대해 신규등록을 신청하고 해당 선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대신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허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 해당 선박의 총톤수측정(이하 「측정」이라 한다)을 하고, 다음 사항 및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선박번호를 원부에 기재함으로써 신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
2. 선적지
3. 선박의 길이, 폭 및 깊이
4. 총톤수
5. 선체식별번호
6. 추진기관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 종류 및 양식
7. 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
8. 등록연월일

## ② 선박안전법

**제 5 조** ① 선박소유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선박에 대해 동항각호에 열거하는 사항, 제3조의 선박에 관한 만재결수선, 전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의 무선전신 등에 관해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최초 항행용에 제공되는 때나 제10조에 규정하는 유효기간만료하는 때에 행하는 정밀검사(정기검사)
2.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중간에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기간에 행하는 간이한 검사(중간검사)
3. 제2조제1항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이나 무선전신등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개조나 수리를 행하는 때,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만재결수선의 위치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조건변경을 받으려는 때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는 검사(임시검사)
4. 선박검사증서를 받은 선박을 임시항행용으로 제공하려는 때에 행하는 검사(임시항행검사)
5. 전각호 이외에 일정한 범위의 선박에 제2조제1항의 국토교통성령이나 국토교통성령, 농림수산성령에 적합하기 위해 국토교통대신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행하는 검사(특별검사)

## (4) 영업면허등 관련법제

## ① 해상운송법

**제 2 조(정의)** ② 이 법률에서 선박운항사업이란 해상에서 선박으로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을 하는 사업으로 항만운송사업(항만운송사업법에 규정하는 항만운송사업 및 동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항만 이외의 항만에서 동법에 규정하는 항만운송사업에 상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외의 것을 말하며 이를 정기항로사업과 부정기항로사업으로 구분한다.

**제43조(5톤 미만의 선박에 관한 규정)** 이 법률의 규정은 다음에 열거하는 선박에 한하여 영업을 하는 해상운송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람의

운송을 하는 선박운송사업으로서 제2호의 배만으로 영업하는 것 이외의 것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노만으로 운전하거나 주로 노를 가지고 운전하는 배

## ② 유어어선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 2 조(정의)** 이 법률에서 유어어선이란 선박으로 승객을 어장(해면 및 농림수산 대신이 정하는 내수면에 속하는 것에 한한다)에 안내하고 낚시 기타 농림수산 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어류 기타 수산동식물을 채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8조(업무개선명령)** 도도부현지사는 유어선업자의 업무운영에 관해 이용자의 안전이나 이익 또는 어장의 안정적인 이용관계를 해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유어선업자에 대해 업무규정의 변경 기타 업무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5) 환경 관련법제

### ① 자연공원법

**제24조(해중공원지구)** ③ 해중공원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는 국립공원에서는 환경대신, 국정공원에서는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해중공원지구가 지정되거나 그 구역이 확장된 때 이미 착수한 행위, 비상재해를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로서 행하는 행위나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행위로서 어구장치 기타 어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3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
2. (생 략)
3. 해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것
4. 해저의 형상을 변경하는 것

5. 물건을 계류하는 것
6. 오수나 폐수를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배수하는 것
- ④ (이하 생략)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상레저활동과 관련하여 ‘항만관리조례’, ‘수상활동규제조례’, ‘수역점용허가조례’, ‘항만시설사용조례’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많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특성에 따라 별도로 조례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 수상레저의 활성화나 진흥을 위한 육성시책을 규정한 사례는 없고, 안전관리와 관련한 규제중심의 내용이 많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있는 조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9)</sup>

조례명	목 적
武雄市 관광보트장 설치조례 (2006.3.1 제정)	<b>제 1 조(설치)</b> 본 시의 관광사업 진흥 및 시민의 레크레이션의 이용편의에 제공하기 위해 武雄市 관광보트장(이하 「관광보트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山梨県 모터보트업 적정화조례 (1977.12.22 제정, 2011.3.28 최종개정)	<b>제 1 조(목적)</b> 이 조례는 모터보트업 적정화지구에서 모터보트업자에 관한 등록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모터보트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양호한 관광레크레이션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和歌山県 마리나조례 (1995.3.20 제정, 2009.3.26 최종개정)	<b>제 1 조(설치)</b> 해양성 스포츠의 진흥 및 레크레이션 활동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和歌山県이 관리하는 항만에 마리나를 설치한다.
滋賀県 琵琶湖 레저이용 적정화에 관한 조례 (2002.10.22 제정, 2011.3.22 최종개정)	<b>제 1 조(목적)</b> 이 조례는 琵琶湖에서 레저활동에 수반한 환경에의 부하상황에 비추어 그 부하의 저감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琵琶湖의 레저이용의 적정화에 관해 현(県), 레저이용자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

9)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조례명	목 적
	확히 함과 아울러 현이 행하는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pleasure boat의 항행에 관한 규제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琵琶湖에서 레저활동에 수반한 환경에의 부하 저감을 도모하고 나아가琵琶湖의 자연환경 및 그 주변에 있어서 생활환경의 보전과琵琶湖의 양호한 이용환경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大阪北港 요트하버 (Yacht harbor)조례 (1987.3.18 제정, 2000.4.1 최종개정)	<b>제 2 조(목적)</b> 요트하버는 해양성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바다에 친숙할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北海道 pleasure boat 등의 사고방지등에 관한 조례 (2003.3.14 제정, 2010.3.31 최종개정)	<b>제 1 조(목적)</b> 이 조례는 수역에서 pleasure boat 등의 항행에 수반한 위험 및 수난사고 등을 방지하고, pleasure boat 등과 관련한 수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수역이용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현재 일본은 요트나 보트 등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 보유척수가 pleasure boat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50만척을 넘고 있고, 다수 국민이 소유하고 있다. 또한 소형선박조종사의 면허자수도 263만에 달하는 등 향후에도 소형선박을 사용한 레저활동은 국민생활에 널리 침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정비를 모색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수상레저 이용환경정비

정부에서는 수상레저의 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누구든지 안심하고 즐



거운 시설로서 수상레저를 체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시설, 기재를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 등을 수집하여 소개하는 바다역(海の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최초의 바다역이 등록되어 2012년 현재 약 135개 역이 등록되어 있으며, 바다역의 설치확대와 병행하여 그 매력향상, 활동의 활성화, 인지도 향상, 방재구난거점으로서 활용하는 등 지역과 연대한 활동의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sup>10)</sup>

## (2) 어항의 재이용

일본 전국 약 2,900개 어항은 입지적으로 레저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수상레저의 거점으로서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용에 대해 보트 등의 이용자로부터 요청이 강하다. 그러나 일부이용자의 몰지각한 이용에 따른 분쟁, 방치선 등의 문제가 장애가 되고 있어서 수상레저를 이용할 수 있는 항구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수산청과 관계자가 연대하여 pleasure boat 등의 적절한 이용을 위해 어항의 이용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 (3) 수상레저 매력발신강화

일본은 수상에 친숙한 환경의 감소와 소자화(少子化)의 진전 등의 영향으로 근래 수상레저가 축소되는 경향에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상을 보다 친숙하게 느끼도록 하는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고, 수상관련 14개 단체로 구성된 UMI 협의회와 연대하여 수상레저 종합 포털사이트를 개설하여 수상레저를 경험하지 못한 여성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sup>11)</sup>

10) 바다역은 瀬戸内해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라는 귀중한 지역관광자원을 널리 발신함으로써 내해의 섬들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산업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바다역은 누구든지 가볍게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며, 자동차로 내륙으로, pleasure boat로 바다로 어디든지 접근할 수 있는 마린레저거점이다. 여기에는 방문자를 위한 임시계류시설, 화장실, 수상레저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한 시설 이외에 호텔이나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춘 곳도 있으며, 지역관광을 도모로서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임대보트 등을 이용한 크루징이나 각종 수상이벤트의 개최, 해산물등의 판매, 지역어선등을 활용한 어업체험 등도 할 수 있다. [http://www.mlit.go.jp/maritime/senpaku/Sea\\_station/index.html](http://www.mlit.go.jp/maritime/senpaku/Sea_station/index.html)

11) <http://www.uminikou.com>

#### (4) 각종 안전대책의 추진

pleasure boat에 따른 인명사고나 물건의 훼손 등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홍보물을 작성하여 소형선박에 관한 안전캠페인과 pleasure boat 보험가입 촉진으로 위한 홍보를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pleasure boat와 수상오토바이 등을 조종하는데 있어서 구명동의의 착용 등을 의무화하는 등 소형선박의 준수사항의 계몽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미니보트(길이 3미터, 기관출력 1.5kw 미만으로서 검사나 면허가 불필요한 보트)의 안전한 이용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미니보트의 기술적 요건의 정리, 안전교육의 실시, 안전정보의 제공방법 등에 검토를 하고 있다.

#### (5) 방치선박 대책

현재 일본에서는 항만, 하천, 어항에 있는 방치선 문제에 대해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방치선이 선박의 항행장애와 경관 악화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방치선의 감소대책에 부심하고 있으며 pleasure boat의 절반이 방치선으로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2011년에 방치선대책을 가속화하고 방치선의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수역의 이용환경개선과 지역진흥을 목적으로 한 ‘pleasure boat의 적정관리 및 이용환경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sup>12)</sup>

#### (6) 소형선박 등록제도 점검

소형선박의 항행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형선박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등록사항인 총톤수는 선박의 안전, 환경을 필두로 다양한 법률의 적용기준으로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해사관련 법령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즉시에 출입검사 등을 하여 적정한

12) [http://www.mlit.go.jp/kowan/kowan\\_tk6\\_000011.html](http://www.mlit.go.jp/kowan/kowan_tk6_000011.html)

톤수의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적절하게 받지 않는 소형선박이 매년 상당수 증가하고 있어서, 2011년에는 마리나, 항만 등에서 선박검사제도의 주지홍보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선박검사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 II. 독일의 수상레저관련 정책동향과 법제<sup>13)</sup>

### 1. 개 설

독일은 약 10,000km에 달하는 수로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유럽지역에서 보트나 선박의 운행이 가능한 모든 내륙수로의 약 4분의1에 달하는 수치이다. 또한 북해와 발트해에 걸친 23,000km<sup>2</sup>에 달하는 해로와 카누와 조정경기용 보트를 운행할 수 있는 바다와 유수(流水)도 다수 가지고 있다. 이러한 수역(Gewässer)에서 발생하는 교통과 각종 스포츠 활동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관광레저적 성격의 활동들이다. 독일의 경우 전체인구가 약 8천백만 명인데, 이 중에서 약 2백만명이 수상스포츠협회에 가입해 있고, 약 2천만명이 매년 독일의 수역에서 휴가나 휴식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sup>14)</sup> 수상스포츠 포럼(Forum Wassersport)에 따르면, 독일 전체 운동경기용 수상기구 중에서 수상스포츠와 관련된 기구(선박, 카누, 보트 등)가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한다.<sup>15)</sup> 독일연방교통부는 독일 전역에 750,000대의 (스포츠용 및 휴가용) 보트와 800대가 넘는 여객선이 있다고 보고한 적이 있다.<sup>16)</sup>

수상레저에 관한 이상과 같은 기초적인 인식에 터 잡아 독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수상레저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과 이에 기초한 정책

13) 이 부분은 이진국, **독일의 수상레저관광 실태와 정책동향**, 수상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2012.9.25)의 부분을 필자의 양해를 얻어 정리, 소개한 것이다.

14) Tourismusverband Mecklenburg-Vorpommern, **Mecklenburg-Vorpommern federführend bei neuem Bundesprojekt für Wassertourismus in Deutschland**, Pressemitteilung vom 2011.5.2. Rostock, 2011.

15) Forum Wassersport, **Sportboote größte Verkehrsgruppe auf deutschen Wasserstraßen**, Pressemitteilung des Forum Wassersport zur boot 2011 (Düsseldorf 26.1.2011), Berlin 2011.

16) Deutscher Bundestag, **Verkehrsinvestitionsbericht 2010**, BT-Drs. 17/4980 v. 1.3.2011.

들이 쏟아져 나왔다. 독일에서는 2003년에 처음으로 독일 전역의 수상레저에 관한 실태분석이 이루어졌고, 이 실태분석을 통하여 수상레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된 적이 있다.<sup>17)</sup> 독일 연방의회는 2003년의 실태분석을 토대로 2008.10.15 연방정부에 대하여 “독일에서 수상레저관광을 위한 기반시설과 마케팅의 개선”에 관한 제안<sup>18)</sup>을 발표하였다.

총 12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된 이 제안에서 연방의회는 연방정부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①수상레저관광에 관한 프로젝트와 관련한 주, 자치단체, 게마인데 간의 정보교류를 활성화시킬 것, ②스포츠보트에 적합하고 환경친화적인 관점에서 이용자 대기장소를 재건축할 것, ③성수기에 이용자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④수로에 대한 기반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스포츠단체 또는 수상스포츠단체를 참여시키고, 이 단체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것, ⑤환경친화적 수상레저관광을 고려하는 가운데 연방교통부가 제작한 “내륙수로에서의 수상스포츠시설 구축방안”(Empfehlungen für die Gestaltung von Wassersportanlagen an Binnenwasserstraßen)을 시행할 것, ⑥연방수로의 교통표지판에 대한 단일의 체계를 구성할 것, ⑦연방이 관리하는 수로를 주나 자치단체에 이전함에 있어 연방이 그 재정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할 것, ⑧수상스포츠시설에 대한 허가에 연방, 주, 자치단체가 관여함으로 인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상스포츠시설에 대한 허가절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정기구를 설치할 것, ⑨수상레저관광을 진흥하고 이를 위하여 기존의 정보제공체계들을 연방전역의 마케팅전략에 통합시킬 것, ⑩독일관광협회와 협력하여 현존하는 정보제공체계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 ⑪연방전역의 수상레저관광에 관한 공급의 추이를 개선할 가능성을 활용하고 수상레저관광과 주 차원의 관광상품과 결합시키도록 진흥할 것, ⑫수상레저관광 기반시설에 필요한 조치를 환경친화적으로 시행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독일연방의회의 제안과 독일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노력으로 2012년 현재 독일에서는 수상레저관광의 마케팅전략을 중심으로 수상레저관광을 활성화

17) Hamburg Messe und Congress GmbH/DTV, **Grundlagenuntersuchung Wassertourismus in Deutschland, Ist-Zustand und Entwicklungsmöglichkeiten** (Bearbeitung: BTE, dwif), Bonn, Hamburg, 2003.

18) Deutscher Bundestag, **Infrastruktur und Marketing für den Wassertourismus in Deutschland verbessern**, BT-Drs. 16/10593 v. 15.10.2008.

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 가장 일반화된 수상레저관광의 유형은 보트관광이다. 여기서 수상레저관광과 수상스포츠의 구분이 문제로 된다. 독일에서는 수상레저관광의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보트를 모터화된 보트인지 무동력 보트인지를 구별하고 있으며, 보트의 유형도 아래와 같이 구별하고 있다.

<스포츠보트 유형별 제원><sup>19)</sup>

보트유형	최대 길이 (m)	최대 넓이 (m)	최대 흘수 (m)
카누(카약, 캐나다식 카누)	6.50	2.10	0.20
경주용캐나다식 카누	7.00	1.90	0.30
경주용3인승보트	14.50	1.80	0.35
조정(싱글·더블서틀, 무타페어, 유타·무타포어)	11.00	7.00	0.25
조정(에이트)	17.00	7.00	0.25
돛대없는 보트	12.00	8.00	0.35
경주용14인승용보트	12.00	6.80	0.35
세일보트	10.00	3.00	1.50
세일요트	20.00	5.50	2.00
모터고무보트	7.50	2.80	0.80
돛대없는 소형보트 (Motorboot offen)	6.00	2.50	0.80
돛대있는 소형보트 (Motorkajütboot)	20.00	5.50	1.80

이미 “스포츠보트”라는 개념을 통하여 수상레저관광과 수상스포츠간의 엄격한 구분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래 관광이란 정규적인 것이 아니라 예컨대 휴가나 소풍 등과 같이 비정규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을

19)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au und Stadtentwicklung(Hrsg.), **Richtlinie für die Gestaltung von Wassersportanlagen an Binnenwasserstraßen(RiGeW), Anlagen zur Überwindung von Fallstufen, Einsatz- und Anlegestellen**, Berlin, 2011, S.7.

의미한다. 또한 관광과 스포츠를 구분할 본질적인 개념요소는 관광활동의 경우 통상적인 업무영역이나 주거영역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독일의 수상레저관광은 수상스포츠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의 경우 1920년대에 조직을 갖춘 수상스포츠 활동가들이 그들의 훈련일상에서 벗어나 최초로 카누를 이용하여 여행을 하였고, 지금도 수상스포츠 활동가들은 수상레저관광의 형식으로 소풍을 가거나 그들의 휴가를 보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그들이 훈련시 사용하던 보트를 이용하고 있다. 기술적인 발전과 개별적인 활동들이 분화됨으로써 오늘날 오로지 여행과 관광을 위해서만 활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보트들이 양산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트와 관련한 스포츠활동과 관광활동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상레저관광과 수상스포츠간의 구분은, 수상레저관광의 경우에는 국가,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경제활성화의 관점에서 사용가능한 수자원을 준비하고 관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반면, 수상스포츠는 그에 관련한 협회나 단체들이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 중점에 위치한다. 특히 공동으로 활용된 기반시설의 관점에서 보면, 조직화된 수상스포츠는 수상레저관광의 파트너로 이해된다.

## 2. 수상레저 관련 법제

현재 수상레저관광은 거의 모든 수면하천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마다 상이한 요건들을 정하고 있다. 특히, 모터가 달린 스포츠 보트와 여객선은 반드시 탑승시설 또는 휴게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밖의 수상레저관광과 관련한 시설도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특히 이용자와 해당 지역에 대하여 ①요트 등의 항해계획의 개시시점, ②주차원의 관광상품과의 연결, ③생태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수역환경의 조정, ④교통안전과 관광서비스를 위한 파트너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수역은 그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선박이 운행할 수 있는 수역과 운행할 수 없는 수역으로 구분된다. 선박이 운행할 수 있는 수역은 대부분 연방수로이다. 연방수로는 특히 선박교통 내지 모터보트교통을 위한 교통상의 기본설비를 의미한다. 몇몇의 주(州)에서는 주수로가 있는데, 이 주수로는 화물교통과 관련해서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대부분 오로지 관광차원의 보트교통과 여객 운송에 활용되고 있다.

연방수로는 다시금 해로(Seewasserstraßen)와 내륙수로(Binnenwasserstraßen)로 구분된다. 독일의 내륙수로는 약 7,300km에 이르고, 이 중에서 약 75%가 자연수역이며, 나머지 25%는 인공수로(Kanal)이다. 독일에서 내륙수로가 가장 많은 Brandenburg주는 934km에 달하는 연방수로 이외에 554km에 달하는 州수로도 가지고 있다. 독일에서 연방수로가 지니는 의미는 연방수로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는 점 이외에 연방수로를 통해서만 독일 지역과 인접 유럽국가들 간의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독일에서는 주도로와 마찬가지로 주수로의 경우에도 외국과의 연결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 점에서 주수로는 국제관광과 관련하여 그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별적으로 관광과 관련되는 지방의 수역으로부터 일정한 네트워크가 도출된다. 기반시설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모트보터와 돛단배는 함께 고찰할 수 있다. 관광차원에서 이용되는 돛단배는 일반적으로 모트가 달려있다.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모터보트와 돛단배는 같은 지역에서 이용된다.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바다와 해안 및 내륙수로와 자연보호차원에서 운행이 금지되어 있는 호수이다. 모터 최고출력 5PS 이상과 길이 15미터 이하의 보트는 스포츠보트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들만 운전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으로 많이 이용되지 않는 특정한 수역에서는 용선증명서 제도(Chaeterschein)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사전의 지정에 따라 특별히 허용된 수역에서는 임차인이 일정한 부담과 제한 하에 모터보트 면허증 없이도 모터보트를 이용할 수 있다.

해안의 경우 수상레저관광은 대부분 발트해에서 이용되고 있다. 북해는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하여 이용객에게 큰 매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Mecklenburg-

Vorpommern주는 얄은 만과 해안호를 가지고 있어 이용객들에게 매력을 주고 있다. 독일 내륙에서도 이용자들에게 매력을 주고 특히 돛을 달고 운행할 수 있는 대규모 호수들이 다수 있다.<sup>20)</sup> 그 밖에 수상레저관광에 적합한 호수로는 Bodensee, Chiemsee, Steinhuder Meer, Zwischenahner Meer 등이 있다.

한편, 모터를 이용하지 않은 수상운행기구 중에 카누는 수상레저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카누관광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지속적인 성장세를 띠고 있다. 수상레저관광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조용하고 자연친화적인 수역을 선호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수로, 특히 인공수로의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해변의 경우 예컨대 얄은 만이나 해안호와 같은 보호지역이 수상레저관광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미 일반에 노출되어 있는 수역은 카약이용자들의 일부 적은 그룹만 이용하고 있다.<sup>21)</sup>

독일 수로의 사용에 관한 법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전체적으로 독일의 해운과 수운 관련법은 “내륙수운법(Binnenschiffahrtrecht)”과 “해운법(Seeschiffahrtrecht)”으로 구분된다. 이 두 가지 분야에서는 다양하고, 각각의 장소적 영역에 특유한 교통관련 규정이 있는데, 이들 교통관련 규정들의 일차적인 목표는 사람, 환경 및 재화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데 있다. 연방의 내륙수로 분야에서만 독립적으로 “내륙수운 경찰법규명령”, “라인강수운 경찰법규명령”, “모젤강수운 경찰법규명령” 및 “도나우강수운 경찰법규명령”이 있고, 각 지역별로 이러한 경찰법규명령을 보충하는 규정들이 있다. 개별 주는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수역에 대한 고유한 “주수운 경찰법규명령”을 규정해두고 있는데, 이들 법규명령은 육로에서의 도로교통법상의 단일한 규정과는 달리 수상스포츠를 위한 보트 등의 운행과 관련하여 매우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다.

20) 예컨대 Müritz(Mecklenburg-Vorpommern주), Plauer See Mecklenburg-Vorpommern주), Kummerower See (Mecklenburg-Vorpommern주), Schweriner See(Mecklenburg-Vorpommern주), Werbellinsee(Brandenburg주), Wannsee(Brandenburg주), Müggelsee(Brandenburg주) 등이 대표적이다.

21) 독일에서 카누관광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는, ① Mecklenburg-Vorpommern주의 Feldberger See를 포함한 소규모 호수지역들과 Brandenburg주 북부에 위치한 수역들, ② Brandenburg주 Spreewald 지역, ③ Schleswig-Holstein주의 Schewentine- Holsteinische Schweiz, ④ Niedersachsen주의 Lüneberger Heide에 있는 Heide강과 Ostfriesland 및 Hase, ⑤ Hessen주와 Thüringen주의 Fulda, Werra, Weser, ⑥ Hessen주와 Rheinland-Pfalz주의 Lahn강, ⑦ Bayern주의 Altmühl호수, ⑧ Baden-Württemberg주의 Donau강, ⑨ Nordrhein-Westfalen주의 Lippe, Niers 및 Erms, ⑩ Sachsen-Anhalt주의 Saale-Unstrut 등이다.



독일 내에서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수역에 적용되는 국제교통법은 모든 교통 참가자들에게 구속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북해와 발트해에서는 독일의 해운법 이외에 국제규칙도 적용된다. 그러나 국내적 영역에서 이러한 국제규칙들은 국내법규(즉, 해운교통법 또는 Emsmündung 항해교통법<sup>22)</sup>)가 별도의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해운교통법(Seeschiffahrtstrassenordnung)”은 Emsmündung과 Ledamündung 지역을 제외하면 모든 해운교통에 적용된다.

그 밖에 국립공원과 자연보호지역에 대한 특별한 운행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한 식물지나 동물지를 보호하기 위한 운행 내지 항해 금지규정이 있는데, 이 금지규정은 국립공원과 자연보호지역에서의 체류와 관련하여 장소적·시간적인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내륙수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이외에 개별적인 수로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한 지역적 차이도 있다. 또한 개별적인 내륙수로에서의 소규모 선박이나 스포츠용 선박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별도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라인강, 모젤강, 도나우강 이외의 강에서의 내륙수로에 대한 교통규정은 직업적 운행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위한 보트 등의 운행에도 적용되고, 1998.10.15 부터는 추가적으로 아래에서 언급하는 규정들도 적용된다.

① 특정한 호수와 호수와 유사한 지역에서는 야간에 모터가 달린 스포츠기구를 운행할 수 없고 운행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운행선로를 벗어날 수 없다.

② 독일의 강에서 기계로 작동하는 소규모 운행기구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최고속력제한이 따른다. 일반적으로 시속 7~16km의 속력으로 운행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길이가 8.5km에 달하는 연방수로인 Rhein-Kleve 수로와 Neckar강에서는 시속 5km, Saale강의 Schleusen수로는 시속 18km의 제한이 있다.

③ 기계추진력에 의하여 운행되는 스포츠용 선박의 경우 호수나 해안과 인접한 보호지역 외부에서는 시속 25km이다. 여기서 호수나 해안과 인접한 보호지역이란 호수나 해안에서 평행하게 이어진 1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22) Emsmündung해운교통법이란 1986.12.22.자 Emsmündung 지역에서의 해운교통질서에 관한 네덜란드 정부와 독일 정부간의 협약 부속의정서 A가 발효됨에 따라 독일 국내에서 1989.8.8. 자 Emsmündung해운항해질서의 도입에 관한 법규명령을 통하여 발효된 것이다.

④ 20미터 이하의 소규모 운행기구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달 의무가 있다. 다만, 초소형 운행기구의 경우에는 번호판을 달 의무가 없다. 번호판은 물과 항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 독일일반자동차클럽협회(ADAC), 독일모터요트협회와 독일범선협회 등에서 교부한다.

그리고 독일에서 스포츠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트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스포츠보트 운전면허증은 내륙스포츠보트운전면허증과 해양스포츠보트운전면허증의 두 종류가 있다. 독일에서는 연방수로에서 모터 최고출력 5PS(3.8 kW) 이상과 길이 15미터 이상의 스포츠보트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륙스포츠보트운전면허증(Sportführerschein Binnen)이 있어야 한다. 다만, Boden호수의 경우에는 특별허가가 필요하다. 운전면허증 심사는 공적인 심사위원회에서 행해진다. 독일 연방수로에서 스포츠보트 운행을 위한 최저연령은 16세이고, 돛단배(범선)를 운행하기 위한 최저연령은 14세이다.

한편, 해양스포츠보트운전면허증(Sportbootführerschein See)은 해안에서 스포츠보트를 운행하기 위한 요건이지만 바다에서 돛을 달고 운행할 수 있기 위한 고도의 지식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해양스포츠보트운전면허증은 내륙에서는 효력이 없다. 해안에서 돛을 단 요트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기 위서는 광범위한 이론과 실무를 통한 모든 기초가 요구되는 스포츠연안항해증명서(Sportküstenschifferschein)이 필요하다.

스포츠연안항해증명서는 모든 주의 해안과 인접한 12해리 이내에서 유효하다. 물론 스포츠연안항해증명서는 국가적으로 강제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내 및 외국 용선회사에서 보트를 대여할 때 스포츠연안항해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스포츠연안항해증명서는 해양스포츠보트운전면허증과 스포츠항해증명서(Sportseeschifferschein) 및 스포츠원양항해증명서(Sporthochseeschifferschein)간의 연결고리를 구성한다. 스포츠연안항해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최저연령은 16세이며, 스포츠연안항해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스포츠항해증명서 및 300해리 운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스포츠항해증명서는 주로 해안지역에서 요트, 훈련선 및 전통선박을 운행하는데 사용되며, 북해, 발트해, 지중해 및 대서양에서 해안으로부터 30해리까지

운행하는데 사용된다. 스포츠항해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16세 이상이라는 사실 이외에 100해리 이상 운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반해 스포츠원양항해증명서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증명서로서 신청자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1000해리를 운행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이론시험에 합격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스포츠원양항해증명서는 주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교육용요트와 교육용보트를 운전하기 위하여 활용된다.

한편, Mecklenburg-Vorpommern주와 Brandenburg주 및 Saarland주에는 2000년 이후로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지만 안전에 대한 특정한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용선증명서 내지 임대증명서만 가지고도 스포츠보트를 운행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이들 세 개의 주가 수상레저관광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용선증명서 내지 임대증명서는 배의 길이가 13미터 이하이고 시속 12km를 초과하지 않는 임차된 스포츠보트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임차된 스포츠보트는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용선증명서 내지 임대증명서의 발급요건은 각각의 스포츠보트에 대한 운전능력에 대한 시험과 운행할 수로 및 교통신호에 대한 기본지식의 보유 여부이다. 여기서 용선증명서 내지 임대증명서는 증명서의 소지자가 스포츠보트의 운행에 관한 확실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사안에서 스포츠보트를 운행할 수 있다는 능력에 관하여 공적으로 승인한 증명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 3.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독일 연방정부에서 수상레저관광을 관할하는 부처인 연방경제기술부는 “마케팅주도적 수상레저관광”(Marketinginitiative Wassertourismus)이라는 정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일부 선별된 수상스포츠활동에 대한 수요가 독일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독일 국민의 대다수가 일상생활이나 소풍 또는 휴가기간에 수상레저관광을 이용한다는 것은 수상레저

관광을 구성하는 개별적 요소들(요트이용, 모터보트이용 등)의 경제적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수상레저관광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봐도 향후 수상레저관광의 잠재적 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수상스포츠경제 중앙협회(Bundesverband Wassersportwirtschaft e.V.)는 매년 독일 수상스포츠의 수익을 조사하는데, 2010년의 경우 수상스포츠를 통하여 10억7천2백6십 유로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 수치는 전년도(2009)에 비하여 약 4.7% 증가된 것이다.<sup>23)</sup> 또한 이 수치는 예컨대 보트매매, 마리나, 용선계약기업 등 수상스포츠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얻은 수익과 보트 등 이용자들의 보트이용료나 수상스포츠활동과 관련한 숙박비 및 음식대금 등 이차적 효과로 얻은 수익을 합친 것이다.<sup>24)</sup>

한편 독일의 수상레저관광은 자연보호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독일 연방환경자연보호및원자력안전부에 설치된 “스포츠와 환경”연구그룹은 이미 1998년에 “스포츠의 지속적 발전으로 가는 길”(Wege zu einer nachhaltigen Entwicklung des Sports)이라는 입장표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sup>25)</sup> 이 보고서에는 지속적인 스포츠발전의 기본적인 세 가지 기준들 이외에 스포츠와 자연 및 주거공간간의 갈등잠재력, 각각의 자연공간적인 잠재력의 보호필요성 및 개별적인 스포츠활동들간의 구분 등에 관하여 개관한 핵심적인 정책분야들이 언급되어 있다.

이 보고서의 목표는 개별적인 공간타입에서 휴양을 위한 풍경을 기능적으로 구분(예: 완전한 자연보호구역, 스포츠활동이 가능한 구역 등)하여 스포츠활동을

23) Bundesverband Wassersportwirtschaft e.V.(BVWW), **Daten und Fakten zur Lage der maritimen Wirtschaft in Deutschland**, Köln, 2010.

24) 한편, 2004년과 2006년에 보덴호수(Bodensee)에서의 수상스포츠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두 건의 연구는 관련 공공기관, 호텔, 식당 등에서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적이 있다. 비교적 보수적으로 고용효과를 분석한 이 연구에서는 보덴호수를 둘러싼 각각의 지역마다 수상스포츠와 수상레저관광으로 인하여 최소한 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1년 동안 총 3,64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추산하였다. Institut für angewandte Wirtschaftsforschung e.V.(IAV), **Der Wassersport am Bodensee als wirtschaftlicher Faktor - eine empirische Analyse der Angebotsseite**, Tübingen, 2006. 그리고 Mecklenburg-Vorpommern주에서는 2008년에 수상레저관광을 통하여 총 7,1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수치를 금액으로 따지면 4억7400만 유로의 총수익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순수익은 2억 3300만 유로이다. 이로써 Mecklenburg-Vorpommern주에서 수상레저관광은 이 주의 일차수입의 약 10%를 양산하고 있다. Ministerium für Wirtschaft, Arbeit und Tourismus Mecklenburg-Vorpommern (Hrsg.), **Entwicklungschancen des maritimen Tourismus in Mecklenburg-Vorpommern (Bearbeitung: Uni Rostock, dwif)**, Schwerin 2010.

25) Deutscher Sportbund e.V., **Naturschutz und Sport sind Partner und keine feindlichen Brüder - Erläuterungen und Empfehlungen zur Kooperation**, DSB-Dokumentation IV, Nr. 8, 2002.

각각의 자연보호의 필요성에 조응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상레저관광 지역을 입안하는 경우 자연과 수상레저관광간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을 개발하는 한편 민감한 지역을 수상레저관광지역을 할 것인지 이해집단들간에 조기에 협력을 구축하고 있다. 예컨대, 연방카누관광협회(Bundesvereinigung Kanutouristik e.V.)는 모든 회원들에 대하여 정보제공의무, 자연보호의무 등과 같은 의무를 고지하고 있다.

독일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여행국가이자 관광 국가이다. 독일 지역 자체가 관광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독일 국민 자체도 휴가와 관광을 선호하고 있다. 게다가 독일은 자연적으로 많은 수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조건과 국민의 수상레저관광에 대한 수요증가에 힘입어 독일 연방정부나 특히 수상레저관광지로 유명한 독일의 개별 주는 수상레저관광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과 개별 주는 수상레저관광의 발전과 자연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한 다양한 제안을 내 놓고 있다.

특히, 수상레저관광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① 수상레저관광과 관련한 면허증제도의 간소화, ② 수상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자연보호 관련 규정에 따른 규제의 완화와 홍보 강화 및 관련 이해단체들간의 조기의 의사소통 강화, ③ 미개척 수상레저관광시장의 개발, ④ 수로를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상레저관광 기반시설의 확충, ⑤ 수상레저관광과 관련한 종합적 서비스·편의시설의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제 3 절 우리나라의 수상레저관광 관련 법제 개관

#### I. 개 설

이미 살펴본 것처럼 현재 수상레저관광은 아직 입법정책적인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그 구체적인 개념을 확정짓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현행 법제상 수상레저관광을 명문으로 규정한 입법례도 없다. 다만, 수상레저관광과 관련하여

인접한 개념들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직접적 내지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제는 존재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도 계류되어 있는 등 넓은 의미의 레저스포츠 전반을 규율하려는 시도도 있다.

수상레저관광의 사회적·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입법정책적 당위요소는 첫째, 국민의 여가시간의 증대와 새로운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에의 대응 둘째, 새로운 지역진흥정책 전개에의 필요성 셋째, 내수의 확대이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요청에 부응하여 국민 어느 누구도 이용할 수 있는 잠재형으로서 또한 종합적인 기능을 구비한 수상레저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적 요소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지역진흥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정책적 당위요소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관광의 도입에 수반하여 야기되는 문제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즉, 수상레저관광이라는 정책의 도입에 즈음하여 관련되는 현행 법제와의 관계를 여하히 조화·조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검토하여 현행 법제의 재구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상레저관광은 하천 등 자연공물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자연공물의 이용과 관리를 규율하고 있는 관련 법제를 검토하는 한편 자연환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들 법제와의 관계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수상레저관광은 수상레저기구를 활용하는 활동이므로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리를 위한 이른바 경찰권의 작용에 따른 규제적인 법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법제에서 규율하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해 규제의 합리화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규제가 개선되어야 수상레저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도 모색되어야 한다.

수상레저관광과 관련하여 유관 부처에서도 부처의 소관정책을 가시화하기 위해 수상레저와 관련된 법제를 선도적으로 개편하여 관련 정책의 주도권을 가지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수상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의 정책영역을 명확하게 하고 각 부처 소관 관련 법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상레저관광의 기반이 구축되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수상레저관광과 관련한 법제유형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 [ 수상레저관광 관련 법제유형 ]

유 형	법률명	소관부처
수상레저관광 활동장소 관련 법제	하천법	국토해양부
	소하천정비법	소방방재청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토해양부
	수산업법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자원관리법	농림수산식품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수상레저관광 기구 관련 법제	수상레저안전법	해양경찰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선박법	국토해양부
수상레저관광 인프라구축 관련 법제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농어촌정비법	농림수산식품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국토해양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행정안전부
	어촌·어항법	농림수산식품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토해양부
	연안관리법	국토해양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소방방재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유 형	법률명	소관부처
	항만법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국토해양부
수상레저관광 안전관리 관련 법제	개항질서법	국토해양부
	수난구호법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	해양경찰청
	해사안전법	국토해양부
기타 관련 법제	레저스포츠진흥 기본법안	의원발의
	레저스포츠 활성화 관한 법률안	의원발의
	수상레저활동 관련 자치법규	무주군 등 6개
	해양레저산업 관련 자치법규	진해시 등 6개

## II. 수상레저관광 활동장소 관련 법제

현행 법제상 수상레저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와 관련되는 법제유형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우선, 수상레저관광이 기본적으로 ‘수상(水上)’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수상의 의미를 규정한 법제유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률명	수상의 의미	비 고
유선 및 도선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상을 내수면과 해수면으로 정의</li> <li>- 내수면 : 하천, 댐, 호수, 늪,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淡水)와 기수(汽水)의 수류(水流) 또는 수면</li> <li>- 해수면 : 바다의 수류나 수면</li> </ul>	소방방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배제</li> <li>-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li> <li>-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li> </ul>	



법률명	수상의 의미	비 고
	- 「낙시어선업법」에 따른 낙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수상레저 안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상을 해수면과 내수면으로 정의</li> <li>- 내수면 :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li> <li>- 해수면 : 바다의 수류나 수면</li> </ul>	해양경찰청
내수면 어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배제</li> <li>-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도선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li> <li>-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li> <li>- 「낙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낙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li> </ul>	농림수산 식품부

위와 같이 현행 법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상의 의미를 “내수면”과 “해수면”으로 구분하고, 내수면은 ‘하천, 댐, 호수, 늪,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淡水)와 기수(汽水)<sup>26)</sup>의 수류(水流) 또는 수면’, 해수면은 ‘바다의 수류나 수면’으로 정의하고 있다. 내수면과 해수면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이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으나, 일단 수상레저관광의 활동장소로서의 내수면과 해수면은 위의 일반적 정의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sup>27)</sup>

26) “기수”란 바닷물과 강물이 섞여 있는 곳에서 소금의 양이 바닷물 보다 적은 물을 말한다. 기수가 흐르는 지역을 기수역이라 하는데 보통 강의 하구에서 부터 2~3km정도의 범위를 가리킨다.

27) 한편 법제처의 해석례(법제처 08-0279, 2008.10.29)에 따르면,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내수면의 정의에 대해, “내수면이란 인공적으로 조성되었는지 자연적으로 조성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육지측에 형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으로서 수상레저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모두 내수면으로 보아야 하며, 여기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류 또는 수면이란 반드시 저수를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그렇다면 수상레저관광을 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내수면과 해수면과 관련되는 법제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 형	법률명	소관부처
내수면과 관련되는 법률	하천법	국토해양부
	소하천정비법	소방방재청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토해양부
해수면과 관련되는 법률	수산업법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자원관리법	농림수산식품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내수면, 해수면과 관련되는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 1. 내수면과 관련되는 법률

### (1) 하천법

하천은 대표적으로 수상레저관광활동이 가능한 장소이다. 현행 「하천법」상의 “하천”이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으로서, 하천구역(「하천법」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과 하천시설(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하천법」에 따른 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자연영조물로서의 하천은 원래 이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고,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간단한 방법

의하여 형성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채광이 중지된 광산의 갯도는 저수를 위한 시설은 아니나 갯도를 굴진(掘進)하면서 지하수가 흘러나와 자연스럽게 갯도 안에 상당한 깊이의 수면이 형성되었다면 그러한 수면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수면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다.

으로 위험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유수라고 하는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유수의 원천인 강우의 규모, 범위, 발생시기 등의 예측이나 홍수의 발생 작용 등의 예측이 곤란하고, 실제로 홍수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실험에 의한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고 실제 홍수에 의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과거의 홍수 경험을 토대로 하천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특질이 있고, 또 국가나 하천관리청이 목표로 하는 하천의 개수작업을 완성함에 있어서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대규모 공사가 되어 이를 완공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그 관리상의 특수성이 있다.<sup>28)</sup> 따라서 하천은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로 하여금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제4조제1항).

기본적으로 「하천법」상의 하천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에서 따라 하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천법」상 규정된 하천의 점용이라 함은 하천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하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의미한다.<sup>29)</sup> 따라서 수상레저관광을 위해 하천을 사용하는 것은 하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에 해당한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하천법 시행령」에서는 스케이트장,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을 설치하는 행위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법 률	시행령
<b>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b>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b>제35조(하천의 점용행위 등)</b> ① 법 제33조 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28)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1다48057 판결 참조.

29) 대법원 1990.2.13. 선고 89다카23022 판결 ; 1991.4.9. 선고 90누8855 판결 ; 2002.10.25. 선고 2002두5795 판결 등 참조.

법 률	시행령
<p>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지의 점용</li> <li>2. 하천시설의 점용</li> <li>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li> <li>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li> <li>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li> <li>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li> </ol> <p>② (생 략)</p> <p>③ (생 략)</p> <p>④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li> <li>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li> <li>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li> <li>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li> <li>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li> <li>3.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li> <li>4. <u>스케이트장,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u></li> <li>5.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li> <li>6.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li> </ol> <p>② 제1항제3호에서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도선</li> <li>2. 「선박법」에 따른 부선</li> <li>3.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li> <li>4. 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li> </ol>

법 률	시 행 령
<p>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p> <p>⑤ ~ ⑧ (생 략)</p>	<p><b>제36조(하천점용허가의 금지)</b> ① 법 제3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 3. (생 략)</p> <p>②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관리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1. ~ 5. (생 략)</p> <p>③ 법 제33조제4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구조물의 구조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p> <p>④ 법 제3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lt;개정 2009.11.16&gt;</p> <p>1. 하천의 비탈면 및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 식물을 채취는 행위</p> <p>2. <u>선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또는 선박운항 구간이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또는 물놀이 행위</u></p> <p>3.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p> <p>4.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p>

## (2)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해 지정·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한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하는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 하천 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점(始點)에서 종점(終點)까지의 전체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다만, 재해 예방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하천으로 지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하천정비법」에서 의미하는 일시적이 아닌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 하천 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점(始點)에서 종점(終點)까지의 전체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소하천이 수상레저관광활동이 가능한 것이라면 이들 소하천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관리청의 점용허가가 필요하다.

법 률	시행령
<b>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b> ① 소하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수(流水)의 점용</li> <li>2. 토지의 점용</li> <li>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li> <li>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li> <li>5.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li> </ol>	<b>제11조(점용 등의 허가 범위)</b>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농의 목적으로 유수 및 토지를 관습적으로 점용하거나 소하천부속물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li> <li>2. 주민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유수 및 토지와 소하천부속물을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경우</li> </ol>

법 른	시행령
<p>6. 토석(土石)·모래·자갈·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p> <p>7. 소하천을 더럽히거나 손상하는 행위</p> <p>② ~ ④ (생 략)</p> <p>⑤ 제3조에 따른 소하천의 지정·고시 당시 그 소하천구역에서 소하천부속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그 소하천의 지정·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⑥ ~ ⑦ (생 략)</p>	<p><b>제12조(점용 등의 신고)</b>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관리청에 점용 등을 신고하는 자는 이장, 통장 또는 인근 토지의 이용자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p>

### (3)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餘水路)·보조댐과 그 밖에 해당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포함한다(제2조제1호). 또한 ‘다목적댐’

이란 국토해양부 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은 제외)을 말한다(제2조제2호).

이들 댐에서도 수상레저관광이 가능한 곳으로서 기능하며 동 법 제7조제1항에서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발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제1항제11호). 아울러 동 법에서는 댐의 효용증진과 댐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제18조의2에서는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식공간의 조성, 체육시설의 설치 등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 법 제44조의2에서는 다목적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댐관리청과 협의하여 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의 호수·늪 및 주변경관을 활용한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수상체육시설 등 휴양·문화·여가활동 등을 위한 공간(친환경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률	시 행 령
<b>제18조의2(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b>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수피해, 교통불편 등을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사업	<b>제18조의2(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b>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18조의2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나 댐사용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법 률	시 행 령
<p>2. 휴식공간의 조성, 체육시설의 설치 등 담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p> <p><b>제44조의2(담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b>          ① 제41조와 제43조에 따른 다목적담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담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의 호수·늪 및 주변경관을 활용한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수상체육시설 등 휴양·문화·여가 활동 등을 위한 공간(이하 “친환경공간”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u>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담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담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p>	<p>2. 사업시행기간          3. 재원조달방법          ② 담수탁관리자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담의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미리 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b>제45조의2(담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b>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다목적담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의 명칭</li> <li>2. 사업의 목적 및 개요</li> <li>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li> <li>4. 사업시행기간</li> <li>5. 재원확보계획</li> <li>6. 사업시행에 따른 수질영향 분석 및 환경피해 감소대책</li> </ol>

#### (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친수구역”이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100분의 50) 이상 포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제2조 및 제4조). 그동안 하천 주변지역은 수해

피해, 홍수범람 등 부정적인 단절된 공간으로 인식하여 재해방지를 위해 활용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으나,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가하천 정비·복원사업의 추진으로 향후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안정성이 향상되면 이에 대한 가치가 증가하고 개발·활용하려는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 특별법에서는 국가하천의 정비·복원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된 국가하천의 주변지역 중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이용할 필요가 있는 친수구역 경우에는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운영하는 친수구역 조성사업 규정하고 있으며(제12조), 이들 친수구역에서도 수상레저관광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 2. 해수면과 관련되는 법률

해수면이란 바다나 바닷가와 같은 자연적인 해수면과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으로 구분된다. 이들 해수면에서도 기본적으로 수상레저관광이 가능한 곳으로 볼 수 있으나, 이들 지역에서는 어업활동 등이 행해지는 장소이기도 하고 수산자원의 관리 등을 위해 사실상 수상레저관광이 어려운 곳이 많다.

### (1) 수산업법

「수산업법」에서는 그 적용범위를 바다, 바닷가,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으로 정의하고 있다(제3조). 바다나 바닷가와 같은 자연적인 해수면이나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이므로 수상레저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고 단지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을 위한 유어장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을 따름이다.<sup>30)</sup>

30) 「수산업법」 제65조에서는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은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6조에서도 도지사는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 (2)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은 바다, 바닷가, 어업을 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수산자원보호구역)에 적용되며, 동 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수면(수산자원의 산란, 종묘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면), 수산자원관리수면(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였거나 조성예정인 수면), 바다목장(일정한 해역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고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포획·채취하는 장소) 등에서는 수상레저관광 활동을 할 수 없다.

## (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 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등대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 한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또한 이러한 무인도서의 주변해역이란 무인도서의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으로부터 거리가 1킬로미터 이내의 바다 중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제2조제2호).

이 무인도서는 절대보전무인도서, 준보전무인도서, 이용가능무인도서, 개발가능무인도서 등이 있으며(제10조), 그 가운데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 허용되는 무인도서(이용가능무인도서)

---

위하여 「수산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어장의 일부에 대하여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에 대하여는 「수산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 및 수량,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서는 해양레저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5조제1항). 또한 해양레저활동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승인·인가 등을 받은 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5조제2항). 따라서 이용가능무인도서의 주변해역도 수상레저관광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

### 3. 내수면 및 해수면과 관련되는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유수면”의 의미를 바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바닷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제2조제1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유수면은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사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제8조제1항).

따라서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유수면을 활용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동 법률에서는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동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제3조제1항).

### Ⅲ. 수상레저기구 관련 법제

수상레저관광은 기본적으로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기구를 활용하므로, 이들 기구를 규정한 법제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상레저를 위한 기구는 요트·보트 등을 상정할 수 있지만 근래에는 이들 기구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면서 그 종류도 매우 많다.<sup>31)</sup> 수상레저기구는 종류나 무게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며, 또한 추진기관의 부착여부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현행 법제상 수상레저기구를 열거하고 있는 법제유형은 다음과 같다.

한편 수상레저관광을 위한 수상레저기구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유원시설업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유기사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sup>32)</sup>

31) 낚시도 수상레저기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제외한다. 한편 낚시의 경우에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낚시의 의미를 “낚시대와 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제1호).

32) 「관광진흥법」 제33조에서는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1항).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별표 11에서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선박법」 제26조에서는 「관광진흥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별표 11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기구를 그 적용 제외 대상 선박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바, 유원시설 내 육상 도로 및 인공 수로를 운행할 예정인 수륙양용선박이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성검사 외에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법제처 해석에서는 “수륙양용선박은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함으로써 수상 또는 수중을 운항하는 선체라는 점에서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선’에 해당하고, 인공 수로 역시 일반 수로와 마찬가지로 수상의 범주에 속하며, 관람 목적으로의 운항도 일반 레저선박이나 유람선과 같은 항행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선박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해사제도 운영 및 해상질서 유지라는 「선박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선박의 전복, 좌초, 침몰의 가능성이 전무한 경우까지 「선박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이라 보기는 어렵고, 불필요한 이중 규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관광진흥법」상의 안전성검사 등의 규제만으로도 선박에 대한 사고 및 안전, 위험성 관리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따라서 유원시설 내 육상 도로 및 인공 수로를 운행할 예정인 수륙양용선박이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기구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나, 선박의 전복, 좌초, 침몰의 가능성이 전무한 경우여서 「선박법」상 선박의 항행으로 보기가 어렵고, 「관광진흥법」상의 안전성검사 등의 규제만으로도 선박에 대한 사고 및 안전, 위험성 관리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였다(법제처 12-0369, 2012.7.19).

법률명	관련조문	소관부처
수상레저안전법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3.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4.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해양경찰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3. “마리나선박”이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보트 및 요트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국토해양부
선박법	<p><b>제26조(일부 적용 제외 선박)</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 7. (생략)</p> <p>8.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모터보트·고무보트 및 요트</p>	국토해양부

### 1.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정의하고(제2조제3호),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수상레저기구 유형	관련 법령
①모터보트, ②동력요트, ③수상오토바이, ④고무보트, ⑤스쿠터, ⑥호버크래프트, ⑦수상스키, ⑧패러세일, ⑨조정, ⑩카약, ⑪카누, ⑫워터슬레드, ⑬수상자전거, ⑭서프보드, ⑮노보트	시행령 제2조제1항
①무동력 요트, ②윈드서핑, ③웨이크보드, ④카이트보드, ⑤케이블 수상스키, ⑥케이블 웨이크보드, ⑦수면비행선박, ⑧수륙양용기구, ⑨그 밖에 영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	시행규칙 제1조의2

한편 위에서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제외한 수상레저기구인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등은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정의되고 있다(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2조제2항). 이들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① 수상오토바이, ② 선내기 또는 선외기인 모터보트로서 총톤수(「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③ 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고무보트를 제외한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④ 총톤수 20톤 미만인 동력요트 등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시행령 제22조).

동력수상레저구에 대한 등록제도의 입법취지는 개인 소유의 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 있어서 관리체계가 전혀 없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수상레저구에 대하여 등록 및 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소유자는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면 등록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법령의

규정에서 실제 이용 시에 등록하도록 규정한 바가 없다. 따라서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은 해당 기구의 실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때에 해야 한다.

## 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마리나선박’을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보트 및 요트를 포함한다)으로서 정의하고, 하위 법령에서 다음 기구를 열거하고 있다.

수상레저기구 유형	관련 법령
①모터보트, ②고무보트, ③요트, ④윈드서핑용 선박, ⑤수상오토바이, ⑥호버크래프트, ⑦카누, ⑧카약, ⑨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선박과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	시행령 제3조

## 3. 선박법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서는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같은 항 제1호에 기선은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박법」 제8조제1항에서는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박법」 제26조제8호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모터보트·고무보트 및 요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등 일정 사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IV. 수상레저관광 인프라 구축 관련법제

우리나라는 수상레저관광을 위한 자연적, 지리적 여건은 양호한 편이나, 수상레저관광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망이나 수상레저관광활동을 위한 공간 및 기반시설의 조성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 수상레저관광의 개념이 여전히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도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육성시책이 구체화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수상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입법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특히, 관련 인프라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수상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상레저기구의 발달과 수상레저활동의 공간을 확대하는 한편 수상레저기구를 보트·요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서, 보트·요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위한 계류시설·수역시설·외곽시설 및 요트·보트 등 보관장소 이와 관련된 서비스시설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민간기업 등이 수상레저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 유치방안도 필요하다.

현행법상 아직 직접적으로 수상레저관광과 관련하여 관련산업이나 활동의 진흥과 관련한 규정은 없으나, 수상레저관광의 활성화와 관련되는 다양한 정책을 규정한 법제유형은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 법제유형에서 규정한 내용을 검토하여 수상레저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법률명	관련조문	소관부처
관광진흥법	<p><b>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b>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 화사업</u></li> <li>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 화사업</li> <li>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li> <li>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li> </ol>	문화체육 관광부
농어촌정비법	<p><b>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b>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자원 개발</li> <li>2. <u>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육성</u></li> <li>3. 농어촌 관광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li> </ol> <p>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농림수산 식품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p><b>제28조(해양관광산업의 진흥)</b> ① 해안권과 관련된 시·도지사는 해안권 해양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해안권 해양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p>	국토해양부

법률명	관련조문	소관부처
	1. 해양관광자원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조치 2. <u>해양환경 보호 및 어업인의 해양관광산업 참여 방안</u>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관광자원의 이용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b>제17조(통일교육 및 문화·관광 시설 등에 대한 우선지원)</b>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를 안보교육과 관광, 한반도 평화 및 화해의 장으로 만들고 통일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u>관광·숙박·위락 시설 및 체육시설</u> 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어촌·어항법	<b>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b> ① 지정권자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항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는 <u>해양관광·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림수산식품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박람회 지원시설”이란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에 조성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국토해양부

법률명	관련조문	소관부처
	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시설 나. (이하 생략)	
연안관리법	<p><b>제19조(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b>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안 용도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안해역기능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제9조에 따라 지역계획으로 정한다.</p> <p>1. 이용연안해역 가. ~ 다. (생략) 라. 레저관광구: 연안에서의 레저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마. (이하 생략)</p>	국토해양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p><b>제12조(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의 지정)</b> ⑥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사업</p> <p>2.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p> <p>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에 따른 유선사업</p> <p>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사업</p> <p>5.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낙시어선업</p> <p>6.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단지조성사업</p> <p>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p>	소방방재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b>제175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b> ①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 및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법률명	관련조문	소관부처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산업 및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항만법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p> <p>라.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p> <p>(1) <u>낙시터, 유람선, 낙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시설</u></p> <p>7. “항만배후단지”란 항만구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제42조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p> <p>가. 1종 항만배후단지: <u>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u></p> <p>나. 2종 항만배후단지: 항만구역(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한 항만구역을 제외한다)에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p>	국토해양부

법률명	관련조문	소관부처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피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b>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b> ① 정부는 국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u>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스포츠(이하 이 조에서 “해양관광”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u> ② (이하 생략)	국토해양부

## 1. 관광진흥법

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사업의 종류로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규정하고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제3조제3호가목). 넓게 보면 수상레저관광도 이들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하위 법령(대통령령)에는 수상레저관광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48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①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②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③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④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8조제4항).

## 2.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는 ‘농어촌정비사업’으로서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16호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으로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 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5조에서는 농어촌 생활환경정비계획에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공단지 등 농어촌산업 육성 및 다른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제9호)를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제81조에서는 농림수산 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육성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2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 3.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은 2020.12.31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으로서,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제28조에서 해안권과 관련된 시·도지사는 해안권 해양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제1항), 국가는 해안권 해양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관광자원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조치, 해양환경 보호 및 어업인의 해양관광산업 참여 방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관광자원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항).

특히,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①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및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관광자원, ②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관광자원, ③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의 관광자원 등 해양 관광자원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25조에서는 시·도지사는 개발구역 안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특히, 이들 투자진흥지구에서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5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국제회의시설업 및 종합유원시설업(다만,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제조 또는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위한 투자를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33조제1항).

#### 4.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5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 종합발전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이 종합발전계획에는 서해 5도 주변 해양의 이용·개발·보전과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및 농업·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제2항제3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동 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 시설 및 체육시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5. 어촌·어항법

「어촌·어항법」에서 규정하는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면의 전 지역이나 동·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제2조제1호). 또한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법에 의해 지정·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국가어항(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지방어항(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어촌정주어항(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등으로 구분된다(제2조제3호). 또한 「어촌·어항법」에는 ‘어항시설’의 하나로 어항편익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을 포함하고 있다(제2조제5호의 다목).

특히, 법 제18조에서는 지정권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항구역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18조제1항),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는 해양관광·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①유람선(모터보트를 포함한다)·낚시어선·요트 및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용 선박 등의 계류시설 및 그 보조시설, ②바다낚시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③어촌관광 안내소, 주차장 등 관광객 편의시설, ④지역특산품 판매장, 횃집 등 어촌소득증대 또는 관광객이용을 위한 시설, ⑤숙박시설·목욕시설·오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 ⑥그 밖에 어촌관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8조제2항. 시행령 제19조).<sup>33)</sup>

33) 최근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제20조제6항을 신설하여 법 제19조제2항제4호의

## 6.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 법률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관련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박람회 개최 성과를 계승·기념하여 해양관광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의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을 전부개정하여 성립된 법률이다(시행 2012.4.27). 이 법에서는 ‘박람회 지원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제3호가목), 추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정비될 경우 이들 지원시설에<sup>34)</sup> 수상레저관광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7. 연안관리법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연안관리법」에서는 “연안”을 연안해역(沿岸海域)과 연안육역(沿岸陸域)으로 구분하고, 연안해역은 바닷가 및 바다지역, 연안육역은 무인도서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으로서 이 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한편 이 법에서는 연안정비사업의 하나로서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親水空間)을 조성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제2조제4호다목).

---

규정에 따른 레저관광개발계획에 레저관광개발의 필요성, 레저관광개발을 필요로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레저관광개발을 필요로 하는 어항시설의 배치계획, 레저관광개발을 필요로 하는 기본시설의 표준단면, 레저관광개발을 필요로 하는 어항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레저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에 법 제21조제1항의 취지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통해 레저관광개발계획에 따른 레저관광의 진흥 및 육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4)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박람회 지원시설로서 ①유람선, 모터보트, 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 ②여객터미널 및 그 부속시설, ③해양생태계 및 습지 보전·이용시설, ④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녹지 및 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⑤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박람회 대체숙박시설로 활용할 목적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안용도해역의 기능을 증진·보완하고 연안해역을 합리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이용 상태 및 기능에 따라 법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하는 연안해역을 연안해역기능구로 규정하면서(제2조제6호),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안해역기능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9조제1항). 이들 연안해역기능구는 이용연안해역, 보전연안해역 및 특수연안해역, 관리연안해역으로 구분되며(제15조) 특히, 연안해역 중 이용 또는 개발이 확정되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발 행위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해역인 이용연안해역에 레저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레저관광구)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9조제1항라목).

#### 8.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현행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저수지·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로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댐,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저수지<sup>35)</sup>,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댐 및 저수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여수로(餘水路)·보조댐, 그 밖에 해당 저수지 또는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로 규정하고 있다.

35)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서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서 ‘저수지,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을 규정하는 한편 여기서 ‘저수지’를 “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홍수위 :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로서 정의하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령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490호, 2012.6.28, 일부개정) 제121조에서는 ‘저수지’를 “발전용수·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 또는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한 댐·제방 그 밖에 당해 댐 또는 제방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높이는 시설 또는 공작물과 공유수면”으로 규정하고, 제122조에서는 저수지에 대한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기본적으로 저수지·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법 제12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저수지·댐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여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른 용도로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조제1항). 아울러 위 정비기본계획에는 투자비 환수를 위한 부대사업계획(제12조제2항제5호)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부대사업의 종류로서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다(제12조제6항제2호).

#### 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법」 제175조에서는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 및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제1항), 국가는 수상레저산업 및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2011.10.12 제정, 조례 제798호)를 마련하여 ‘해양레저산업’을 해양레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제조·수리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을 포함한 해양레저 관련 제반 산업으로 규정하고(제2조제2호), 도지사로 하여금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양레저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또한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마리나항만시설 조성(제13조), 해양레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제14조),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해양레포츠 대회 및 관련 전시회 등 개최(제15조), 선수 등 육성(제16조), 해양레저산업관련 단지조성(제17조), 해양레포츠스쿨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제18조 및 제20조), 보조금 등의 지원(제2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 10. 항만법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제2조제1호). 이 항만에는 무역항(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과 연안항(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 구분되며 특히, 연안항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안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국가관리연안항(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과 지방관리연안항(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제3항).

또한 「항만법」에서는 항만구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낚시터,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항만배후단지를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1조).<sup>36)</sup>

36) 항만배후단지에는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1종 항만배후단지)와 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한 항만구역을 제외하고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2종 항만배후단지)가 있다.

## 1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는 ‘해양산업’을 해운·항만·수산·해양과학기술 개발·해양환경·해양관광 및 해양정보 관련산업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고(제3조제3호), 해양산업의 육성의 일환으로서 해양관광의 진흥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제28조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개선,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시설의 확충,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보급, 그 밖에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법 제28조제1항, 시행령 제19조),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바닷속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는 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28조제2항).<sup>37)</sup>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건전한 정서함양, 도시·어촌간의 교류 확대 및 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촌을 특성있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어촌 특화관광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법 제28조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sup>38)</sup>

37)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은 제28조 제1항에서 “해양관광의 진흥”이라는 표제하에 “정부는 국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스포츠(이하 이 조에서 “해양관광”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해양스포츠를 해양관광의 한 분야로서 다루고 있지만,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은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과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으로서 그 기본성격은 해양스포츠를 진흥하는 법이 아니라 해양자원개발법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해양스포츠를 자원개발의 한 분야인 해양관광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은 해양스포츠에 관해서는 주된 입법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양스포츠에 관한한 기본법의 지위를 가지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최철호, **해양스포츠관련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스포츠와 법 제14권1호(2011), 3면 이하 참조.

38) 이와 관련하여 2012.5.23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3.5.24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이 법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 내 어촌들의 수산자원 현황과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파악하여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제6조), 어촌

## V. 수상레저관광 안전관리 관련 법제

수상레저관광이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수상에서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법제유형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수상레저기구와 같이 대중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경우 안전은 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량사고가 되기 쉽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게 된다. 이들 안전관리법제 가운데 직접적으로 수상레저관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률명	관련조문	소관부처
개항질서법	<p><b>제5조(출입 신고)</b>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항의 항계 안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의 수역시설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계 밖의 항로, 정박지 등 수역시설(이하 “개항의항계안등”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선박(다음 각 호의 선박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거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li> <li>2. 해양사고구조에 종사하는 선박</li> <li>3. 그 밖에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li> </ol>	국토해양부
수난구호법	<p><b>제1조(목적)</b> 이 법은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p>	해양경찰청

특화발전계획에는 교류·관광·미관·휴양·레저·체험 등에 관한 특화어촌의 발전모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제3호).

법률명	관련조문	소관부처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b>제1조(목적)</b>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경찰청
해사안전법	<p><b>제34조(항로 등의 보전) ① ~ ② (생략)</b></p> <p>③ 누구든지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수역 또는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의 수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는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해상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항로나 정박지 등 해상교통 여건이 달라진 경우</li> <li>2.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li> <li>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li> </ol> <p>⑤ 제3항에 따른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국토해양부



## 1. 개항질서법

개항(開港)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개항질서법」에서는 개항의 항계(「항만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해상구역) 안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의 수역시설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계 밖의 항로, 정박지 등 수역시설에 출입하는 선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해양사고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그 밖에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도선선, 예인선, 관공선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제5조). 또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거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총톤수 5톤 이상인 수상레저기구가 항계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후 지체 없이, 항계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선 출입 신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개항질서법」, 「도선법」, 「항만법」 등 3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선박 입출항에 관한 사무를 통합한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2012.4.17 입법예고하였다.

이 법률안은 운항선박의 대형화 및 수상레저활동 증가 등 선박 입출항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수요를 반영하여 법률의 현실성을 확보하며, 지방이양 결정 사무에 대한 이양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에 대한 청취의무를 부여하여 무역항 등에 출입하는 선박의 안전운항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특히, 법률안에서는 최근 국민소득 증가 등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국내항에의 단순한 입출항시에도 매년 입출항 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요트 등이 국내항간을 운항

하는 경우에는 관제보고만 하고 입출항 신고는 면제하여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안(2012.10.4. 법제처심사필) ]

**제 4 조(출입 신고)** ① 무역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거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출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해양사고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3.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다만, 국제항해를 위해 출항하거나 외국항에서 입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 2. 수난구호법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수난구호법」에서는 조난 사고 등에 대비하여 여러 행위규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sup>39)</sup> 행위규제란 안전을 침해하거나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명함으로써 적절하고 신속하게 위해요소를 배제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예상되는 위험상황을 상정하여 그에 대비한 일반

39) 「수난구호법」은 1994.12.22 전부개정된 이후 6차례의 일부개정이 있었으나, 최근(2012.2.22 법률 제 11368호) 전부개정된 바 있다. 전부개정 이유는 국민소득의 증대 및 주5일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해양레저 인구 증가 등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수난구호활동, 조난통신, 구호업무 등의 규정들이 국내외 해양환경의 변화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다는 인식하에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과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를 수용하고, 조난된 사람과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다.

적인 대응요령을 제시하여 준수하게 함으로써 안전을 달성하려고 하는 모든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행위규제분야에서는 하명과 금지와 같은 명령적 성격의 행정행위가 다수 활용되는 특징을 보인다.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행해지는 수상레저관광 활동도 역시 이 법률의 각종 행위규제에 따라야 한다.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한 모든 조난사고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난구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제3조), 해수면에서의 수난구조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고, 내수면에서의 수난구조는 소방관서의 장이 수행한다(제13조).

행위규제 유형	주요 내용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풍 등 해상기상의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어선, 선박구난현장에서 구난작업에 방해가 되는 선박에 대해 구조본부장은 해당 선박의 이동 및 대피를 명할 수 있음</li> </ul>
조난사실의 신고 등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조난된 선박등의 선장·기장 또는 소유자,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조난사실을 발견한 자, 조난된 선박등으로부터 조난신호나 조난통신을 수신한 자, 조난사고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 등은 즉시 가까운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에게 조난사실을 신고하여야 함</li> </ul>
인근 선박등의 구조지원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등의 선장·기장 등은 조난된 선박등이나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가능한 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li> </ul>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누구든지 조난된 선박등을 구난하려는 자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li> </ul>

행위규제 유형	주요 내용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 등 (제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다만, 노약자, 정신적 장애인, 신체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li> </ul>
선박위치통보 등 (제3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장은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로부터 출항하거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에는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에게 항해계획통보, 위치통보, 변경통보, 최종통보를 하여야 함(「선박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위치통보를 생략할 수 있음)</li> </ul>

### 3.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활동은 수상이라는 평소의 생활공간과는 다른 특수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일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동력장치 등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므로 그 자체가 위험성을 수반하는 레저활동이다. 더욱이 다수인이 밀집한 해수욕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바, 레저활동에 수반되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상활동에 대한 지식이 없고 동력장치에 익숙하지 못한 일반인들의 자율에 레저활동을 맡겨 두기에는 안전상 문제가 있고, 수상레저사업자들의 경우에는 타인의 생명을 담보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업무에 적합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법적 규제가 다수 존재한다.

여기서는 특히, 안전관리의 기준으로서 다음의 다섯 가지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① 사업규제, ② 인적규제, ③ 물적규제(설비 내지 시설규제), ④ 행위규제(행동규제), ⑤ 프로그램규제가 그러하다. 이상의 다섯 가지 측면에 더하여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가기 위한 장치로서의

⑥ 기술연구의 측면, ⑦ 관련정보의 공개와 교육 및 홍보의 측면을 고려할 수 있고, 나아가 사고발생시의 피해자구호의 관점에서의 ⑧ 공제·보험제도와 같은 것도 완비되어 있어야 위험성에 대한 대비 즉 안전관리가 보다 완전하고 충실한 체계를 이루는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①에서 ⑤까지의 관점은 “규제적 수단”에 의한 안전관리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규제적 안전관리장치는 물리적으로 위해요소를 억지하고 통제하는데 중점을 두며, 이를 통해 안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로지 미시적이고 현상유지적 관점에서의 안전관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규제적 안전관리는 물리적인 안전성의 확보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⑥에서 ⑧까지의 관점은 보다 거시적인 관점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단지 위해요소를 억지하여 안전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관념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성이 고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는 관념에 입각하고 있다. 즉, 규제보다는 지원이나 조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관리라고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⑥에서 ⑧까지의 관점을 “조성적 안전관리”로 표현한다면, 종합적인 안전관리는 규제적 측면과 조성적 측면이 공조하는 경우에 발전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 (1) 사업규제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즉, ①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②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③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제39조).

수상레저사업을 등록제로 하여 영업구역을 제한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두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취지는 「수상레저안전법」으로 규율하기 이전에는

자유업으로서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했던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등의 수상레저사업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수상레저사업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sup>40)</sup>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제39조제1항 단서).

수상레저사업을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특별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①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②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법제5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40조). 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제42조제1항).

## (2) 인적규제

인적규제란 예컨대,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보유한 유자격자에 의한 관리 등을 통하여 안전을 달성하자고 하는 관점이다.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모터보트(motor boat), 요트(yacht), 수상오토바이(personal watercraft), 고무보트(rubber boat), 스쿠터(scooter)와 호버크래프트(hovercraft)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제1항).

40)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은 등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공공의 안전과 관계되는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대여업이나 승객을 탑승시키는 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되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서, 강학상의 허가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허가 대신 굳이 등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수급균형 등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주관적, 가치판단적 이유에 의한 등록거부를 배제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등록신청에 대한 행정관청의 심사는 등록신청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의 형식적 요건심사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기술적 판단에 그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신청자가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행정관청은 신청한 대로 등록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등록신청이 등록요건에 합당함에도 등록을 거부할 경우에는 신청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익현, **수상레저안전법 해설**, 법제 2000.5, 84면 이하.

조종면허는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가 있고, 일반조정면허는 다시 제1급 조종면허와 제2급 조종면허로 구분된다(제4조제2항). 제1급 조종면허는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 및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제2급 조종면허는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요트는 제외)를 조종하려는 사람, 요트조종면허는 요트를 조종하려는 사람 등이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3조제2항). 한편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조종면허가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의2제1항).

또한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서 ①14세 미만인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자는 제외), ②「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자는 이를 위반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다(제5조제1항).

그리고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자, ②「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면허와 관련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③「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기사면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를 가진 자, ④「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이용 등에 관한 교육·훈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해당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 ⑥제1급 조종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제2급 조종면허 실기시험으로 변경하여 응시하려는 자 등 일정한 경력을 소지한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의 조종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7조제1항).

### (3) 물적규제

#### ①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제도의 입법취지는 개인 소유의 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 있어서 관리체계가 전혀 없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등록 및 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것으로서 수상오토바이, 선내기 또는 선외기인 모터보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터보트, 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고무보트를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무보트, 총톤수 20톤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트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은 제외)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제30조).<sup>41)</sup>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제33조의 말소등록은 제외) 그 소유자나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32조).

41)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을 보면 소유자는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면 등록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법령의 규정에서 실제 이용 시에 등록하도록 규정한 바 없다. 그리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의 등록대상으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규정되어 있어,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등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제도의 입법취지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등록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여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된 점을 고려하면,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하여는 해당 기구가 실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성을 검사하며, 사고 발생시 피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시를 기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은 해당 기구의 실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때에 해야 한다(법제처 08-0148, 2008.7.2).



## ② 안전성검사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의 절차, 검사 방법 및 준비사항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제37조제1항). 또한 수상레저사업자는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로부터 각각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제37조제2항).

## ③ 형식승인·검정 등

수상레저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7조제1항).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하며(제2항),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수상레저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 합격하면 그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생략한다(제3항).

## (4) 행위규제

## ① 면허·등록의 취소 등

유 형	주요 내용
조종면허의 취소·정지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조종면허의 효력을 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li> <li>-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li> <li>-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li> <li>-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li> </ul> </li> </ul>

유 형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li> <li>-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조종하게 한 경우</li> <li>-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li> <li>-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li> </ul>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제5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li> <li>- 수상레저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li> <li>- 등록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li> <li>-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소한 경우</li> <li>- 수상레저사업자가 제30조(등록), 제32조(변경등록), 제33조(말소등록) 및 제35조(등록번호판부착), 제36조(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 제37조(안전검사)를 위반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li> <li>- 제43조(이용요금), 제44조(보험가입), 제45조(안전점검), 제48조(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 제49조(영업제한)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li> </ul>

## ② 수상레저활동자의 의무

유 형	주요 내용
조종면허의 갱신 등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종면허를 받은 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 기간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증을 갱신받아야 하고, 면허증을 갱신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갱신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며, 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종면허의 효력이 상실</li> </ul>

유 형	주요 내용
면허증 휴대 및 제시의무 (제12조)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조종 중에 관계 공무원이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면 면허증을 제시
안전장비의 착용 (제17조)	•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의 신고 등 (제19조)	•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사망·실종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
무면허조종의 금지 (제20조)	•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 불가
야간 수상레저 활동의 금지 (제21조)	•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금지
주취 중 조종 금지 (제22조)	•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 금지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금지 (제23조)	•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영향,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 금지
정원 초과 금지 (제24조)	• 수상레저기구의 조종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운항 금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활동금지 (제25조)	•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금지
일시정지·확인 등 (제27조)	• 수상레저기구를 타고 있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관계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를 멈추게 하고 이를 확인하거나 그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에게 면허증이나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유 형	주요 내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제3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잘 보이는 곳에 등록번호판을 부착</li> </ul>

## ③ 수상레저사업자의 의무

유 형	주요 내용
이용요금 (제4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상레저사업자는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li> </ul>
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 (제4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 영업구역의 기상·수상 상태의 확인,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해양경찰관서·경찰관서·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의 배치 또는 탑승 등의 조치</li> <li>•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영업구역에서 14세 미만인 자(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한다),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질환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거나 이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행위,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태우는 행위, 수상레저기구 안에서 술을 판매·제공하거나 수상레저기구 이용자가 수상레저기구 안으로 이를 반입하도록 하는 행위,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행위, 수상레저활동시간 외에 영업을 하는 행위, 폭발물·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을 이용자가 타고 있는 수상레저기구로 반입·운송하는 행위, 안전검사 및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li> </ul>
영업의 제한 (제4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상·수상 상태가 악화된 경우, 수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 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음</li> </ul>

유 형	주요 내용
자료 제출 등 (제5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li> </ul>

#### (5) 프로그램규제

물적 시설이나 인적 요소, 아니면 행위 등의 측면에서의 규제가 어떠한 유형적이고 객관적으로 실체를 가지는 것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안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프로그램규제라고 하는 관점은 이들 객관적인 실체들간을 효과적으로 상호 연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이라는 가치를 보다 확실하게 확보해가고자 하는 관점으로 이해된다. 사업자에게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의무를 지우고 그것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시스템(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경우에 이것도 프로그램규제적 성질의 안전관리라고 이해할 수 있다.

조성적 안전관리는 선진적 안전관리제도에 속한다. 안전관리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령에 조성적 안전관리장치가 얼마나 충실히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해당 안전관리법령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 이해할 수도 있다. 보험제도는 실재에 있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는 아니다. 따라서 사전적 안전규제의 관점에서는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보험제도는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다수인에게 분산시켜 가볍게 하고, 그 피해를 금전적으로 치유해주자고 하는 사후적인 관점에서의 제도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보험은 사고의 예방이나 그 감소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이 적절히 처리해 줄 것이므로 사고발생에 대하여 불감증을 조장할 여지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가능하다.

유 형	주요 내용
운항규칙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운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속도·운항방법 등에 관한 운항규칙을 준수</li> </ul>

유 형	주요 내용
보험 등 가입 (제34조, 제4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제34조)</li> <li>• 수상레저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제44조)</li> </ul>
교육 (제10조, 제16조 제39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6조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부터, 조종면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제9조에 따른 조종면허 갱신 기간 이내에 각각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상안전교육을 이수(제10조)</li> <li>• 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제16조)</li> <li>•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로 교육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육사업 신고(제39조의2)</li> </ul>
수상레저기구의 우수사업장 인증 등 (제4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장을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우수제조사업장이나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인증</li> <li>• 우수사업장에서 제조하거나 정비하는 수상레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검사나 정기검사를 생략</li> </ul>

#### 4. 해사안전법

「해사안전법」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선원·선박소유자 등 인적 요인, 선박·화물 등 물적 요인, 항행보조시설·안전제도 등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제이다. 이 법률은 대한민국의 영해,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수·늪 등은 제외)에 있는 선박이나 해양시설에 적용되므로(제3조제1항), 「해사안전법」의 안전관리에 관한 개별 규정도 수상레저관광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특히, 「해사안전법」에서는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수역 또는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의 수역 중 해상안전 및 해상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에서는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또는 윈드서핑을 하거나 요트, 수상오토바이, 수상자전거, 스쿠터, 수상스키, 패러세일링 보트, 고무보트, 모터보트, 조정, 잠수장비, 카약, 카누, 호버크래프트, 워터슬레드, 노보트, 서프보드 등 레저기구나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34조제3항, 시행령 제10조제1항).

다만,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해상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4조제3항 단서). 한편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를 받은 사람이 레저기구나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려면 그 허가서를 지녀야 하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제시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시행령 제11조).

또한 해양경찰서장은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항로나 정박지 등 해상교통 여건이 달라진 경우,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34조제4항).

## VI. 기타 관련 법제

### 1. 레저스포츠 관련 법률안

#### (1) 레저스포츠진흥 기본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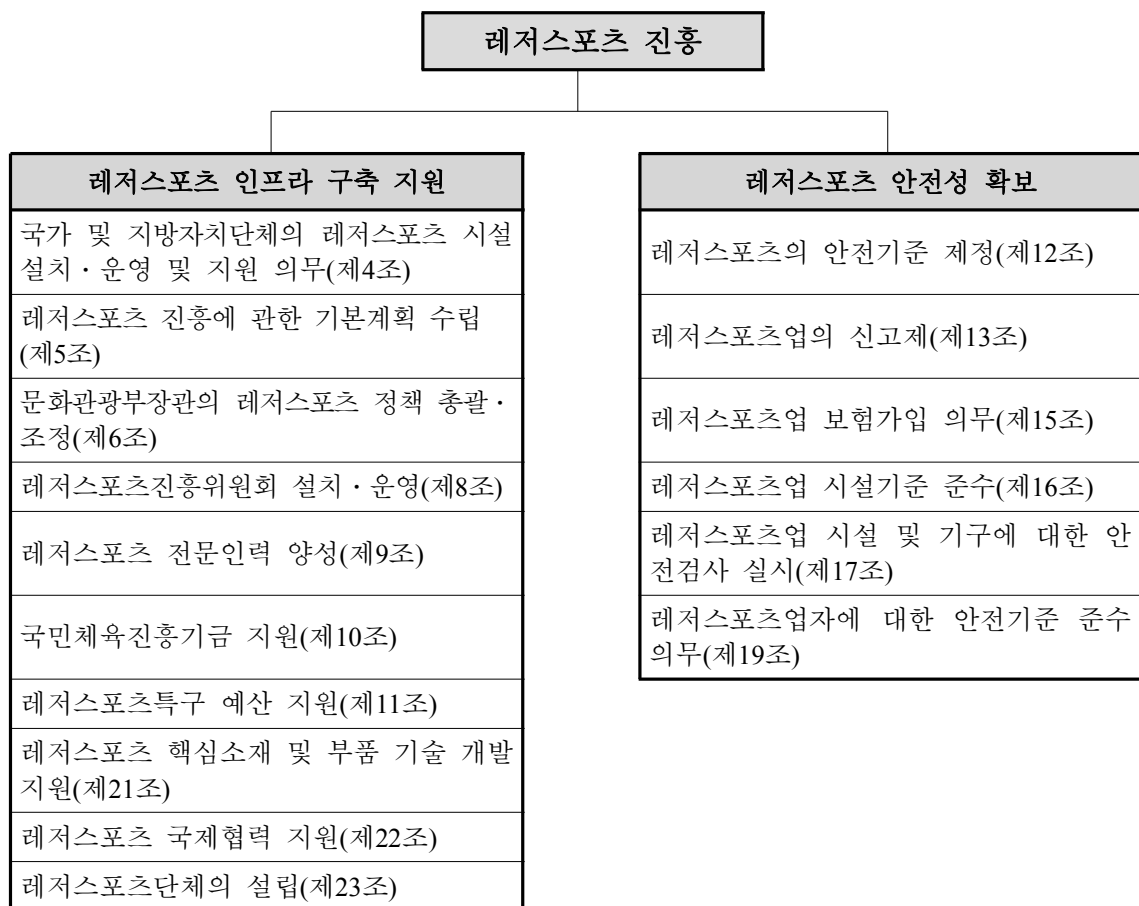
레저스포츠 진흥 내지 활성화와 관련하여 제17대 국회 회기인 2005.10.20 의 원입법으로 “레저스포츠진흥 기본법안”이 발의된 바 있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 법률안은 레저스포츠에 대한 관리 부처가 분산되어 있고 관련 법률도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음에 따라 레저스포츠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정책추진에 많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는 새로운 레저스포츠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감독 및 육성·지원에 있어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레저스포츠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체계의 정비를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이 법률안에서는 레저스포츠의 의미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가시간에 행해지는 신체적·정신적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상·수상·항공레저스포츠 등”으로 규정하였다. 아울러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레저스포츠업의 신고(허가, 인가, 등록을 포함한다), 시설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규정에 따르게 하였다.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레저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레저스포츠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하여 레저스포츠특구로 지정되는 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내에 레저스포츠시설을 집적화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률안은 레저스포츠 관련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관련 법률인 「수상레저안전법」, 「항공법」 등이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도록 하였다. 다만, 레저스포츠는 레저와 스포츠가 결합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국민체육



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과 “체육시설업”의 개념에 포함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레저스포츠진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현행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레저스포츠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현행 체육 관련 법률과의 체계 및 연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sup>42)</sup>



## (2)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18대 국회 회기인 2011.3.24 의원입법으로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2012.5.29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한편 이 법률안은 19대 국회에 이르러 2012.6.27 의원입법으로 다시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이 법률안도 기본적으로 위의 “레저스포츠진흥 기본법안”과 입법취지와

42) 국회문화관광위원회, 레저스포츠진흥 기본법안 검토보고서, 2006.2, 19면 이하 참조.

목적이 유사하다. 이 법률안에서도 레저스포츠에 관해서는 개별 종목별로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등이 관리·감독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수상레저안전법」, 「항공법」 등의 적용을 받는 등 레저스포츠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나 진흥 및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정안은 레저스포츠의 정의와 종류, 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레저스포츠 시설 등 안전관리, 레저스포츠업 신고 등에 대해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안에서는 레저스포츠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가시간에 자발적으로 행하여지는 신체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sup>43)</sup> 또한 레저스포츠의 종류와 범위로서 육상레저스포츠(그 활동이 주로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레저스포츠), 수상레저스포츠(그 활동이 주로 수상과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레저스포츠), 항공레저스포츠(그 활동이 주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레저스포츠), 그 밖의 레저스포츠(그 활동이 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레저스포츠)로 구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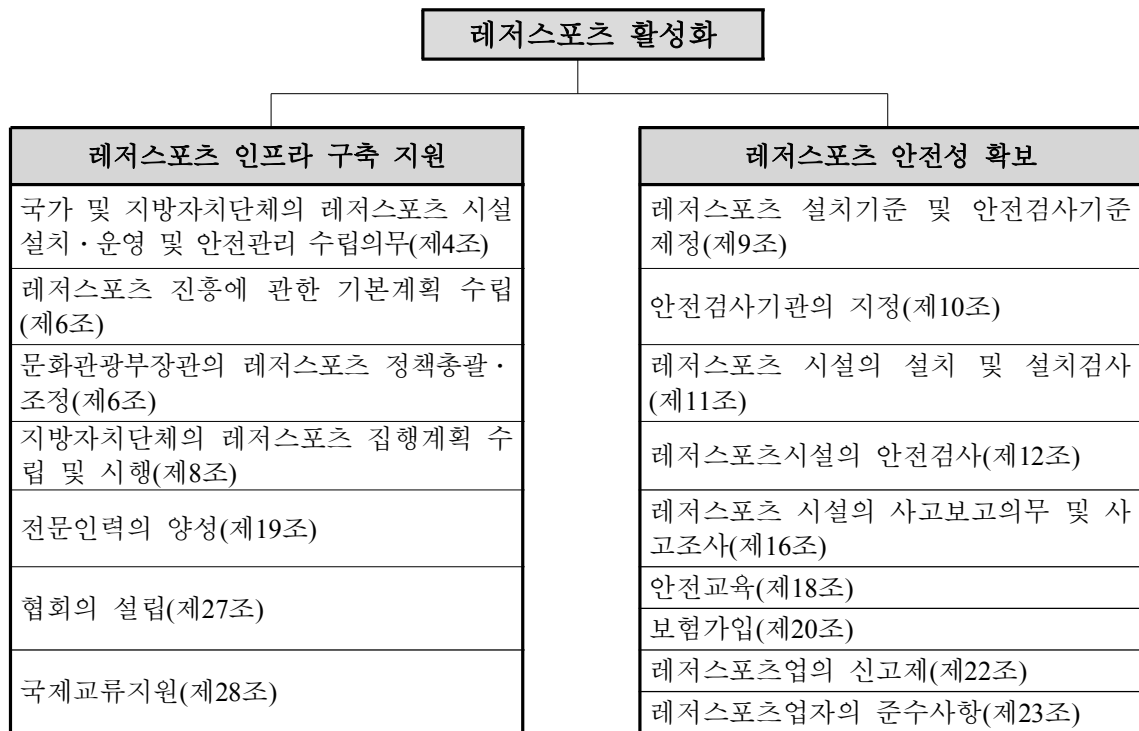
한편 이 법률안에서는 개별 종목별로 별개의 법률로 관리되고 있는 레저스포츠를 고려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의 경우, 「항공법」에 따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의 유기사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의 안전성검사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sup>44)</sup>

43) 위 레저스포츠의 개념은 18대 국회에 발의된(2011.3.24) 법률안과 같다. 당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에서는 “레저스포츠도 신체활동이라는 양태와 심신수련 및 여가선용이라는 목적에서 볼 때,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에 포함되는 개념임. 그런데, 제정안에서는 레저스포츠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가시간에 자발적으로 행하여지는 신체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레저스포츠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과 구분되는 새로운 유형의 체육 분야인지 아니면 생활체육의 하나로 일부 특징적인 요소를 갖는 종목들을 묶어서 가리키는 개념인지 불명확함. 다만, 「국민체육진흥법」상 생활체육의 개념이 경기단체 등록선수의 운동경기 활동을 제외한 모든 자발적·일상적 체육활동을 포함하고, 윈드서핑, 스킨스쿠버, 패러글라이딩, 등산, 인라인스케이팅, 낚시, 익스트림게임 등 레저스포츠 종목의 전국연합회가 국민생활체육회의 회원단체로 가입·활동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레저스포츠는 생활체육과 구분되는 개념이 아닌 생활체육 종목 중 일부 종목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레저스포츠의 정의 규정을 통해 레저스포츠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 및 생활체육과의 관계, 아울러 제정안과 체육에 관한 기본법인 「국민체육진흥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지적하였다.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2011.11, 9면 이하 참조.

44) 이 적용배제규정은 18대 국회에 발의된(2011.3.24) 법률안의 내용과 같다. 당시 이 규정에 대해 유관 부처에서는 다음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①국토해양부에서는 동 법률 제정안에서 항공레저스포츠는 「항공법」에서 규율하는 내용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며,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공역관리, 타 비행체와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레저스포츠의 진흥과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률안에서는 레저스포츠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설치검사 및 정기안전검사 기준 마련, 안전검사기관 지정 등 설치검사 및 정기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레저스포츠업자의 보험가입 및 시정명령 등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레저스포츠업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비행안전 확보 등을 위해서는 단일 법령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외가 필요하고, 해양레저스포츠를 포함한 해양관광의 진흥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동 제정안의 제7조 기본계획 수립 등의 조항 적용 배제가 필요하며, 또한 해양 분야의 안전 및 시설기준은 기존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제정안의 적용 배제가 필요하며, 마리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마리나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므로, 동 제정안에서 적용배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소방방재청에서는 일부 선박(모터보트, 요트, 노보트 등)의 경우 같은 법 제22조(레저스포츠업의 신고)에 따른 레저스포츠업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에 따른 유선 및 도선사업의 공통 적용대상으로서, 법률간 적용에 혼선이 우려되므로 「유선 및 도선사업법」과 관련된 사항을 적용배제 규정에 포함할 것을 제시하였다. ③해양경찰청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의 경우를 배제조항으로 두고 있으나 안전검사 뿐만 아니라, 면허, 교육, 기구등록, 사업장 관리 등 전문지식과 인력·장비를 보유한 해양경찰청에서 10여년간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해왔으므로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규정된 사항 전체를 적용배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2. 자치법규

수상레저관광과 직접 관련된 자치법규는 아니나, 수상레저 내지 해양레저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치법규가 존재한다. 수상레저활동과 관련한 자치법규는 해당 지역의 수상레저활동이 가능한 구역을 규정하고, 수상레저시설의 관리와 수상레저안전 관련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양레저활동과 관련한 자치법규는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에 초점을 두어 종합계획의 수립, 위원회 설치, 해양레저산업 육성시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종 별	자치법규명	비 고
수상레저활동 관련 자치법규	무주군 수상레저활동 관리규칙 (규칙 제1028호, 2012.10.2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군 지역 금강</li> <li>• 동력기구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은 금지(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력기구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무주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li> </ul>
	밀양시 밀양강 수상레저활동 관리 규칙 (규칙 제364호, 2007.8.31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밀양강과 밀양강 유역 외 상류</li> <li>• 동력기구에 의한 수상레저활동은 금지(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력기구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li> </ul>
	영월군 수상레저활동 관리규칙 (규칙 제989호, 2011.8.5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강 및 남한강</li> <li>• 동력기구에 의한 수상레저활동은 금지(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력기구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li> </ul>
	인제군 수상레저사업장 등록업무 및 처리규정 (훈령 제399호, 2012.6.25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린천, 북천</li> <li>• 구간별 수상레저기구 총량대수 내에서 1개 업체당 등록가능대수는 최소 10대 이상 최대 30대 이내로 하며, 등록된 수상레저기구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li> </ul>

종 별	자치법규명	비 고
	정선군동강수상레저활동 관리규칙 (규칙 제1052호, 2004.11.17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강과 동강유역의 상류</li> <li>• 동력기구에 의한 수상레저활동은 금지(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력 기구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li> </ul>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648호, 2012.6.1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천시 한탄강</li> <li>•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상레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li> </ul>
해양레저산업 관련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운영 조례 (조례 제867호, 2008.10.10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에 따른 조례</li> </ul>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조례 제652호, 2011.8.4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리나항만시설 조성</li> <li>• 교육 등</li> <li>• 경기대회 개최 등</li> <li>• 선수 등 육성</li> <li>• 해양레저산업 관련 단지조성</li> <li>• 보조금 등의 지원</li> <li>• 해양레포츠스쿨 운영</li> </ul>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조례 제798호, 2011.10.12 제정)	
	진해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조례 제2153호, 2009.7.16 제정)	

종 별	자치법규명	비 고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조례 제293호, 2010.7.1 제정)	
	통영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조례 제853호, 2010.12.31 제정)	

### 제 3 장 수상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 제 1 절 법제개선의 방향성

관광산업은 다양한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종합산업이므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영향이 매우 크며, 그 효과도 경제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교육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 전체적으로도 중요하고 불가결한 산업이 되고 있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관광산업을 중시하는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새로운 관광산업으로서 수상레저관광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관광행태가 소극적인 관광에서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관광 등의 형태로 다양화되고 있고, 모험성과 전문성이 가미된 수상레저 및 수상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에서 보더라도 수상레저관광을 정착시키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수상레저관광과 관련한 제도적, 법적 기반이 미흡하여 급증하는 국내 수상레저관광의 수요에 부응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이러한 법제도적인 기반의 취약성은 수상레저관광의 활성화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새로운 관광산업으로서 수상레저관광의 효과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수상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역할분담도 매우 중요하지만 정밀하고 짜임새있는 법제도의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수상레저관광을 직접적으로 명문의 규정을 두어 이를 제도화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법제가 없는 실정이고, 일부 입법례에서는 수상레저관광과 관련성이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각기 그 대상 사업의 종류나

성격이 달라 수상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도 많다. 다만, 이들 법령에서 규정된 개별 사업의 성질 등에 대해 수상레저관광과의 관련성 여부나 정도 등을 각기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은 있다.

수상레저관광에 관한 현행법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수상레저관광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있는 현행 입법적 사례를 검토하여 그와의 조화성을 도모하는 방안이다. 즉, 일정한 정책이 그 적격성과 정당성의 검증을 거쳐서 어느 면에서도 법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입법내용의 종합적 조정의 관점에서 보는 경우 법령의 각 개별규정은 고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법령규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부하면서 종합적인 법제도·법령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며 이들 규정 사이에는 조화의 관계 내지 균형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법령에 있어서 체계화는 법령의 효력을 상승시키며, 사항적으로 연관된 소재를 종합적으로 규율하거나 구별되는 사안을 여러 부분으로 규범화하지 않은 법령은 체계상으로 중대한 결함을 내포한 것이며, 체계원리에 역행하는 것이다.<sup>45)</sup> 따라서 특정한 문제를 새로이 입법화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현존하는 법질서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체계적 관점에 따라 체계성있게 입법하여야 하고, 입법자는 가능한 한 새로운 법규를 기존의 법질서의 체계 가운데 편입하여 새로운 법규가 기존의 법질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 및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실효성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한 사업자 등에 대한 다양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률규정은 사업자 등에 대한 처벌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용자 등에 대한 벌칙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결국 이 법률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는 규범상호간의 내용과 체계상의 조화를 요구하는 헌법상의 체계정당성의 요청에 반하는 것이다. 체계정당성이라 함은 일정한 법률의 규범상호간에는 그 내용과 체계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고 상호 모순이 없어, 결국 모든 규정의 내용과 체계가 상호 모순과 갈등 없이 그 본래의 입법목적의 실현에 합치되고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법률규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법의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동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실현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규범상호간의 모순과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결국 헌법상의 체계정당성의 요청에도 위배되는 위헌적 규정이라 할 것이다(헌재결 1995.7.21. 94헌마136)”.



입법자는 기존의 법령을 개정·보완할 경우에 있어서는 새로운 법률을 기존의 법질서와 아무런 관계없이 단순히 제정하기만 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존의 법질서 가운데에서 개정하는 규범을 개정된 규범의 위치에 두고 보완하는 규범을 보완된 규범 끝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상레저관광과 관련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는 데에는 우선 현행 관련 법제에의 수용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우선, 수상레저관광의 의미와 내용을 규율하기 가장 적합한 법제로서는 「관광진흥법」이 있다. 「관광진흥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관광사업의 구체적 종류와 절차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으므로, 수상레저관광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규정을 포섭하기에 가장 부합되는 법제이다.

「관광기본법」은 국가의 관광정책 전반에 관한 기본원칙·기준·방향 등을 규정하고 있는 선언적·이념적인 법제이므로 개별 관광사업을 규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한편 현재 수상레저업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규율하고 있는바,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수상레저관광의 육성과 진흥을 규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수상레저관광에 관한 정책내용을 규율하려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항상 새로운 문제와 과제가 대두되는 것이라면, 기존법체계로의 편입은 오히려 제도 개선의 약화, 즉 법의 한계효용성의 감소를 초래한다. 아울러 복잡한 법규범체계로 인하여 불완전하고 예견불가능한 행정을 초래하며 또한 결함있는 결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나아가 법적 쟁송의 남발을 야기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기존법체로의 수용가능성 보다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통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입법 등 국가활동의 정책체계로서의 일관성은 반드시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통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의 복수의 법률의 존재에 의해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즉 정책의 흐름이나 구체적 상황을 전제로 하면서 시간의 흐름 가운데 복수의 법률을 비교하여 그 상호간의 차이의 합리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의 법체계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형식의 남용이며 결코 바람직한 입법태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 수상레저관광이라는 입법정책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비한 법체계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질적 내용면에서 수상레저관광에 관한 정책과 관련 법제의 체계화 및 일관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현행법상 수상레저관광을 규율하기에 적합한 개별법인 「관광진흥법」을 개편하여, 개념정의 및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본내용을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충실한 내용이 담긴 입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상레저관광에 관한 입법정책이 행정현실 가운데에서 살아 움직이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선언적·이념적 내용보다는 실효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이 담겨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상레저관광의 활성화라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개별법상의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이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정부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각 분야의 행정기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정립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시점에서 불필요한 규제적 요소는 대폭적인 개편이 요구된다.

즉, 새로운 관광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현행 법제상의 규제도 행정기관의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각 개별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유사·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여러 부처가 중복적인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과감하게 배제하는 등 수상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 제 2 절 수상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 개선방안

### I. 수상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수상레저관광을 둘러싼 여건을 살펴보면<sup>46)</sup>, 세계적으로 관광활동을 영위하는 대상지로서 해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요트를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 수요와 레저산업의 규모도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우리의 경우에도 국민의 소득 증가와 함께 여가시간의 확대에 의하여 과거 고가·고품격으로 대표되던 수상레저관광 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특히, 수상레저관광 산업은 체험형 관광시장의 급성장, 새로운 여가 트렌드와 중앙정부의 ‘강변 수상레저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국가의 전략적 동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제적·문화적 인프라 조성 등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도 하천변, 내수면, 해수면 공간에 다양한 수상관광 관련 시설 개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법의 정비와 함께 해수면과 내수면의 관광 활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 추세에 있고, 현재 해양 및 수변에서의 관광 활동을 강화하고 새로운 관광레저 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다. 다만, 관련부처별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수상레저 관광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다양한 정책적 제약이 상존하고 있고 여건 개선 노력도 부족한 실정에 있다. 수상레저관광 활동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기적, 중장기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주요 정책과제	개 요
(관광기반) 무동력 수상관광레저 활동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상 올레 코스 개발 및 지원 : 무동력 수상관광레저 코스 개발(최소 4시간 이상), 4대강 자전거길과 연계한 장거리 투어링 코스 개발(단절지점의 연계방안 마련), 수상경관 명소 지정 등 과제 추진</li> </ul>

46)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김윤영, 수상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수상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연구 워크숍 자료집(한국법제연구원, 2012.9.25), 21면 이하 참조.

주요 정책과제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동력 수상관광레저 거점 개발 : 개발된 올레 코스 중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을 거점지역으로 선정,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기반시설 확충(계류시설, 정고시설, 교육시설, 편의시설 등), 기반조성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li> <li>• 중간 기착지 조성 : 2-4시간 간격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간이시설 형태의 접안시설과 편의시설 설치</li> </ul>
(관광시장) 체험 기회 확대 및 이용편의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체험기회의 확대 : 무료체험 프로그램 확대 실시, 무동력 수상관광레저기구 교육프로그램 지원</li> <li>• 잠재수요에 대한 홍보 마케팅 강화 :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 실시, 수상레저종합정보서비스 개선, 전문잡지 개발 지원</li> <li>• 대국민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단체 연계 프로그램 운영, 조기 체험 유도 정책 추진</li> <li>• 이용편의 제고 : 접근성 개선(활동금지구역, 야간이용 개선),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추진</li> </ul>
(관광산업) 수상 관광레저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화를 위한 체계 구축 : 수상관광레저산업의 통합적 접근, 중장기 수상관광레저 진흥계획 수립, 수상관광레저 분야의 R&amp;D 기능 강화(선박 건조, 코스 개발, 코스 이용 GPS 기기 개발 등)</li> <li>• 새로운 상품 개발 : 기능, 시장, 지역의 복합 연계를 통한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 새로운 무동력 수상관광레저기구 도입</li> <li>• 산업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무동력 수상관광레저기구 렌탈 서비스 지원, 무동력 수상관광레저 활동 지원 인력 양성</li> </ul>
(부처간 협력) 부처간 정책적 업무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동력 수상관광레저 활동에 한정하여 부처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전반적인 수상관광 관련 정책을 협력대상으로 설정</li> </ul>

주요 정책과제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부처별 업무영역을 조정하고 상호 협력 논의</li> <li>• 협의체를 통하여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실무적으로 기반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작성 (기반시설 규모와 기능 기준)</li> </ul>
(관련 기관 협력) 운영 지원 조직과 연계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적 기술 교육 및 안전 관리 등을 위해 카누연맹과 요트협회 등에서 위탁 운영 중</li> <li>•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가능)</li> <li>• 중앙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방안을 모색, 체계적인 선진 운영 기법 도입 등 필요</li> </ul>
(지자체 협력) 지자체간 역할 설정 및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상관광 코스의 개발, 거점 및 중간 기착지 선정 및 조성은 지자체의 역할이며 투어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접 지자체간 연계 협력 필요</li> <li>• 지자체에서 부가적인 연계사업 발굴 및 연계상품 개발 가능(문화 및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 활용)</li> <li>• 수상관광레저 이벤트의 정기적 개최를 위한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최초체험 기회 확대)</li> </ul>

## II. 관련 법제개선의 방향 및 검토

어떤 정책을 실현하는 경우에 반드시 입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입법을 ‘필요적 입법’이라 하고, 그 경우의 정책을 필요적 입법정책이라 한다. 반드시 입법화할 필요는 없으나 입법화 해도 좋은 경우의 입법을 ‘임의적 입법’이라 하고 그 경우의 정책을 임의적 입법정책이라 한다.<sup>47)</sup>

47) 자세한 것은 박영도, **입법학 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9, 190면 이하 참조.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 입법이 아니면 실현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적 사항이며, 또한 기존법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입법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다. 사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과하는 데는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것은 헌법상의 원리이다. 따라서 권리제한인지의 여부선택은 임의적이거나, 일단 권리제한을 선택하면 필요적 입법이 된다.

어떤 정책을 실시하는데 그 실시가 기존법과 관련성을 지니며 기존법과 모순저촉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기존법을 개정하거나 기존법에 대한 특례를 설정하는 경우 그것은 단적으로 필요적 입법이다. 기존법과의 정합성의 판단은 개별적으로 명확한 경우 외에 포괄적·다원적인 경우도 있다. 예컨대, 수상레저관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취하고 싶은 경우 기존법의 어디에 핵심이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개정 내지 특례화할 것인가의 검토를 다원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입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좋은 정책대안도 있으며, 입법이라는 형식을 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선택된 정책대안이 그 일부는 입법으로서, 다른 부분은 예산조치로서 또한 다른 일부는 행정적 조치로서 실현될 수도 있다. 또한 정책의 실행의 측면에서 볼 때 구태여 입법화할 적극적 동기가 없는 경우에는 입법화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즉, 자치와 개인책임의 원칙에 따른 자율규제(self-regulation)<sup>48)</sup>가 강조되거나 또는 단순히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거나 행정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증대시키고 그를 보장하는 것인 경우에는 입법화로 인한 세부적인 개입을 피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어떤 정책이 일부 법령과 관련된다고 하여 그 전부를 입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있으나, 반대로 예컨대, 정책적 요소를 강하게 지닌 것이라 하여

48) 자율규제의 구상은 기본적으로 규율의 필요성이 있는 분야의 규정을 해당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가가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입을 제한하는 자율규제의 사고는 입법자가 조정과 개입을 줄이고 대신 국가나 개인 또는 양자가 공동으로 특정목표를 달성하고 과제를 실행하거나 성과를 수행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국가는 자율규제를 상이한 형식과 강도로 조정할 수 있다. 즉, ①독자적 규범을 제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하여, 승인이나 혹은 기타 다른 감독방법과 연결시키는 방법, ②독자적 규범의 조정을 위한 대강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 ③바람직한 자율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국가의 감독 내지 조정권 발동을 정하는 방법, ④사인에 의해 작성된 규범을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다. Arnold Marti, *Selbstregulierung anstelle staatlicher Gesetzgebung*, ZBI 2000, S.561f.

입법적 검토를 포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또한 최선의 정책대안이라 할지라도 입법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입법화단계에서 주저하게 될 수도 있다.<sup>49)</sup>

현실적으로 현재의 수상레저관광과 관련한 입법정책이 매우 다양하고, 불분명하여 이를 활성화하는 입법목표를 인식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아울러 위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도 불확실한 과제가 많아, 이를 전부 입법화하기에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이들 정책과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모하기 때문에 입법적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주요 정책과제에 관하여 기본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합의가 변할 수가 있으며, 나아가 하나의 정책과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다 복잡해지고 다원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단, 위의 모든 정책과제를 수용하는 법제개선방안은 도출하지 않는다. 다만, 단기적으로 수상레저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정한 현행 법제의 어떠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많은 효과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이는 효과성을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검토함을 의미하나, 그러나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데에는 이외에도 실현 내지 달성가능성도 고려한다.<sup>50)</sup>

## 1. 수상레저관광 활동장소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 (1)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이미 살펴본 것처럼 수상레저관광을 위해 하천을 사용하는 것은 하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에 해당한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하천법 시행령」에서는 스케이트장, 유선장·

49) 한편 엄격하게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무리 좋고 적합한 수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과정상 존재하는 장애물을 통과할 수 없다면 이론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권한을 부여받은 주체들은 일정한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국가적 조치의 정치적 승인가능성이라는 또 하나의 기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조치 그 자체에서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부수적 효과와 관련해서도 정치적 수용가능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항적인 적합성이라는 기준을 성급하게 정치적인 합의가능성이라는 기준보다 낮게 평가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Hermann Hill, *Einführung in die Gesetzgebungslehre*, Heidelberg 1982, S.78f.

50) 입법실무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제기되어 그것을 기술적으로 정식화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상정하려는 규범의 수가 다수이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규범을 상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달성하려는 목표의 구상 및 우선적 진단, 대체안분석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분석 작업이라 할 것이다. Friedrich Lachmayer, *Zur Theorie der Gesetzgebung*, DÖV 1978, S.33f.

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을 설치하는 행위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한편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신청서에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제30조제1항제6호).

현재 하천 등 공유수면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은 안전사고 위험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하천점용 허가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향후 레저인구 및 수상레저관광의 활성화와 레저이용자들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하천을 관할하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수상레저활동장소로서의 하천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상레저사업장으로 하천 점·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독점적으로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 있으나, 공유수면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상레저 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공공마리나 시설의 확대와 마리나 주변 일정부분 해역을 마리나 구역으로 지정하여 국민 누구나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한강주변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10-18호, 2010.2.24, 일부개정)」 제11조에 따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도선사업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신규(증설을 포함) 면허·신고 및 등록(「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등을 포함)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수상레저활동이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밖에 없으나, 환경오염 등의 현저한 우려가 없는 일정지역에서의 규제완화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소하천정비법」에서 소하천은 하천의 발원이 되는 원천으로서 마을주변에 분포되어 각종 용수를 제공하고 용·배수로 등으로 사용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소하천 유역은 지역적 특성이 두드러지고 계절에 따른 유량변화도 심하고, 현행 「소하천정비법」이 치수방재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등 수상레저활동을 하기에 적절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소하천정비법」에서 의미하는 일시적이 아닌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 하천 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점(始點)에서 종점(終點)까지의 전체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소하천이 수상레저관광활동이 가능한 것이라면 이들 소하천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관리청의 점용허가가 필요하다.

## (2)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44조의2에서는 다목적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댐관리청과 협의하여 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의 호수·늪 및 주변경관을 활용한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수상체육시설 등 휴양·문화·여가활동 등을 위한 공간(친환경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목적댐(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특정용도에 전용(專用)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은 제외)에서 수상레저활동 내지 수상레저관광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b>제44조의2(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b> ① 제41조와 제43조에 따른 다목적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b>제44조의2(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b> ① 제41조와 제43조에 따른 다목적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현 행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의 호수·늪 및 주변경관을 활용한 자연 학습장, 생태공원, 수상체육시설 등 휴양·문화·여가활동 등을 위한 공간(이하 “친환경공간”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의 호수·늪 및 주변경관을 활용한 자연 학습장, 생태공원, <u>수상체육시설, 수상레저(관광)시설</u> 등 휴양·문화·여가활동 등을 위한 공간(이하 “친환경공간”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생 략)

### (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 제13조에서는 친수구역조성사업(친수구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운영하는 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을 규정하고 있다.<sup>51)</sup>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

5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시점을 전후하여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개발 및 개발이익의 활용방안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제기되었다.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은 친수여건이 조성된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계획적·친환경적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제정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규모 이상으로 친수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친수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친수구역조성사업 이후 오염부하량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에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어 계획적·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은 제정안에서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통해 국가하천 주변지역에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시설 등의 개발을 허용하고, 친수구역의 지정·고시가 이루어지면 이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수변구역을 해제한 것으로 간주도록 하고 있어 국가하천과 주변지역의 수질오염 및 환경훼손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개발이익의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은 재정 투입에 의해 창출된 하천주변지역의 가치를 공공이 공유하지 못하고 하천주변지역 토지소유자 등이 독점적·배타적으로 향유하게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 사업시행자를 공공부담으로 한정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하천관리기금에 귀속시켜 이를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비관리청이 시행한 하천공사비용 보전 등에 활용하도록 하여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제정안 반대하는 입장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사업시행자에 포함시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가 확대되고 우선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친수구역 개발이익을 하천관리기금으로 환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비의 보전 등에 활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자세한 논의는 국토해양위원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 2010.12, 3면 이하 참조.

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등에 관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의 의제규정을 두고 있다(제15조제1항제4호).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입법예고한 바 있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관광수상레저업을 신설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광수상레저업의 등록을 자동적으로 승인받게 되므로,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어 조성사업이 실시된 곳에서 수상레저관광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법 제9조에서는 친수구역에서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수상레저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 이러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관광진흥법」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이러한 허가도 의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은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사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제8조제1항). 따라서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유수면을 활용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신청서에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제30조제1항제6호). 따라서 기존의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관광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았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

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동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제3조제1항). 따라서 향후 「관광진흥법」에서 수상레저관광을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용 외에 항만시설도 사용하여야 하므로, 「항만법」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허가 등도 의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경우외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립면허도 아울러 의제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

## 2. 수상레저관광 인프라구축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 (1)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법 제25조에서는 시·도지사는 개발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들 투자진흥지구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국제회의시설업 및 종합유원시설업(다만,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제조 또는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위한 투자를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33조제1항). 따라서 수상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서의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관광수상레저업의 성립을 전제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수상레저관광업을 투자사업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 동 · 서 ·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p>제3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5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p> <p>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u>관광공연장업</u>·국제회의시설업 및 종합유원시설업. 다만,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p> <p>2.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제조 또는 운영하는 사업</p> <p>3. ~ 13. (생략)</p> <p>② ~ ⑥ (생략)</p>	<p>제3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5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p> <p>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u>관광공연장업</u>·<u>수상레저관광업</u>·국제회의시설업 및 종합유원시설업. 다만,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p> <p>2.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제조 또는 운영하는 사업</p> <p>3. ~ 13. (생략)</p> <p>② ~ ⑥ (생략)</p>

## (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2012년에 개최된 여수세계박람회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을 전부개정하여 마련된 특별법으로서<sup>52)</sup>,

52) 종전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은 2011.12.30 전부개정되어 법률 제명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박람회 지원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시설을 규정하고 있다(제2조제3호가목). 따라서 위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제3조에서 관광사업의 종류로서 수상레저관광업을 신설할 경우, 박람회지원시설구역에서 수상레저관광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3)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 제12조에서는 저수지·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저수지·댐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여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른 용도로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정비기본계획에는 위험저수지·댐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부대사업계획에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12조제6항제2호). 따라서 위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제3조에서 관광사업의 종류로서 수상레저관광업을 신설할 경우,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에서 수상레저관광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b>제12조(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의 지정)</b> ① ~ ⑤ (생 략) ⑥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b>제12조(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의 지정)</b> ① ~ ⑤ (생 략) ⑥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한편 법의 목적을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박람회 개최성공을 계승·기념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전부개정 이유는 박람회 개최만으로는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기 어렵고,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된 박람회 관련 시설에 대한 사후활용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채 3개월간의 1회성 행사로 끝나게 될 경우 국가적인 자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전부개정으로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박람회 사후활용 주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 등을 박람회 사후활용시설로 정의하고,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박람회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박람회 사후활용으로 정의하였다. 이 법률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2012.4.27 시행), 부칙에서의 한시규정은 삭제되어 항구법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현 행	개정안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사업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사업
2.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2.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에 따른 유선사업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에 따른 유선사업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사업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사업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낚시어선업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낚시어선업
6.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단지조성사업	6.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단지조성사업
<u>&lt;신 설&gt;</u>	<u>7.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u>
<u>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u>	<u>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u>

### 3. 수상레저관광 안전관리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 (1) 개항질서법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항의 항계 안과 「항만법」 제2조제5호 가목의 수역시설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계 밖의 항로, 정박지 등 수역시설에 출입하는 선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다만, 현행법에서는 신고면제대상이 되는 선박 유형으로서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해양사고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그 밖에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도선선, 예선선, 관공선)을 규정하고 있어서 수상레저기구가 항계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후 지체 없이, 항계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선 출입 신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도 신고면제대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살펴본 것처럼 국토해양부에서는 현행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되어 있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국민들에게 법령 이해의 편의를 제공하고, 운항선박의 대형화 및 수상레저활동 증가 등 선박의 입항 및 출항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수요를 반영하며, 항만관제 및 북한기항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여건 확보 및 안보 위해 요소의 제거를 도모하는 등 효율적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을 지원하기 위해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 법률안이 성립할 경우에는 위 「개항질서법」의 개정은 필요없을 것이다.

[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2012.12. 법제처심사필) ]

**제 4 조(출입 신고)** ① 무역항의 해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해양사고구조에 사용되는 선박
3.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중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4. 그 밖에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수상레저안전법

이미 살펴본 것처럼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법률의 제정목적상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한 각종 규제를 두고 있어서 전



형적인 안전관리 규제법제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수상레저의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수상레저안전법」에서의 각종 규제조항을 개선한 바 있고, 최근(2011.6.15, 일부개정)에도 수상레저기구의 발달과 수상레저활동의 공간확대에 따른 원거리수상레저활동 신고범위를 확대하고, 수상레저기구 대여업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상레저사업자가 교육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신고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상레저와 관련된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sup>53)</sup>

개선내용	주요 내용
수상레저조종 면허갱신 특례 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6.25 시행령개정</li> <li>- 갱신기간내 부득이한 사유(군복무, 유학, 질병 등)가 발생할 경우 미리 연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신설</li> <li>○ 2011.6.15 법률개정</li> <li>- 갱신기간을 3월에서 6월로 연장</li> <li>- 면허증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날부터 면허증의 효력이 다시 발생하는 규정 신설</li> </ul>
수상레저사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3.28 법률개정</li> <li>- 결격사유의 제한사유 중 파산선고자 규정을 삭제</li> </ul>
수상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7.1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li> <li>- 조종면허 미갱신에 대한 취득자의 자유의사를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규정을 폐지</li> </ul>

53) 구체적으로 규제개선이 이루어진 부분으로는 ①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조종면허 특례규정을 마련, ② 조종면허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정신질환자 등을 삭제,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 ④ 조종면허 갱신기간을 연장, ⑤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범위를 10해리로 확대, ⑥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시 검사요건을 완화, ⑦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것 등이었다.

개선내용	주요 내용
인명구조요원의 자격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7.1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li> <li>- 모든 래프팅기구 1대당 래프팅가이드 1명을 탑승토록 하는 규정을 1~2인승 래프팅기구(카약 등)에 대하여 2~5대당 1명씩의 래프팅가이드를 탑승토록 조정</li> </ul>
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기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7.1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li> <li>-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 등록시 처리기간을 3일에서 즉시로 변경</li> </ul>
기상특보 등 발효시 레저 활동자에 대한 제한규정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3.31 시행규칙개정</li> <li>-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 예보가 발효되었을 경우 연안, 외해 구분없이 획일적 기준을 규정한 것을 기상특보 중 발효와 예보를 구분하고 발효시에만 제한하고 예보시 바람만을 이용하는 요트, 서핑보트 등은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li> </ul>
레저활동에 따른 안전장비 착용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5.13 시행규칙개정</li> <li>- 서핑보트 이용시 구명조끼를 일률적으로 착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서핑보트 활동시 구명조끼와 동일하게 착용하는 안전줄로 대체</li> </ul>
원거리 레저 활동신고자 시스템상 신고로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5.13 시행규칙개정</li> <li>- 출발항으로부터 5해리 이상 떨어진 원거리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경찰관서(파출소)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인터넷을 통해 원거리 신고를 접수하고 접수 즉시 파·출장소 담당자의 휴대폰으로 SMS문자가 발송되어 신고유무를 확인토록 개선</li> </ul>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제도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6.15 법률개정</li> <li>-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조종면허 관련 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li> <l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li> </ul>

개선내용	주요 내용
원거리 수상 레저활동의 신고 범위 확대	○ 2011.6.15 법률개정 - 출발항으로부터 5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관 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10해리로 개선
수상레저기구 검사절차 완화	○ 2011.6.15 법률개정 - 구조변경 등의 이유로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시기가 정기검사 시기와 중복되는 때에는 부분검사인 임시검사 대신 정기검사로 대체하도록 개선
수상레저기구 대여 사업 및 교육사업의 등록요건 완화	○ 2011.6.15 법률개정 -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 -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로 교육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육사업 신고를 하도록 개선

현재 「수상레저안전법」이 규제중심의 법률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며, 지나친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과 안전관리의 소홀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한편 현재의 규제완화조치가 일부 절차적 요건의 완화에 그쳐 수상레저산업의 활성화에 그다지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대부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규정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수상레저사업의 진흥을 위해서 수상레저사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성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sup>54)</sup> 어떻든 수상레저관광의 활성화 차원에서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제의 개선방안을 몇 가지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54) 김경호, **한국 해양레저사업 안전관련 법제의 발전방안**,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7권 6호(2006), 180면.  
또한 현재 수상레저업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전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바, 향후 관광진흥법령에서 수상레저관광을 규율하고자 한다면 이중으로 규제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수상레저의 안전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수상레저사업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를 일반조종면허 1·2급, 요트조종면허로 구분하고 있으며(제4조제2항), 요트를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요트조종면허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요트의 속도는 모터보트나 수상오토바이보다 빠르지 않아 비교적 안전하고 수상레저기구의 사고현황을 보더라도 요트운행사고는 발생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주요 요트선진국은 요트조종과 관련하여 요트조종면허를 발급하지 않고 일반조종면허로 간소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트조종면허를 삭제하던가 아니면 일반조종면허로 요트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요트를 쉽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요트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요트조종면허를 폐지하여 조종면허로 요트조종이 가능하도록 면허체계를 일원화하는 법률개정안도 제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요트는 바람을 이용하여 2개 이상의 돛 방향과 돛 사이의 간격 조작으로 조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엔진동력을 이용하여 핸들로 조작하는 모터보트의 조종방식과 상이한 측면이 있고, 크루즈급 요트의 경우 모터보트와 달리 적당 4명 이상의 운항요원이 필요하며 외항(원양)으로도 운항한다는 측면에서 요트조종자와 동승자, 타 선박의 안전확보 등을 고려하여 요트조종면허의 준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sup>55)</sup> 한편 이와 관련하여 요트조종면허의 경우 면허제도는 존치하되,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요트관련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내용을 이수한 경우 실기시험 및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2011.12.16). 향후 수상레저활동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일단 국민들의 수상레저 활동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요트조정면허를 폐지하여 조종면허로 요트조종이 가능하도록 면허체계를 일원화하는 규제완화는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에서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제33조의 말소등록은 제외) 그 소유자나 점유자는 변경등록을

55) 국토해양위원회,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10.9, 3면 이하.

신청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명)·주소의 변경이나 수상레저기구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4조제1항제2호). 아울러 이 변경등록의무 위반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제59조제2항제4호), 수상레저기구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주소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의무를 규정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를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에서는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하도록 하고,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수상레저의 주 수요계층이 20~30대로서 수상에서의 안전사고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보험대상과 관련하여서는 책임보험 특성상 피보험자 자신의 손해는 제외하고, 위험성의 상이로 인하여 견인기구(모터보트 등)와 피견인기구(수상스키 등)에 대한 보험료는 별개로 취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상레저와 관련한 사고는 대부분 운항부주의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특히, 워터 슬라이드를 예인하는 모터보트 및 수상오토바이 조종자의 부주의에 의해 워터 슬라이드 탑승자 추락시 발생한 사고가 많다. 이러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피견인기구는 운행시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보험료가 고가일 가능성이 높아 수상레저활동자들에게 부담이 매우 커서 수상레저활동을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시킬 우려가 있다.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책임보험규정은 예측치 못한

사고에 대한 대비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보험대상에 피견인기구로 인한 사고를 포함할 경우 보험료가 높아 수상레저활동자들에게 부담이 커서 수상레저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위법령에서 보험가입대상을 견인기구로 한정하는 등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에서는 수상레저사업자는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보험가입기간은 수상레저사업자의 사업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28조제1호). 그러나 실제로 수상레저사업은 사업기간이 4월부터 10월까지로 한정되어 있어서 동절기에는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어렵고 수상레저사업의 규모가 그다지 큰 규모가 아니고 영세사업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휴지기간에는 일정한 보험금 감면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한 경우, 휴업자에 대한 보험가입의무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에서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로서, 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의 배치 또는 탑승을 의무화하고(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나 기관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 아울러 인명구조요원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의 영업구역에 배치하여야 하며, 래프팅가이드는 영업 중인 래프팅기구마다 1명 이상 탑승하여 영업구역의 안전상태와 탑승객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게하는 한편 다만, 승선 정원이 2명 이하인 래프팅기구의 경우에는 래프팅가이드가 다른 래프팅기구에 탑승하여 근접운항하면서 영업구역의 안전상태와 탑승객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안전조치로서 가이드요원의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상레저사업자들이 충분한 가이드를 확보하지 못하여 다른 사업자에 소속한 가이드를 대여하는 등 편법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래프팅가이드를

영업 중인 래프팅기구마다 1명 이상 탑승하도록 하는 것보다 수상레저활동이 행해지는 활동장소 전체에 대해 적정수의 가이드를 정하고, 배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현재 레저용 선박은 산업용 선박과 달리 주로 레저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화물, 여객운송 및 어선 등 산업용 선박과 유사한 안전검사기준을 적용받아서 그 규제의 정도가 심하여 레저용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레저용 선박에 대해서 산업용 선박과 차별화된 검사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플레저 보트’<sup>56)</sup>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2009년 10월 1일부터 플레저 보트 검사 지침(국토해양부예규 제2010-173호, 2010.9.30, 일부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 검사지침은 레저용 선박 기관의 시운전을 통해 기관개방검사를 면제하고 선체의 구조강도 확인방법을 다양화하여 도면제출을 최소화하였으며 만제홀수 선(선박이 최대한 적재할 수 있는 홀수) 표시 생략, 레이더 반사기 등 항해용 용구에 대해서도 현상검사만을 실시하는 등 안전검사기준이 대폭 완화하고 있다. 이러한 검사지침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관 개방검사에 따른 준비비용과 시간이 절약되어 수상레저관광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향후 지속적으로 안전검사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일곱째, 「수상레저안전법」 제46조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장을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우수제조사업장이나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우수사업장에서 제조하거나 정비하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검사나 정기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열악한 수상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업장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국내산업 보호 및 육성에 취지를 둔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 국내 수상레저업계는 대부분 영세한 소형조선업체로 자체 연구개발능력이 부족하여 수상레저용 엔진과 같은 주요핵심부품 생산기반은 미약하며 대부분 선체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모터보트

56) “플레저 보트(pleasure boat)”란 여객선, 유선, 도선 및 어선 등이 아닌 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선체길이(선체의 전단에서 후단까지의 수평거리) 24미터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그리고 소형 플레저 보트란 선체길이 12미터 미만의 플레저 보트를 말한다.

및 요트의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국내 수상레저업체가 영세한 실정에서 우수사업장 인증제도를 두어 신규검사를 면제한다 하여도 외국의 유명 브랜드와의 경쟁에서 국내제품에 대한 구매가 늘어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위해 정부주도의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수상레저관련 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라 하더라도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동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를 망라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제47조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설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할 경우 형식승인을 통해 신규검사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사전적인 안전확보 및 대외적인 공신력 확보에 따른 우량업체의 판매를 촉진하여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저가의 불량제품의 판매를 억제하고 안전한 제품이 생산·판매되도록 대외적인 공신력을 부여하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이러한 공급측면의 노력만으로는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러한 공급측면에서의 노력과 비례할 정도의 수요창출이 되어야 하나 현재 우리의 수상레저 인프라상황은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수요창출을 위해 수상레저활동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며, 수상레저산업의 인프라로서 마리나(marina)<sup>57)</sup>, 피셔리나(fisherina)<sup>58)</sup> 등의 기반시설이 구축되어야 하고, 수상레저활동장소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교통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보트 접안시설 확충 등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57) “마리나(marina)”란 해안가에 방파제 등을 쌓아 파도가 없는 수역을 확보하고, 그곳에 레저보트를 정박시킬 수 있는 시설(계류시설)과 육상에 클럽하우스, 수리소, 적치장(보관소), 급유소 등 레저보트를 타는데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춘 레저보트 전용항구를 말한다.

58) “피셔리나(fisherina)”란 Fish와 marina의 합성어로 생겨난 신조어로서 어항 및 어항 주변해역에서의 어업과 해양성 레크레이션활동과의 공존을 노린 복합시설을 말한다.



### (3) 해사안전법

「해사안전법」은 해상교통, 수산, 관광·레저 등 경제·사회 활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해양공간내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법제로서,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포함)과 해양시설, 물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가능한 모든 종류의 배(수상항공기·수면비행선박 포함), 영해·내수(바다로 선박의 계속적인 항행이 불가능한 하천·호수·늪 등은 제외)에 있는 외국적 선박과 해양시설에 적용된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해사안전법」에서는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수역 또는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의 수역 중 해상안전 및 해상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에서는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나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다만,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해상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4조제3항, 시행령 제10조제1항)

따라서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수역 또는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의 수역 중 해양경찰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에서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나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미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시행규칙 제27조).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시행령 제110조제3항제13호).

현재 이 법령에 따라 관할 해양경찰서에서는 관내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을 고시하고 있으며, 고시된 수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관할 부서에서 해양레저활동으로 허가된 수역이 매우 광범하여 수상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시된 수역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sup>59)</sup>

59) 한편 일부 관할 해양경찰서 고시(평택, 목포 등)에서는 허가예외사유로서, ①「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 4. 기 타

수상레저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나 장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법제의 개편, 수상레저관광활동이 가능한 지역적 범위의 확대와 행위기준 완화를 위한 관련 지구지정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의 경우 군사시설·상수원·자연공원 등의 보호를 위한 각종 지구 내지 지역설정은 복합적인 입지 제한으로 인해 수상레저관광자원의 효율적 개발이 곤란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기존의 법체계에 따르기 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지구지정의 합리적 조정과 용도별 보전·이용방안, 개발추진체계와 지원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법률	향후 검토되어야 할 지구 및 행위제한 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제3조)</li> <li>•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제9조)</li> </ul>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도서의 지정(제4조)</li> <li>• 특정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및 허가(제8조)</li> </ul>
수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제7조)</li> </ul>
수산자원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수면의 지정 및 관리(제46조, 제47조)</li> <li>•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관리(제48조, 제49조)</li> <li>•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제52조)</li> </ul>
자연공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용도지구의 지정(제18조)</li> <li>•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제23조)</li> </ul>

의한 유선 및 도선사업, ②「수산업법」에 의한 어로행위, ③「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해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④「개항질서법」에 의한 단정경기, ⑤구난 및 구조를 위한 스쿠버다이빙 등, ⑥청소작업, ⑦「관광진흥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조성되어 조성계획승인을 받거나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⑧항만등의 수역이 아닌 수역에서 해양레저활동을 위해 항만등을 단순히 통과 또는 항해하는 경우, ⑨해양레저활동이 일부수역에 국한되어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없는 경우, ⑩기타 다른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 등을 열거하고 있다.

관련 법률	향후 검토되어야 할 지구 및 행위제한 규정
자연환경보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제12조)</li> <li>•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제15조)</li> </ul>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제25조)</li> <li>•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제27조)</li> </ul>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변구역의 지정(제4조)</li> <li>•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제5조)</li> </ul>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변구역의 지정(제4조)</li> <li>•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제5조)</li> </ul>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변구역의 지정(제4조)</li> <li>•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제5조)</li> </ul>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변구역의 지정(제4조)</li> <li>•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제5조)</li> </ul>

위의 관련 법제와 관련하여 예컨대, 「수도법」의 경우를 살펴보면 「수도법」 제7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 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제1호).

또한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수영·목욕·세탁·선박운항(수질정화 활동,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운항

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는 제외),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하천법」 제 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법 제7조제3항제2호, 시행령 제12조).

이와 관련하여 수상레저인구의 증가에 부응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누구나 쉽게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법」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수도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도 있다.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목적으로 각종 개발사업 등을 규제하고 수질보전 등을 목적으로 필요한 구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상수원의 물이 유해 물질로 오염되는 것을 막고자 한 입법취지는 충분히 공감되나, 모터보트나 동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오염행위가 없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수상레저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에 일정한 단서규정을 두어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오염행위가 없는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자 각종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많은 사람들이 경관·생태가 수려한 지역을 집중 이용함으로써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우수한 생태·경관지역이 오히려 훼손되거나 파괴될 우려가 크므로,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강력하다. 다만, 특정한 지역에 대한 보호, 훼손된 자연의 회복 등을 위해 사람의 출입을 금지·제한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것도 분명하지만 자연환경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전제로 수상레저활동이 가능한 곳이라면 이들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활용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2012년 12월 21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 개정법률안은 각 수계의 수질 보전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유해물질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방식을 해당 지역의 주민 외에 지역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의 수립 시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특히, 이들 개정법률안은 각 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에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식품접객업 등을 영위하는 시설 외에도 다가구주택, 종교시설, 노인복지주택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등을 추가하는 등 각 수계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수변구역의 국민휴식공간 제공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수변구역을 중심으로 관광·레저 공간을 조성해 국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각 수계의 수질관리에 위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수변구역의 지정이나 행위제한도 일부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 III. 관광진흥법제 개선의 방향 및 검토

수상레저관광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상레저관광의 개념적 요소를 규정하여야 한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수상레저관

광의 개념적 요소를 규율하기 가장 적합한 법률은 관광진흥법제라 할 수 있다. 특히,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의 종류로 ①여행업, ②관광숙박업, ③관광객 이용시설업, ④국제회의업, ⑤카지노업, ⑥유원시설업, ⑦관광편의시설업으로 나누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이를 세분하고 있는 바, 수상레저관광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정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2.5.15 입법예고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수상레저관광업(일부개정령안에는 ‘수상레저관광업’이 아닌 ‘관광수상레저업’으로 표현하고 있다)<sup>60)</sup>을 규정하는 한편 그 개념적 요소로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한 수상레저기구를 관광객에게 대여하여 이용하도록 하거나 관광객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워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	시행령 개정안
<p><b>제 2 조(관광사업의 종류)</b>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p> <p>1. ~ 2. (생 략)</p> <p>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p> <p>가. 전문휴양업</p> <p>나. 종합휴양업</p> <p>다. 자동차야영장업</p> <p>라. 관광유람선업</p> <p>마. 관광공연장업</p> <p>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p> <p><u>&lt;신 설&gt;</u></p>	<p><b>제 2 조(관광사업의 종류)</b>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p> <p>1. ~ 2. (생 략)</p> <p>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p> <p>가. 전문휴양업</p> <p>나. 종합휴양업</p> <p>다. 자동차야영장업</p> <p>라. 관광유람선업</p> <p>마. 관광공연장업</p> <p>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p> <p>사. <u>관광수상레저업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한</u></p>

60) 한편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의 진흥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 법령에 수상레저관광업을 규율하는 경우, 사업의 명칭을 ‘수상레저관광업’보다는 ‘관광수상레저업’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보고서 주제가 ‘수상레저관광’이므로, ‘수상레저관광업’으로 사용한다.

현행 시행령	시행령 개정안
4. ~ 6. (생 략) ② (생 략)	<u>수상레저기구를 관광객에게 대여하여 이용하도록 하거나 관광객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워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u> 4. ~ 6. (생 략) ② (생 략)

한편 「관광진흥법」 제15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미리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그 준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미리 사업계획을 승인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한 사업계획대로 준비하면 사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광수상레저업의 경우 다수의 수상레저기구를 갖추고 또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도 아울러 갖추어야 하므로 사업계획 승인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입법예고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도 이를 사업계획 승인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	시행령 개정안
제12조(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이란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을 말한다. 1. 전문휴양업 2. 종합휴양업 3. 관광유람선업 4. 국제회의시설업 <u>&lt;신 설&gt;</u>	제12조(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이란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을 말한다. 1. 전문휴양업 2. 종합휴양업 3. 관광유람선업 4. 국제회의시설업 5. <u>관광수상레저업</u>

한편 관광수상레저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등록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등록기준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도 정해 두어야 하는 바, 입법에 고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	시행령 개정안
<b>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b>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 바.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b>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b>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 바. (현행과 같음) <u>사. 관광수상레저업</u> (1) <u>장비 및 기구 계류시설, 상하가 시설, 보관장소를 갖추</u> 것 (2) <u>화장실,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u> 것 (3)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안전 관리 및 인명구조에 대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 것

####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해 당 법조문	업 종 별 과 징 금 액
		관광객이용시설업
		(신설)관광수상레저업
1. 법 제4조(등록) 위반 가. 관광사업의 변경 등록 기간을 위반한 경우	법 제4조	<u>80</u>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법 제8조(관광사업 의 양수 등)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	<u>120</u>
4.~13. (현행과 같음)		
14. 법 제78조 (보고·검사) 위반 가.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8조	<u>200</u>



위 반 행 위	해 당 법조문	업 종 별 과 징 금 액
		관광객이용시설업
		(신설)관광수상레저업
나. 관계 공무원이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u>200</u>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2.5.15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에 이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하였다. 여기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관광수상레저업이 신설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현행 시행규칙	시행규칙 개정안
<p><b>제 4 조</b>(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영 제4조 제3항에 따라 비치하여 관리하는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p> <p>1. ~ 7. (생략)</p> <p>8. 국제회의시설업</p>	<p><b>제 4 조</b>(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영 제4조 제3항에 따라 비치하여 관리하는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관광수상레저업</u></p> <p>가. <u>부지 및 건축연면적</u></p> <p>가. <u>수상레저기구의 명칭 및 대수</u></p> <p>나. <u>시설의 종류</u></p>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서 관광수상레저업을 규율할 경우에 현행 「관광진흥법」에 새로운 관광사업의 형태로 추가할 수도 있으며,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규정할 수도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관광수상레저업을 신설하여 규정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일단 관광수상레저업이라는 관광사업유형을 제도화하여 관련 사업수행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관광진

흥법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할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볼 때, 법률차원의 일부규정을 적용배제하거나 관련 조문의 규제내용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하위 법령인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이를 규율하는 것은 법체계상 모순 내지 저촉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법률에 이를 반영하고, 관련 규제요소도 완화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sup>61)</sup>

---

61)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수상레저업을 신설할 경우에는 제3조의 관광사업의 종류의 하나로서 규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의 범위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게 하는 모든 사업으로서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거나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으로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밖에 현행 「관광진흥법」 제16조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①농지전용의 허가, ②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③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④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⑤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점용허가(占有許可) 및 실시계획의 인가, ⑥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⑦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⑧「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⑨분묘의 개장신고(改葬申告) 및 분묘의 개장허가(改葬許可)를 의제하고 있다. 이를테면 요트는 공유수면 점용 외에 항만시설도 사용하여야 하므로, 「항만법」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허가,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등도 의제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 국내 문헌 ]

-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 **관광레저산업 육성방안**, 2010.7.15
- 국토해양위원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 2010.12.
- \_\_\_\_\_,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10.9.
- 국회문화관광위원회, **레저스포츠진흥 기본법안 검토보고서**, 2006.2
-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검토 보고서**, 2011.11.
-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실무**, 2011.
- 김경호, **한국 해양레저사업 안전관련 법제의 발전방안**,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7권 6호, 2006.
- 김윤영, **수상관광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 목진용, **일본의 해양레저관련 법제의 개선**, 월간 해양수산 제20호, 2003.1.
- 박영도, **입법기술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1997.
- \_\_\_\_\_, **관광자원개발 관련 법령체계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 \_\_\_\_\_, **입법학 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9.
-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2006.
- 신동주/손재영, **해양관광발전을 위한 여건분석과 정책과제**, 해양정책연구 제22권2호, 2007.12
- 이익현, **수상레저안전법 해설**, 월간 법제 2000.5.
- 최철호, **해양스포츠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스포츠와 법 제14권 제1호, 2011.

- 한국법제연구원, 수상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연구(워크숍 자료집), 2012.9.25

## [ 국 외 문 헌 ]

- 萩原 愛一, 観光立国と地域活性化をめぐる, レファレンス(国立国会図書館) 2009.9.
- 山崎治, 観光立国に向けて, 레ファレン스(国立国会図書館) 2004.10.
- 福山潤三, 観光立国実現への取り組み—観光基本法の改正と政策動向を中心に—, 調査と情報(国立国会図書館), 2006.11.30.
- 国土交通省 港湾局, 水域を活用した地域活性化方策のガイドライン, 2008.
- 財団法人 関西交通経済研究センター, 小型舟艇を活用した海洋レジャー振興のためのシステム作りに関する調査研究, 2010.
- Deutscher Bundestag, **Infrastruktur und Marketing für den Wassertourismus in Deutschland verbessern**, BT-Drs. 16/10593, 2008.10.15.
- Hamburg Messe und Congress GmbH/DTV, **Grundlagenuntersuchung Wassertourismus in Deutschland, Ist-Zustand und Entwicklungsmöglichkeiten**, Bonn/Hamburg 2003.
- Ralf Scheibe, **ICZM and Tourism - A Field Study. The Present State and the Future Challenges for Tourism in the Odra Lagoon Region**, in : Glaeser Schernewski/Sekścińska Scheibe & Thamm(eds.), Coastal development. The Oder estuary and beyond, Coastline Reports 8 (2007).

파라

## 【부 록 1】 일본의 자치단체의 주요 수상레저 관련 조례

### 1. 武雄市 관광보트장 설치조례

2006.3.1 제정

**제 1 조(설치)** 본 시의 관광사업 진흥 및 시민의 레크레이션의 이용편의에 제공하기 위해 武雄市 관광보트장(이하 「관광보트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 2 조(명칭 및 위치)** 관광보트장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武雄市 관광보트장
2. 위치 : 武雄市武雄町大字永島16355番地2

**제 3 조(사용기간 및 사용시간)** 관광보트장의 보트(이하 「관광보트」라 한다)의 사용기간 및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기간

가. 1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 및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나. 가에 열거한 기간 이외의 일요일, 토요일 및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휴일

2. 사용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 4 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공중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관광보트의 사용에 있어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자
4. 관리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5. 전각호에 열거한 것 이외에 관광보트장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 5 조(사용료)** 관광보트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시 별표에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6 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특별한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 7 조(사용료의 불환부)** 기납부한 사용료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사용자의 귀책에 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제 8 조(지정관리자에 따른 관리)** 관광보트장의 관리는 법인 기타 단체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관리자」라 한다)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 9 조(업무범위)** 지정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관광보트의 이용에 관한 것
2. 관광보트장의 유지관리에 관한 것
3. 전2호에 열거한 것 이외에 관광보트장의 관리운영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이용요금)** ① 시장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관리자에게 관광보트의 이용과 관련한 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을 해당 지정관리자의 수입으로 수수할 수 있게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요금을 지정관리자의 수입으로 수수하게 하는 경우 관광보트를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지정관리자에게 이용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③ 전항에 규정하는 이용요금은 별표에 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정관리자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④ 지정관리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 기준에 따라 이용요금의 감면이나 환부를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3조, 제4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관리자에게 관광보트장의 관리를 하게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규정 중 「시장」은 「지정관리자」로 본다.

**제12조(손해배상)** 사용자는 관광보트장의 시설 기타 부대시설을 손상하거나 오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위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합병전의 武雄市 관광보트장설치조례(이하 합병전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처분, 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해진 처분, 절차 기타 행위로 본다.
3. (경과조치) 생 략



## 2. 武雄市 관광보트장 설치조례 시행규칙

2006.3.1 제정

**제 1 조(취지)** 이 규칙은 武雄市 관광보트장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 2 조(승선권의 교부등)** ① 武雄市 관광보트장의 보트(이하 「관광보트」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는 관계인에게 신청하여 조례 제5조에 규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승선권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② 승선권의 종류 및 양식은 다음과 같다.

1. 로보트 승선권 : 양식 제1호

2. 페달보트 승선권 : 양식 제2호

③ 사용자는 승선시 승선권을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승선시간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는 하선시 하선시간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30분을 넘어 사용한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3 조(보호자등의 동반)** 관광보트를 사용하는 자가 소학생 이하의 자인 경우에는 보호자나 이에 준하는 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제 4 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武雄市 관광보트장의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생략

양식 (생략)

### 3. 山梨県 모터보트업 적정화조례

1977.12.22 제정

2011.3.28 최종개정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모터보트업 적정화지구에서 모터보트업자에 관한 등록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모터보트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양호한 관광레크레이션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음 각호의 용어의 의미는 각각 해당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모터보트 : 추진기관을 가지고 있는 선박 중 해상운송법 제2조제4항에 규정하는 여객선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모터보트업 : 업으로서 정기 또는 부정기로 보터보트를 운항하고 유람 기타 여객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모터보트업자 : 모터보트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업무종사자 : 모터보트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모터보트업을 영위하는 자가 스스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 3 조(모터보트업 적정화지구)** ① 지사는 모터보트업과 관련한 악질적인 호객행위 기타 무질서한 영업활동에 따라 그 지구에서 양호한 관광레크레이션 환경의 유지가 저해된다고 인정되는 지구를 모터보트업 적정화지구(이하 「적정화지구」라 한다)로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적정화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시정촌장(市町村長)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적정화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구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지사는 적정화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그 구역을 고시해야 한다. 적정화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구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 4 조(등록)** 적정화지구내에서 모터보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지사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등록신청)** ① 전조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법인은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용하는 모터보트의 척수
3. 사용하는 부두 기타 발착소 및 매찰소의 위치
4. 업무종사자의 성명 및 주소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서면 등을 첨부해야 한다.

1. 부두 기타 발착소 및 매찰소를 사용하는 권원을 증명하는 서면
2.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서면 등

**제 6 조(등록실시)** ① 지사는 전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사항을 모터보트업자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1. 전조제1항각호에 열거하는 사항
2. 등록연월일
3. 모터보트업자의 등록번호
4. 업무종사자의 등록번호

②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7 조(등록거부)** ① 지사는 등록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어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山梨県 폭력단배제조례 제2조제3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원등(제4호에서 「폭력단원등」이라 한다)
3. 법인으로 그 임원 중 전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4. 폭력단원등이 그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

② 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등록거부에 관해 준용한다.

**제 8 조(등록사항의 변경등의 신고)** ① 모터보트업자는 제5조제1항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관해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모터보트업자는 모터보트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 9 조(요금표시)** 모터보트업자는 모터보트 및 매찰소에 이용자가 판별하기 쉬운 방법으로 요금을 표시해야 한다.

**제10조(요금의 선불)** 모터보트업자는 요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이용자가 승선하기 전에 요금을 명시하고 미리 징수해야 한다. 다만, 승선 중에 이용자로부터 항로변경이 요구되는 등 정당한 이유로 요금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업무종사자의 신분증명서등)** ① 모터보트업자는 그 업무종사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종사자에게 지사가 교부하는 신분증명서를 휴대하도록 하고, 지사가 교부하는 완장을 이용자가 판별하기 쉬운 방법으로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 모터보트업자나 그 업무종사자는 전항의 신분증명서 및 완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모터보트업자는 그 업무종사자의 변경이 있는 때나 모터보터업을 폐지한 때에는 신속하게 해당 신분증명서 및 완장을 지사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12조(업무정지명령등)** ① 지사는 모터보트업자나 그 업무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모터보트업자에 대해 그 업무를 적정하게 하도록 권고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모터보트업자나 그 업무종사자가 이 조례나 이에 따른 처분에 위반한 때
2. 업무종사자가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양호한 관광레크레이션 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해당 명령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모터보트업자에 대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모터보트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때나 전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즉시 전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업무종사자의 신분증명서 및 완장을 지사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13조(악질적인 호객행위금지)** 업무종사자는 적정화지구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모터보트에의 승선을 권유하기 위해 함부로 통행중인 자동차를 정지시켜 공공용에 제공하는 주차장등에 자동차를 유도하는 행위
2. 모터보트에의 승선을 권유하기 위해 공공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해 해당 주차장을 모터보트의 이용자의 전용주차장등이라고 허위 또는 트집을 하거나 위협등의 언동으로 해당 주차장 이용자의 정당한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3. 관광객에 대해 가로막거나 따라다니거나 트집을 하는 등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모터보트업의 승선을 권유하는 행위

**제14조(감시원)** ① 지사는 이 조례에 위반하는 행위의 감시등 관광레크레이션 환경의 보전상황을 감시하도록 하기 위해 감시원을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감시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5조(보고징수 및 출입검사)** 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모터보트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 그 업무에 관해 보고를 요구하거나 해당 직원에게 매찰소, 사무소나 모터보트에 출입시켜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등을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제16조(공표)** 지사는 모터보트업을 영위하는 자나 그 업무종사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조례나 이에 따른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7조(경찰본부장에의 정보제공의뢰)** 지사는 등록신청자가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경찰본부장에 대해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지사에게의 정보제공)** 경찰본부장은 전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그 보유하는 정보에 따라 등록신청자가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사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위임)**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터보트업을 영위한 자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제21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2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2.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1조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자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사람의 업무에 관해 전3조에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사람에 대해 각본조의 형을 과한다.

부칙(2011년 조례제4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생략

## 4. 山梨県 모터보트업 적정화조례 시행규칙

1978.3.14 제정

2011.3.28 최종개정

**제 1 조(취지)** 이 규칙은 山梨県 모터보트업 적정화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 2 조(등록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신청서는 모터보트업자 등록신청서(제1호양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
2.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3. 선명과 선박안전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탑승인원 및 동항에 규정하는 선박검사표의 번호
4. 선박직원 및 소형선박조종자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형선박조종사의 면허취득연월일

③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칙으로 정하는 서면등은 선박안전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선박검사증서의 사본 및 선박직원 및 소형선박조종자법 제23조의5에 규정하는 소형선박조종면허증 사본

**제 3 조(변경신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는 등록사항변경신고서(제2호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제 4 조(업무종사자의 신분증명서등 양식)** 조례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분증명서 양식은 제3호양식, 동항에 규정하는 완장의 양식은 제4호양식과 같다.

**제 5 조(감시원의 임명등)** 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의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부 록 1】 일본의 자치단체의 주요 수상레저 관련 조례

1. 현(県)의 직원

2. 시정촌(市町村)의 직원

3. 학식경험이 있는 자

4. 기타 지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② 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사는 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④ 감시원은 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다음 업무에 종사한다.

1. 조례에 위반하는 행위의 감시

2. 관광레크레이션 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식보급 및 사상고양

3. 기타 관광레크레이션 환경의 보전상황의 감시를 위해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지사는 감시원에 대해 신분증명서(제5호양식) 및 완장(제6호양식)을 교부한다.

**제 6 조(출입검사등을 하는 직원의 신분증명서 양식)** 조례 제15조제2항에 규정하는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의 양식은 제7호양식으로 한다.

부칙(2011년 규칙제6호)

이 규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식(생략)

## 5. 和歌山県 마리아조례

1995.3.20 제정

2009.3.26 최종개정

**제 1 조(설치)** 해양성 스포츠의 진흥 및 레크레이션 활동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和歌山県이 관리하는 항만에 마리아를 설치한다.

**제 2 조(명칭 및 위치)** ① 마리아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명 칭	위 치
和歌山県 和歌山 마리아	和歌山市

② 전항의 마리아 구역 및 면적은 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 3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해당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마리아시설 : 마리아에서 요트 또는 모터보터(이하 「정(艇)」이라 한다)를 사용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 중 和歌山県이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유료시설 : 마리아시설 중 유료로 사용되는 선박보관시설, 계류시설, 상하가교시설, 세정장, 주차장, 샤워, 락카 및 회의실을 말한다.

**제 4 조(행위의 허가)** ① 마리아에서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물품을 판매하는 것
2. 흥행을 하는 것
3. 전시회, 경기회, 강습회 기타 이와 유사한 개최를 위해 마리아를 사용하는 것
4. 기타 지사가 지정하는 행위

② 지사는 전항에 열거한 행위가 공중의 마리나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동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지사는 제1항의 허가에 마리나의 관리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 5 조(행위의 금지)** 마리나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마리나시설을 손상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
2. 유영을 하거나 수산동식물을 채집하는 것
3.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쓰레기, 빈 깡통 기타 오물을 투기하거나 방치하는 것
4. 모닥불 기타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것
5.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것
6.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차량, 정 등을 들여보내거나 주차하는 것
7.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마리나의 이용자에게 현저한 불쾌감을 주는 것
8. 전 각호에 열거한 것 이외에 마리나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

**제 6 조(공작물의 설치)** ① 마리나에서 공작물 기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자사는 전항의 허가에 마리나의 관리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 7 조(사용료)** ① 유료시설 중 별표1 제1항에 열거하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나 제4조제1항 또는 전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에 정하는 사용료를 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사는 공익상의 필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 8 조(감독처분)** ① 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허가취소, 허가의 효력정지 또는 그 조건을 변경하거나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마리나로부터의 퇴거 기타 마리나시설의 적정한 사용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위반한 자
  2.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허가에 붙은 조건에 위반한 자
  3.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② 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전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동항에 규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마리나에 관한 공사를 위해 부득이한 필요가 생긴 때
  2. 마리나의 보전, 정의 안전확보 또는 공중의 마리나이용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 때
  3. 전2호에 열거한 경우 이외에 공익상 부득이한 필요가 생긴 때

**제 9 조(손해배상)** 마리나시설을 손상하거나 멸실한 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관리)** 마리나관리는 지방자치법 제244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 기타 단체로서 지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관리자」라 한다)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지정관리자의 업무)** 지정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리나시설의 이용허가에 관한 업무
2. 마리나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3. 전2호에 열거한 것 외에 마리나의 관리에 관해 지사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제외한 업무

**제12조(지정관리자의 지정기간)** 지정관리자가 지정을 받아 마리나의 관리를 행하는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재지정이 가능하다.

**제13조(지정관리자의 지정신청)** 지정관리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지정관리자의 지정)** 전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기준에 따라 가장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관리자로 지정한다.

1.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마리나의 공정한 이용을 확보할 수 있는 자일 것
2.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마리나의 효용을 최대한으로 발휘되는 자임과 아울러 그 관리와 관련한 경비의 감축이 도모되는 자일 것
3.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사업계획서에 의거한 관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가진 자일 것

**제15조(업무보고의 청취등)** 지사는 마리나의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지정관리자에 대해 그 관리업무 및 경리상황에 관해 정기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를 요구하고, 실지에 조사 또는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6조(개관시간)** ① 마리나시설의 개관시간(이하 「개관시간」이라 한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지정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미리 지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임시로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휴관일)** ① 마리나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 이외의 마리나시설 : 12월 28일부터 익년 1월4일까지 및 화요일(그 날이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휴일(이하 「휴일」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이후에 그 날에 가장 가까운 휴일이 아닌 날
2. 주차장 : 12월 28일부터 익년 1월4일까지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지정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미리 지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마리나시설을 임시로 개관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

**제18조(이용허가)** ① 마리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지정관리자(이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정관리자가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사. 다음 항 및 다음 조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정관리자는 그 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항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마리나시설등을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전2호에 열거하는 경우 외에 마리나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이용금지 또는 제한등)** ① 지정관리자는 마리나시설의 손괴 기타 이유로 마리나의 이용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역을 정하여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지정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허가받은 이용의 목적에 위반한 때
2. 이용자가 이 조례 또는 지정관리자가 지시한 사항을 위반한 때
3. 이용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허가를 받은 때
4.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5. 전각호에 열거한 경우 외에 마리나의 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0조(이용요금등)** ① 지정관리자에게 유료시설 중 별표2에 열거한 시설의 이용에 관련한 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지정관리자는 이용요금을 자기의 수입으로 수수한다.

③ 이용요금액은 별표2에 열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정관리자가 미리 지사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그 금액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기납입된 이용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정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⑤ 지정관리자는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요금을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마리아의 관리를 지정관리자가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사용료를 현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금액은 별표2에 열거한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⑦ 사용료의 환부, 감액 및 면제에 관해서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규정 중 「이용요금」은 「사용료」로, 「지정관리자」는 「지사」로 한다.

**제21조(비밀유지의무)** ① 지정관리자는 마리아가 보유하는 개인정보(이하 이항에서 「보유개인정보」라 한다)의 누설, 멸실이나 손상의 방지 기타 보유개인정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제11조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에 관해 지득한 개인정보의 내용을 고의로 타인에게 알리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마리아의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공작물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和歌山県和歌山마리아에서 이 조례에 따른 개정전의 和歌山県港湾施設管理条例 제4조의 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제8조의 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6. 和歌山県 마리나조례 시행규칙

1995.3.20 제정

2009.7.19 최종개정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和歌山県 마리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마리나의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행위의 허가신청)**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마리나내 행위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양식) 또는 마리나내 행위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2호양식)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3 조(행위제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지사가 지정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업으로서 사진, 영화를 촬영하는 것
2. 업으로서 물품을 대부하는 것
3. 모금, 서명활동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제 4 조(선박보관시설전용이용의 허가기간)** 조례 별표2에 열거하는 시설 중 선박보관시설을 전용이용하는 경우의 허가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 5 조(유료시설의 이용허가제한)** 지정관리자(마리나의 관리를 지정관리자가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사. 이하 이 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같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유료시설의 이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타인에게 불쾌감이 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
2. 마리나시설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3. 지정관리자가 정하는 안전대책을 준수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자
4. 전3호에 열거한 자 이외에 마리나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 6 조(공작물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마리나시설공작물(설비) 설치(변경, 계속)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양식)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7 조(사용료의 납입)** 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0조제6항에 규정하는 사용료는 유료시설의 사용허가시에 그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다만, 지사가 인정하는 때에는 선박보관시설의 전용사용에 관한 사용료에 관해서는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용료나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공작물 기타 설비의 설치와 관련한 사용료는 선납해야 한다. 다만, 미리 특별납부승인신청서(별지 제4호양식)를 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조(권리양도등의 금지)** 조례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유료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제 9 조(입출항신고)** ① 마리나로부터 출항하려는 자는 미리 그 뜻을 지정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마리나로 입항한 자는 입항후 즉시 그 뜻을 지정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0조(급수시설등의 사용)** ① 선박보관시설 및 계류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시설 및 급전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급수시설 및 급전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지정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1조(艇의 표식)** ① 선박보관시설의 전용이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지정관리자로부터 그 허가와 관련한 정(艇)임을 증명하는 표식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표식은 지정관리자가 지시하는 소정의 위치에 게시해야 한다.

**제12조(원상회복)** 지정관리자는 그 지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때나 지정이 취소되거나 기간을 정하여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받은 때에는 그 관리하지 않게 된 시설이나 설비를 신속하게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 다만, 지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지정관리자의 지정)** 지정관리자는 별표 좌란에 열거하는 시설구분마다 지정한다.

**제14조(지정신청)** ① 조례 제13조의 신청서양식은 Dinghy 마리나지정관리자 지정신청서(별지 제5호양식) 또는 Cruiser 마리나지정관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6호양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3조의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하는 시설구분과 관련한 운영관리에 관한 수지예산서
2. 정관이나 기부행위 및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사업보고서, 손익계산서 및 이익처분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4. 단체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 임원의 명부 및 이력을 기재한 서류
6. 단체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7. 전 각호에 열거한 것 이외에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5조(사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지정관리자는 매년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도의 도중에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취소된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해당 취소일 전일까지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관리를 행한 시설구분(이하 이조에서 「시설」이라 한다)과 관련한 관리업무의 실시상황 및 이용상황
2. 이용요금의 수입실적

3. 시설의 관리와 관련한 경비수지상황

4. 전 3호에 열거한 것 이외에 지정관리에 따른 시설관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6조(서류의 경유)**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지사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지정관리자를 경유해야 한다.

**제17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마리나의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지사나 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정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 7. 滋賀県 琵琶湖 레저이용 적정화에 관한 조례

2002.10.22 제정

2011.3.22 최종개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琵琶湖에서 레저활동에 수반한 환경에의 부하상황에 비추어 그 부하의 저감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琵琶湖의 레저이용의 적정화에 관해 현(県), 레저이용자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함과 아울러 현이 행하는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pleasure boat의 항행에 관한 규제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琵琶湖에서 레저활동에 수반한 환경에의 부하 저감을 도모하고 나아가 琵琶湖의 자연환경 및 그 주변에 있어서 생활환경의 보전과 琵琶湖의 양호한 이용환경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琵琶湖 : 하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급하천으로 지정된 琵琶湖、淀川(瀬田川洗堰부터 상류의 구역에 한한다) 및 西之湖와 규칙으로 정하는 내호(内湖)
2. 환경에의 부하 : 사람의 활동으로 琵琶湖의 자연환경 및 그 주변 생활환경과 琵琶湖의 이용환경에 부가되는 영향으로서 琵琶湖의 자연환경 및 그 주변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또한 琵琶湖의 양호한 이용환경을 확보하는데 지장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3. 레저활동 : 레크레이션 기타 여가를 이용하는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4. 레저이용자 : 琵琶湖에서 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pleasure boat :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기타 추진기관으로서의 내연기관 (이하 「기관」이라 한다)을 구비한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중 다음의 선박 이외의 선박을 말한다.

가. 선박법 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어선

나. 해상운송법의 규정에 따른 선박운항사업용에 제공되는 선박

다.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라. 오로지 레저용에 제공되는 선박 이외의 선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선박

6. 수상오토바이 : 소형선박안전규칙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소형선박을 말한다.

7. 적합원동기탑재정 : 2 사이클의 원동기(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의 2 사이클 원동기를 제외한다) 이외의 원동기를 추진기관으로서 구비한 pleasure boat 중 주로 해당 원동기를 이용하여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8. 항행 : 기관을 이용하여 선박이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県の 책무)** ① 현은 琵琶湖에서 레저활동에 수반한 환경에의 부하 저감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한다.

② 현은 琵琶湖에서 레저활동에 수반한 환경에의 부하 저감에 관해 시정(市町)과의 연대를 도모함과 아울러 시정이 실시하는 琵琶湖에서 레저활동에 수반한 환경에의 부하 저감에 관한 시책에 관해 필요한 조정 및 협력을 한다.

**제 4 조(레저이용자의 책무)** ① 레저이용자는 琵琶湖에서 레저활동을 하는데 즈음하여 환경에의 부하 저감에 노력해야 한다.

② 레저이용자는 현이 실시하는 琵琶湖에서 레저활동에 수반한 환경에의 부하 저감에 관한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 5 조(관계사업자의 책무)** ① 琵琶湖에서 레저활동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 (이하 「관계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하는데 즈음하여 琵琶湖에서 레저

활동에 수반한 환경에의 부하 저감을 도모하기 위해 레저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관계사업자는 県이 실시하는 琵琶湖에서 레저활동에 수반한 환경에의 부하 저감에 관한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 제 2 장 레저활동에 수반한 환경에의 부하 저감에 관한 시책

**제 6 조(기본계획의 책정)** ① 지사는 琵琶湖에서 레저활동에 수반한 환경에의 부하 저감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책정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琵琶湖에서 레저활동에 수반한 환경에의 부하 저감에 관한 장기적인 목표, 기본이 되는 방침, 시책의 방향 기타 중요사항을 정한다.

③ 지사는 기본계획의 책정에 있어서 미리 현민, 레저이용자 및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④ 지사는 기본계획을 책정하는데 즈음하여 미리 滋賀県琵琶湖 레저이용적정화심의회 의견 청취한다.

⑤ 지사는 기본계획을 책정한 때에는 이를 공표한다.

⑥ 전3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의 변경에 준용한다.

**제 7 조(홍보, 계발등)** 레저이용자 및 관계사업자의 琵琶湖의 자연환경 및 그 주변 생활환경의 보전과 琵琶湖의 양호한 이용환경의 확보에 관한 이해를 모색하기 위해 홍보, 계발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8 조(현민등의 활동촉진)** 현은 레저이용자, 관계사업자 또는 그 자가 조직하는 단체가 행하는 琵琶湖에서 환경에의 부하가 적은 레저활동의 추진을 위한 활동 및 琵琶湖에서 레저활동에 수반한 환경에의 부하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제공, 조언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 9 조(공공시설의 정비)** 현은 琵琶湖에서 환경에의 부하가 적은 레저활동의 추진 및 琵琶湖에서 레저활동에 수반한 환경에의 부하 저감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을 정비한다.

**제10조(조사연구)** 현은 琵琶湖에서 레저활동에 수반한 환경에의 부하 저감에 관한 시책을 책정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함과 아울러 그 성과를 공표한다.

**제11조(琵琶湖 레저이용감시원의 설치)** 지사는 琵琶湖에서 레저활동에 수반한 환경에의 부하 저감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지도와 계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琵琶湖 레저이용감시원을 설치한다.

### 제 3 장 pleasure boat의 항행에 관한 규제등

**제12조(pleasure boat의 항행을 규제하는 구역)** ① 지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수역을 pleasure boat의 항행을 규제하는 구역(이하 「항행규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가 집합하고 있는 지역, 병원, 학교 또는 보양시설이 존재하는 지역 기타 소음을 방지함으로써 생활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인접하거나 근접하는 琵琶湖의 구역 중 해당 지역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pleasure boat의 항행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2. 수산동물의 증식장 및 양식장과 그에 인접하거나 근접하는 琵琶湖의 구역 중 해당 증식장 및 양식장에서 수산동물의 생육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pleasure boat의 항행으로 발생하는 여파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수조의 양양지 기타 pleasure boat의 항행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함으로써 수조의 생식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琵琶湖의 수역
4. 다양한 레저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琵琶湖의 수역 또는 다양한 레저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琵琶湖岸에 인접하거나 근접하는 琵琶湖의 수역 중 pleasure boat의 항행이 다른 레저이용자에게 현저한 불쾌감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琵琶湖의 레저이용에 관련한 양호한 이용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레저활동에 관련한 적절한 이용조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역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항행규제수역의 지정(동항제1호에 열거한 수역과 관련한 지정에 한한다)은 하천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거리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 ③ 전항에 정하는 것 이외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항행규제수역의 지정은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를 벗어날 수 없다.
- ④ 지사는 항행규제수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시의 장 및 滋賀県 琵琶湖 레저이용적정화심의회 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⑤ 지사는 항행규제수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과 구역안을 공고하고 그 관계도서를 해당 공고를 한 날부터 4주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해야 한다.
- ⑥ 전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은 동항의 열람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구역안에 관해 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⑦ 지사는 항행규제수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뜻과 구역을 공고하고 그 관계도서를 공중의 열람에 제공해야 한다.
- ⑧ 항행규제수역의 지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⑨ 제4항부터 전항까지의 규정은 항행규제수역의 변경 또는 폐지에 준용한다.

**제13조(pleasure boat의 항행금지)** pleasure boat의 조선자는 항행규제수역에서 pleasure boat를 항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전조제1항제3호와 관련한



항행규제수역에서 항행하는 경우로서 제1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을 위해 pleasure boat(전조제1항제2호와 관련한 항행규제수역에서 수상스키, 웨이크보트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위해 용구를 장착한 사람을 태워 항행하는 pleasure boat 및 동항제4호와 관련한 항행규제수역에서 항행하는 수상오토바이를 제외한다)를 항행시키는 경우로서 해당 이동에 있어서 최단경로를 가능한 한 소음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동항제2호와 관련한 항행규제수역에서 항행에서는 가능한 한 과급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항행시키는 때  
가. 항행규제수역에 근접하는 琵琶湖岸과 해당 항행규제수역외의 수역 또는 해당 항행규제수역내의 정류(기관을 정지시키는 정류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정류」라 한다)를 하는 장소와의 사이의 이동  
나. 항행규제수역내의 정류를 하는 장소와 해당 항행규제수역외의 수역 또는 해당 항행규제수역내의 정류를 하는 장소와의 사이의 이동
2. 수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즈음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pleasure boat를 항행시키는 경우
3.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해 pleasure boat를 항행시키는 경우
4. 전3호에 열거한 것 이외에 공익상 필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14조(정지등 명령)** ① 지사는 전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항행규제수역에서 pleasure boat를 항행시키는 조선자 및 항행시킨 조선자에 대해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pleasure boat의 항행을 정지시키는 것
2. 항행과 관련한 pleasure boat를 신속하게 출발항 기타 지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

3.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에 琵琶湖에서 pleasure boat를 항행시키는 것의 금지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관해서는 滋賀県 행정절차조례 제1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적합원동기탐재정 이외의 pleasure boat 사용금지)** 누구든지 적합원동기 탐재정 이외의 pleasure boat(주로 돛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장치를 사용하여 추진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琵琶湖의 수역에 반입하거나 琵琶湖에서 항행시키거나 정류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5조의2(적합증의 표시등)** ① 누구든지 적합원동기탐재정임을 표시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표장(이하 「적합증」이라 한다)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지 않은 적합원동기탐재정을 琵琶湖의 수역에 반입하거나 琵琶湖에서 항행시키거나 정류시켜서는 아니된다.

② 지사는 적합원동기탐재정의소유자(적합원동기탐재정의 매매가 있는 경우에 매주가 해당 적합원동기탐재정의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는 때에는 매주. 이하 같다) 또는 지정정보관업자(현내에서 pleasure boat의 보관을 업으로하는 자로서 이 조의규정에 따른 적합증의 교부청구등의 절차에 필요한 정보의 적절한 관리 및 하천법 기타 관계법령의 준수 기타 pleasure boat의 적정한 보관이 가능한 자로서 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적합원동기탐재정을 보관하는 자로부터의 청구에 따라 해당 적합원동기탐재정과 관련한 적합증을 교부한다.

③ 전항의 청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은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선박번호

3. 선박의 종류

4. 원동기 형식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적합증의 교부를 받은 자(이하 「적합증 피교부자」라 한다)는 적합증이 멸실, 손상이나 그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교부를 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적합증 피교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제3항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열거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동항제4호에 열거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변경후의 pleasure boat가 계속 적합원동기탑재정인 때에 한한다)

2. 적합증과 관련한 적합원동기탑재정의 소유자가 그琵琶湖에서 사용을 폐지한 때

3. 적합증과 관련한 적합원동기탑재정이 적합원동기탑재정이 아니게 된 때

⑥ 적합증 피교부자는 전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즉시 해당 적합증을 제거하거나 말소해야 한다.

**제15조의3(지위의 승계)** ① 적합증 피교부자로부터 적합증과 관련한 적합원동기탑재정을 양수한 자(상속, 합병이나 분할로 해당 적합원동기탑재정을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적합증 피교부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적합증 피교부자인 지정보관업자가 그 pleasure boat의 보관과 관련한 사업(이하 「보관사업」이라 한다)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적합증 교부자인 지정보관업자에 관해서 상속, 합병 또는 분할(그 보관사업의 전부를 승계시키는 것에 한한다)가 있을 때에는 그 보관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자 또는 상속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분할로 그 보관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법인은 그 적합증 피교부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전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합증과 관련한 적합원동기탑재정을 새로이 보관하게 된 지정보관업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합원동기탑재정과 관련한 적합증 피교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④ 전2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합증 피교부자인 지정보관업자가 적합증과 관련한 적합원동기탑재정의 보관을 하지 않게 된 때나 전조제2항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적합원동기탑재정의 소유자는 그 적합증 피교부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제1항, 제2항이나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적합증 피교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5조의4(지정보관업자의 지정신청등)** ① 제15조의2제2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은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pleasure boat의 보관과 관련한 시설명칭 및 소재지
3. pleasure boat의 보관방법
4.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사는 전항의 지정을 한 때 그 뜻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및 동항의 지정을 취소한 때도 또한 같다.

③ 지정보관업자는 제1항각호에 열거한 사항(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을 때와 보관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전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지정보관업자가 그 보관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지정보관업자에 관해 상속, 합병이나 분할(그 보관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 지정보관업자의 지위의 승계에 관해 준용한다.

⑤ 전각항에 정한 것 이외에 지정보관업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의5(적합증의 부정사용등 금지)** ① 적합증은 해당 적합원동기탑재정 이외의 pleasure boat에 사용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행사의 목적으로 적합증과 구분하기 어려운 외관을 가지는 물건을 제조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개조한 pleasure boat의 항행금지)** pleasure boat의 조선자는 소음기의 제거, 소음기의 소음저감기구의 제거 기타 소음을 방지하는 기능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는 개조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한 pleasure boat를琵琶湖에 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pleasure boat의 조선자등의 준수사항)** ① pleasure boat의 조선자는琵琶湖岸에서 pleasure boat의 기관 회전수를 고의로 증가시켜 현저히 타인에게 고통을 미치려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

② pleasure boat의 조선자는琵琶湖岸 부근에서 pleasure boat를 항행시키는 때에는 해당 pleasure boat의 항행으로 발생하는 소음등에 의해 다른 레저이용자등에게 현저한 고통이 미치지 않도록 속력을 감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pleasure boat의 조선자는琵琶湖에서 pleasure boat를 항행시키는 때에는 수도취수시설, 장치 기타 공작물에의 충돌에 수반한琵琶湖의 연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공작물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 항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pleasure boat에 급유를 하는 자는 琵琶湖에의 연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급유의 실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7조의2(권고)** 지사는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에 대해 그 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의3(pleasure boat의 이용적정화 추진에 관한 협정)** ① 지사는 琵琶湖에서 pleasure boat 항행에 수반한 환경에의 부하 저감을 도모하기 위해 현내 pleasure boat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와 pleasure boat의 이용적정화 추진에 관한 협정(이하 이 조에서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정은 다음 사항을 정한다.

1. 협정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 협정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관리하는 자나 이용하는 자가 행하는 pleasure boat 항행에 수반한 환경에의 부하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3. 협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4. 협정의 변경이나 폐지절차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사는 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한다.

## 제 4 장 외래어(外来魚)의 재방류 금지등

**제18조(외래어의 재방류 금지)** 레저활동으로서 어류를 채취하는 자는 외래어(블루길, Largemouth bass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어류를 말한다)를 채취한 때에는 이를 琵琶湖 기타 수역에 방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수조의 생식지 배려)** 레저이용자는 琵琶湖에서 레저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수조(水鳥)의 영양지 기타 수조의 생식지(生息地) 보전에 배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 4 장의2 레저이용의 적정화에 관한 지역협정

**제19조의2(레저이용의 적정화에 관한 지역협정)** ① 지역주민, 레저이용자, 관계사업자나 이들 자가 조직하는 단체는 琵琶湖에서 레저활동에 수반한 환경에의 부하 저감을 도모하기 위해 그 지역에서 琵琶湖의 레저이용의 적정화에 관한 협정(이하 이 조에서 「지역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지사에게 제출하여 해당 지역협정이 적당한 취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지역협정에는 다음 사항을 정한다.

1. 지역협정의 목적 및 대상 지역
2. 琵琶湖의 자연환경 및 그 주변 생활환경의 보전과 琵琶湖의 양호한 이용환경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
3. 지역협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4. 지역협정의 변경이나 폐지절차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사는 제1항의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지역협정이 琵琶湖에서 레저활동에 수반한 환경에의 부하 저감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인정을 한다.

④ 지사는 제1항의 인정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인정과 관련한 지역협정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시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⑤ 지사는 제1항의 인정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공고하고 해당 인정과 관련한 지역협정을 해당 공고일부터 2주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해야 한다.

⑥ 전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동항의 열람기간 만료일까지 열람에 제공된 지역협정에 관해 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⑦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는 그 인정과 관련한 지역협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사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⑧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협정의 변경에 준용한다.
- ⑨ 지사는 제1항 또는 제7항의 인정을 받은 지역협정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지도, 조언 기타 지원을 한다.
- ⑩ 지사는 제항 또는 제7항의 인정을 한 때에는 그 인정과 관련한 지역협정의 내용을 공표한다.

## 제 5 장 환경배려제품의 개발 및 보급

**제20조(환경배려제품의 개발등)** ①琵琶湖에서 레저활동에 사용되는 제품의 제조를 하는 사업자는 해당 제품이 수질보전, 소음방지 기타 환경보전에 배려한 것이 되도록 개발 및 제조에 노력해야 한다.

②琵琶湖에서 레저활동에 사용되는 제품의 판매를 하는 사업자는 그 판매에 있어서 수질보전, 소음방지 기타 환경보전에 배려한 제품(이하 「환경배려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제공 기타 환경배려제품의 보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1조(환경배려제품의 사용)** 레저이용자는琵琶湖에서 레저활동을 하는데 환경배려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2조(환경배려제품의 사용촉진)** ①현은 레저이용자에 의한 환경배려제품의 사용촉진을 위해 환경배려제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상황 등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하고, 환경배려제품에 관한 정보 및琵琶湖에서 레저활동에 사용되는 제품과 관련한 환경에의 부하에 관한 정보제공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지사는 전항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에 대해 환경배려제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상황 등에 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제 6 장 滋賀県琵琶湖 레저이용적정화심의회

제23조(滋賀県琵琶湖 레저이용적정화심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사의 부속기관으로서 滋賀県琵琶湖 레저이용적정화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회는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이외에 지사의 자문에 응하여 琵琶湖에서 레저활동에 수반한 환경에의 부하 저감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③ 심의회는 전항의 조사심을 하는 이외에 琵琶湖에서 레저활동에 수반한 환경에의 부하 저감에 관한 사항에 관해 지사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4조(심의회의 조직등) ① 심의회는 위원 15인 이내로 조직한다.

② 위원은 학식경험이 있는 자, 현민으로부터 공모한 자 기타 지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⑤ 전각항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 7 장 잡 칙

제24조의2(보고 및 출입조사) ① 지사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pleasure boat의 소유자, pleasure boat의 보관이나 인양 하강을 하는 자 기타

관계자에 대해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그 직원에게 그 자의 시설 기타 pleasure boat가 소재한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pleasure boat, 선박검사증서, 소형선박조종면허증 기타 조선자의 본인확인이 가능한 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조사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조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해 인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제25조(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 8 장 별 칙

**제26조** 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적합증의 교부(동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에 의한 재교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2. 제1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7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사람의 업무에 관해 전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사람에 대해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8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5조의5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동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동항의 규정에 따른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거나 허위답변을 한 자

**제29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1.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제15조의2제2항의 지정을 받은 자
3. 제15조의2제5항, 제15조의3제5항(제15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5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4. 제1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칙(2011년 조례 제25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의 규정은 해당 각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 8. 滋賀県 琵琶湖 레저이용 적정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03.3.28 제정

2011.9.30 최종개정

**제 1 조(취지)** 이 규칙은 滋賀県琵琶湖의 레저이용 적정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 2 조(규칙으로 정하는 내호)**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칙으로 정하는 내호(内湖)는 별표와 같다.

**제 3 조(규칙으로 정하는 선박)** 조례 제2조제5호의 규칙으로 정하는 선박은 다음과 같다.

1. 준설선, 모래채취선 기타 작업선
2. 유어선업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어선
3. 오로지 학교등(학교교육법 제1조에 규정하는 학교, 동법 제124조에 규정하는 전수학교 및 동법 제134조제1항에 규정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교육이나 학술연구용에 제공되는 선박
4. 독립행정법인등(독립행정법인등이 보유하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지방독립행정법인(지방독립행정법인법 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유하는 선박
5. 오로지 요트, 보트 등과 관련한 경기대회나 훈련에서 심판 또는 구호용으로 제공되는 선박
6. 오로지 선박직원 및 소형선박조종자법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해기사국가시험, 동법 제1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선박직원양성시설에서 선박직원의 양성, 동법 제23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소형선박조종사국가시험이나 동법

제23조의10제1항에 규정하는 소형선박교습소에서 교습(이하 「해기사국가시험등」이라 한다)용에 제공되는 선박

7. 오로지 수질, 저질(底質) 및 지질조사, 건설공사, 토목시설유지관리업무, 측량업무와 이와 유사한 업무용에 제공되는 선박

**제 3 조의2(규칙으로 정하는 방식)** 조례 제2조제7호의 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은 연소실에 직접 연료를 분사하는 방식, 연료의 분사를 전자적으로 제어하고 촉매로 배출가스를 정화하는 방식 및 디젤방식으로 한다.

**제 3 조의3(표식의 설치)** 지사는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항행규제수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항행규제수역내 또는 해당 항행규제수역에 인접하는 호안에 이를 표시하는 표식으로서 다음 각호의 항행규제수역의 구분에 상응하여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표식을 설치한다.

1.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관련한 항행규제수역 제1호 표식(별지 제1호양식)
2.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 관련한 항행규제수역 제2호 표식(별지 제2호양식)
3. 조례 제12조제1항제4호에 관련한 항행규제수역 제3호 표식(별지 제3호양식)

**제 4 조(항행규제수역의 지정과 관련한 규칙으로 정하는 거리)**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칙으로 정하는 거리는 350 미터로 한다.

**제 5 조(항행규제수역의 지정안의 공고)** 조례 제12조제5항(동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다음 사항에 관해 행한다.

1. 지정, 변경이나 폐지하려는 항행규제수역의 구역
2. 지정, 변경이나 폐지와 관련한 항행규제수역이 조례 제12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3. 항행규제수역의 지정, 변경이나 폐지안의 열람장소

**제 6 조(항행규제수역에서 항행금지의 적용제외)** 조례 제13조제4호의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등에서 교육이나 학술연구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pleasure boat를 항행시키는 경우
2. 독립행정법인등이나 지방독립행정법인의 업무용에 제공하기 위해 pleasure boat를 항행시키는 경우
3. 요트, 보트 등과 관련한 경기대회나 훈련에서 심판 또는 구호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pleasure boat를 항행시키는 경우
4. 해기사국가시험등에 제공하기 위해 pleasure boat를 항행시키는 경우
5. 해기사국가시험등의 사전강습등으로서 선박직원 및 소형선박조종자법시행규칙 제135조제6호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pleasure boat를 항행시키는 경우
6. 제레 기타 지역의 관습에 수반하여 pleasure boat를 항행시키는 경우
7. 수질, 저질 및 지질조사, 건설공사, 토목시설유지관리업무, 측량업무 및 이와 유사한 업무용에 제공하기 위해 pleasure boat를 항행시키는 경우

**제 6 조(적합증)** 조례 제15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적합증(이하 「적합증」이라 한다)은 선체첨부용적합증(별지 제4호양식) 및 원동기첨부용적합증(별지 제5호양식)으로 한다.

**제 6 조의2(적합증의 표시방법)** ① 적합증은 다음 각호에 따른 적합증구분에 상응하여 해당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선체첨부용적합증은 양선측에 항행시에도 선외에서 보기 쉬운 장소에 첨부할 것
2. 원동기첨부용적합증은 선외기에 항행시에도 선외에서 보기 쉬운 장소에 첨부할 것(적합증과 관련한 적합원동기탑재정이 주로 선외기를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적합증은 전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지사가 인정하는 때에는 지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제 6 조의3(지정보관업자 보관시설표장)** ① 지사는 지정보관업자가 적합증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에 적합증을 교부하는 때에 해당 적합증과 아울러 지정보관업자 보관시설표장(별지 제6호양식)을 교부한다.

② 전항의 지정보관업자 보관시설표장은 적합원동기탑재정의 양선측의 선체 첨부용적합증에 근접한 곳에 첨부한다.

**제 6 조의4(적합증의 교부청구)** ① 조례 제15조의2제3항의 서면은 적합증교부청구서(별지 제7호양식)로 한다.

② 조례 제15조의2제3항제5호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추진기관으로서 구비하는 원동기의 방식, 기관종류 및 주된 추진장치인지의 여부
2. 소유자의 성명(법인은 그 명칭)

③ 제1항의 서면에는 적합증과 관련한 적합원동기탑재정에 관한 선박안전법 제9조제1항의 선박검사증서 및 동법 제10조의2의 선박검사수첩(이하 「선박검사증서등」이라 한다)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15조의2제2항의 청구를 하려는 자가 지정보관업자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의5(적합증 재교부청구)** ① 조례 제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재교부청구는 적합증재교부청구서(별지 제8호양식)에 따라 행한다.

② 전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재교부청구에 준용한다.

**제 6 조의6(변경등 신고)** ① 조례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적합원동기탑재정변경, 폐지신고서(별지 제9호양식)에 따라 행한다.

② 조례 제15조의2제5항제1호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신고서에는 선박검사증서등의 사본 기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동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려는 적합증 피교부자가 지정보관업자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의7(적합증 피교부자의 지위승계의 승인신청)** 조례 제15조의3제3항의 승인신청은 지정보관업자에 의한 적합증 피교부자지위승계 승인신청서(별지 제10호양식)을 지사에게 제출한다.

**제 6 조의8(적합증 피교부자의 지위승계신고)** 조례 제15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는 적합증 피교부자 지위승계 신고서(별지 제11호양식)에 따라 행한다.

**제 6 조의9(지정보관업자의 지정신청)** ① 조례 제15조의4제1항의 신청서는 지정보관업자지정신청서(별지 제12호양식)로 한다.

② 조례 제15조의4제1항제4호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관하는 pleasure boat의 수
2. 보관시설의 상주관리자의 성명 및 직책
3. 양용을 위한 시설이나 기구유무 및 이를 가지는 경우에는 명칭 및 조작하는 직원의 유무
4. 보관하는 pleasure boat의 출정 및 입정을 관리하는 방법
5. 지정보관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 교부를 받은 적합증과 관련한 적합원동기탑재정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제5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음을 지체없이 파악하는 방법
6. 하천법 기타 관계법령의 허가등 상황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pleasure boat의 소관에 관련한 시설(이하 「보관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도
2. 보관시설의 평면도
3. 지정받으려는 자의 주민표 사본(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



**제 6 조의10(지정보관업자의 지정등 고시)** 조례 제15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는 다음 사항에 관해 행한다.

1. 지정, 지정변경이나 지정취소와 관련한 지정보관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지정, 지정변경이나 지정취소 종별
3. 전호의 사유가 발생한 연월일

**제 6 조의11(지정보관업자의 변경등 신고)** ① 조례 제15조의4제3항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6조의9제2항제1호에 열거한 사항
2. 제6조의9제2항제2호에 열거한 사항(관리자가 부재인 경우를 제외한다)
3. 전2호에 열거한 것 이외에 pleasure boat의 적정한 보관에 지장이 없다고 지사가 인정한 사항

② 조례 제15조의4제3항에 규정하는 신고는 지정보관업자변경, 폐지신고서(별지 제13호양식)에 따른다.

③ 전항의 신고가 변경에 관련한 경우에는 동항의 신고서에는 해당 변경과 관련한 제6조의9제3항각호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 6 조의12(지정보관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조례 제15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조례 제15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지정보관업자 지위승계신고서(별지 제14호양식)에 따른다.

② 전항의 신고서에는 지위승계의 원인이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 7 조(소음방지기능에 현저한 지장을 미치는 개조)** 조례 제16조의 소음방지 기능에 현저한 지장을 미치는 개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의 개조를 말한다.

1. 소음기 제거
2. 소음기의 소음저감기구 제거
3. 소음기의 소음을 저감하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소음기 교환

**제 8 조(규칙으로 정하는 어류)** 조례 제18조의 규칙으로 정하는 어류는 블루길, Largemouth bass, Smallmouth bass로 한다.

**제 8 조의2(지역협정의 인정관련 공고)** 조례 제19조의2제5항(동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다음 사항에 관해 행한다.

1. 인정과 관련한 지역협정 개요
2. 인정과 관련한 지역협정 열람장소

**제 9 조(심의회 회장)** ① 滋賀県琵琶湖 레저이용적정화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회장을 두고, 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② 회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③ 회장이 사고가 있는 때나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0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심의회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이 없으면 회의를 개의, 의결할 수 없다.

④ 심의회의 의사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1조(관계자의 출석)** 심의회는 필요가 있는 때에 회의의 의사에 관계있는 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설명을 듣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사무)** 심의회의 사무는 滋賀県琵琶湖 환경부에서 처리한다.

**제13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심의회에 자문하여 정한다.

**제14조(신분증명서)** 조례 제24조의2제2항의 증명서는 출입조사원증(별지 제15호양식)으로 한다.

부칙(2011년 규칙 제34호)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별지양식 (생략)

## 9. 大阪北港 요트하버(Yacht harbor)조례

1987.3.18 제정

2000.4.1 최종개정

**제 1 조(설치)** 大阪北港 요트하버(이하 「요트하버」라 한다)를 大阪市此花区常吉 2丁目에 설치한다.

**제 2 조(목적)** 요트하버는 해양성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바다에 친숙할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업)** 요트하버는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요트 및 요트이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
2. 요트에 관한 강습회를 개최하는 것
3.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4 조(사용허가)** 별표에 열거한 요트하버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전조제2호에 규정하는 강습회를 수강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사용료)** ① 전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에 열거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사용료의 징수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 6 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공익상 필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 7 조(사용료의 환부)** 기 납부한 사용료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제 8 조(권리양도등의 금지)**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요트하버의 시설(이하 「사용 시설」이라 한다)을 전대할 수 없다.

**제 9 조(행위금지)** 요트하버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요트하버의 시설을 손상하거나 오손하는 것
2. 시장이 정하는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것
3. 타인에게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
4. 타인의 불쾌감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것
5. 전각호에 열거한 것 이외에 요트하버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장이 정하는 것

**제10조(행위제한)** ① 요트하버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물품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것
2. 경기대회, 전시회 기타 이와 유사한 개최를 위해 요트하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하여 이용하는 것
3. 촬영을 하는 것
4. 벽보 기타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
5. 전각호에 열거한 것 이외에 요트하버의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장이 정하는 것

②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요트하버의 관리상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감독처분)** ① 시장은 요트하버를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자에 대한 허가취소, 허가의 효력정지나 허가에 붙인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자에 대해 행위중지, 요트하버로부터의 퇴장, 요트하버시설의 원상회복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나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의 규정 또는 이들 규정에 따른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2.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붙인 조건에 위반하는 경우
3.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요트하버의 관리상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요트하버를 이용하는 자에 대해 전항에 규정하는 처분을 하거나 동항에 규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사용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해야 한다.

**제13조(원상회복의무)**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면료된 경우나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자기의 비용으로 사용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요트하버의 시설을 손상하거나 멸실한 자는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00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1. 제8조, 제9조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

②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그 징수를 면탈한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50,000엔을 넘지 않는 때에는 50,000엔으로 한다)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부 록 1】 일본의 자치단체의 주요 수상레저 관련 조례

**제16조(관리위탁)** 요트하버의 관리에 관해서는 재단법인 大阪港開発技術協会에 위탁한다.

**제17조(시행세목)**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2000년 4월 1일 조례 제66호)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10. 大阪北港 요트하버(Yacht harbor)조례 시행규칙

1987.6.6 제정

2012.4.1 최종개정

**제 1 조(취지)** 이 규칙은 大阪北港 요트하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 2 조(공용일등)** ① 大阪北港 요트하버(이하 「요트하버」라 한다)의 공용일 및 공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공용일 : 1월 5일부터 12월 27일까지[(수요일, 그 날이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휴일(이하 「휴일」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및 매월 마지막 화요일(그 날이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을 제외한다.]

2. 공용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요트를 제공하는 날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강습회를 개최하는 날은 별도로 시장이 정한다.

**제 3 조(사용허가신청)**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요트하버의 시설사용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제1호양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시설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용허가시에 사용권을 교부하는 시설

2. 大阪市 스포츠정보·시설이용네트워크시스템(이하 「스포츠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

②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강습회의 수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호양식에 따른 수강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4 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타인에게 불쾌감이 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
  2. 요트하버의 시설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3. 요트하버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그 자에게 위험이라고 인정되는 자
  4. 전3호에 열거한 것 이외에 요트하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정치장(艇置場)을 이용할 수 있는 요트는 정장(艇長) 5미터 이내의 요트로서 센터보드의 상하를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제 5 조(허가증등의 교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제3조제1항제2호에 열거하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외한다)를 한 때에는 허가증, 사용권이나 수강증을 교부한다.

**제 6 조(허가기간)** 정치장 및 선구라카의 사용허가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 7 조(사용료)** 조례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제 8 조(사용료 산정방법)** 사용료가 월액으로 정해져 있는 시설의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나 그 기간에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 그 사용기간이나 단수가 15일 이내인 때에는 1개월분의 2분의 1, 15일을 넘는 때에는 1개월분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제 9 조(사용료 납부시기)** 사용료는 허가시(스포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받은 사용허가와 관련된 사용료는 시장이 지정하는 날)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료가 현저히 고액인 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후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감액이나 면제는 별표2와 같다.

**제11조(사용료 감면신청)** 전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감액이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3호양식에 따른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사용료 환부)** 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의 귀책으로 할 수 없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허가의 효력을 정지한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행위금지)** 조례 제9조제5호에 규정하는 요트하버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장이 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모닥불 기타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는 것
2. 시장이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차량을 진입시키는 것
3. 시장이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쓰레기, 빈깡통 기타 오물을 투기하거나 방치하는 것
4. 요트하버의 수역내에서 수영이나 낚시를 하는 것
5. 죽목을 벌채하거나 식물을 채취하는 것
6. 토석, 죽목등의 물건을 야적하는 것
7. 토석의 채취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8. 기타 시장이 정하는 행위

**제14조(행위제한)** 조례 제10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요트하버의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장이 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모금, 서명활동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
2. 가솔린, 프로판가스 기타 위험물을 반입하거나 저장하는 것
3. 수리범위 이내의 장소에서 정(艇)의 수리를 하는 것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행위

**제15조(행위허가 신청)**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4호양식에 따른 행위허가신청서를, 허가를 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5호양식에 따른 행위변경허가신청서를 각각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입정제한)** 요트하버에 입정(入艇)할 수 있는 요트는 다음의 요트에 한한다.

1. 조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가 제공하는 요트
2.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정치장의 사용허가와 관련한 요트
3.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요트

**제17조(위험방지를 위한 지시)** 시장은 폭풍우등에 따른 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출항제한수를 넘는 출항이 예상되는 경우 기타 해상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트하버의 이용자에 대해 출항금지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8조(입출항신고)** ① 요트하버에서 출항하려는 자는 미리 그 뜻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요트하버에서 출항한 자는 공용시간이 종료하기 30분전까지 입항하고 즉시 그 뜻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9조(시행세목)**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향만국장이 정한다.

부칙(2012.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별지양식 (생략)

## 11. 北海道 pleasure boat 등의 사고방지등에 관한 조례

2003.3.14 제정

2010.3.31 최종개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수역에서 pleasure boat 등의 항행에 수반한 위험 및 수난사고 등을 방지하고, pleasure boat 등과 관련한 수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수역이용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수역」이란 해역, 하천, 호소 기타 pleasure boat 등이 항행할 수 있는 수역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pleasure boat 등」이란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기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유어 기타 레크레이션의 용도로 제공되는 선박 중 다음의 선박 이외의 것을 말한다.

1. 주로 노를 사용하여 운전하는 선박 또는 추진기관이 없는 선박
2. 해상운송법 제2조제항에 규정하는 선박운항사업, 유어선업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어선업, 기타 법령에 의해 수난사고 등의 방지조치가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용에 제공되는 선박

③ 이 조례에서 「조종자」란 pleasure boat 등의 선장으로서 선박직원 및 소형선박조종자법 제2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조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소형선박조종사, 기타 pleasure boat 등에 승선하여 조종할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④ 이 조례에서 「소유자등」이란 pleasure boat 등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차의 경우 임차인, 기타 pleasure boat 등을 상시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자기를 위해 그 pleasure boat 등을 항행용에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제공사업자」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pleasure boat 등을 임대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사업(해상운송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선박대여업을 제외한다. 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 2 장 관계자의 책무

### 제 1 절 조종자의 책무

**제 3 조(유자격자의 자기조종)** 조종자는 pleasure boat(수상 오토바이를 제외한다)가 출항하거나 좁은 통로를 통과하는 경우 또는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는 경우, 기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pleasure boat를 조종하여야 한다.

**제 4 조(비정상상태에서의 조종금지)** 조종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 기타 이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pleasure boat 등을 조종하거나 해당 상태의 자에게 조종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제 5 조(위험조종의 금지)** 조종자는 충돌 기타 위험을 야기시키는 속도로 pleasure boat 등을 유영자에게 접근하거나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방법으로 pleasure boat 등을 조종하거나 다른 자에게 조종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제 6 조(구명동의를 착용)** 조종자는 pleasure boat 등에 승선하는 자(이하 「승선자」라 한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고 자신도 착용하여야 한다.

**제 7 조(기타 수난사고등 방지조치)** 조종자는 출항전의 검사의 실시, 해상 및 기상에 관한 상황의 확인, 적정한 경계의 실시, 휴대전화 등 긴급시의 통보 수단 및 연락체제의 확보, 출입항장소 및 승선자에 관한 기록의 정리 기타 수난사고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8 조(수난사고등 발생시의 대응)** 조종자는 pleasure boat 등의 조종으로 수난 사고등을 발생시킨 때에는 즉시 부상자를 구호하고 수역에서 위험을 방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아울러 인접 시정촌장(市町村長), 경찰관 또는 해상보안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pleasure boat 등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절 소유자등의 책무

**제 9 조(조종자의 승선)** 소유자는 pleasure boat 등을 조종하는 자로서 조종자를 승선시켜야 한다.

**제10조(수난사고등 발생시의 대응)** 소유자는 pleasure boat 등과 관련한 수난사고등의 발생을 안 때에는 인접 시정촌장, 경찰관 또는 해상보안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일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수난사고등 방지조치)** 소유자등은 pleasure boat 등을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제공사업에 따른 임대등을 제외한다)에는 수난사고등의 방지를 위해 조종자의 승선확인 기타 제공사업자의 수난사고등 방지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pleasure boat 등 적정관리)** 소유자는 스스로의 책임으로 pleasure boat 등의 계류보관장소를 확보하고 그 적정한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등에 대한 조치)** 소유자는 pleasure boat 등의 수난사고등으로 발생한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손해의 배상과 시정촌장에 대한 구호비용의 납부에 대비하여 미리 보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 3 절 제공사업자의 책무

**제14조(사업개시의 신고)** 제공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그 사업개시일 30일전 까지 지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1. 성명 및 주소(법인은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용 pleasure boat 등의 명세 및 개시하려는 사업의 개요
3. 사업개시 연월일
4. 사용 pleasure boat 등을 관리하는 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 및 사용 pleasure boat 등과 관련한 계류보관장소의 소재지
5. 수난사고등의 방지를 위해 강구한 조치의 개요
6. 손해배상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7. 기타 수난사고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15조(수난사고등의 방지조치등)** ① 제공사업자는 수난사고등의 방지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pleasure boat 등의 제공을 받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제공하는 pleasure boat 등의 명칭, 기간, 항행예정수역, 수난사고등 발생시의 연락처 기타 수난사고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이용자대장」이라 한다)를 관리사무소에 비치할 것
2. 제공하는 pleasure boat 등에 관해 구명동의등을 비치함과 아울러 긴급시의 통보수단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설비(이하 「수난사고등 방지설비」라 한다)의 확보에 노력할 것
3. pleasure boat 등의 제공에 즈음하여 수난사고등 장비설비의 구비상황 기타 수난사고등 방지상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것
4. pleasure boat 등의 제공에 즈음하여 제공기간이 장기간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에 항행예정수역과 관련한 해상 및 기상과 해수욕장 및 어업시설의 위치 기타 안전항행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노력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할 것

5. 제공하는 pleasure boat 등에 조종자가 승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승선해야 할 조종자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pleasure boat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
6. pleasure boat 등의 제공후 즉시 항행이 예정되는 경우로서 강풍, 풍랑, 안개 기타 해상 및 기상상황에서 pleasure boat 등의 항행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pleasure boat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 조종자로서 승선하는 자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 기타 이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또한 같다.
7. 조종자의 책무 및 이용자가 수난사고등 방지상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해 이용자에 대해 제시 또는 pleasure boat 등내에 게시함으로써 주지할 것
- ② 제공사업자는 제공한 pleasure boat 등에 관련한 수난사고등의 발생을 안 때에는 인접 시정촌장, 경찰관 또는 해상보안관에게 통보하고 그 수난사고등과 관련한 구난업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 4 절 승선자의 책무 및 어업시설피해의 방지등

**제16조(승선자의 책무)** 승선자는 조종자로의 구명동의의 착용 기타 수난사고등 방지상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어업시설피해의 방지등)** ① pleasure boat 등은 수산동식물의 증식시설 또는 정치망등의 어구, 어로중의 어선에 근접하는 등 어업시설 및 설비에 위험을 초래하는 방법으로 조종해서는 안된다.

② pleasure boat 등을 사용하여 유어를 행하는 자는 수산자원이 도민 나아가 국민전체의 공유재산인 점에 비추어 해당 자원이 지속적으로 이용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 3 장 지사(知事)등의 조치

#### 제 1 절 수역의 이용조정

**제18조(수역이용조정구역)** ① 지사는 수난사고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역이용조정구역을 지정하여, pleasure boat 등의 항행 또는



pleasure boat 등을 사용하여 행해지는 레크레이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지사는 시정촌 기타 관계되는 곳으로부터 신청에 의해 수역이용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수역이용조정구역은 항칙법 기타 법령에 의해 산박교통등의 제한 또는 금지되는 구역이외의 구역으로 하고, 사람이 유영하고 선박이 빈번하게 항행하거나 어업시설이 설치되고 기타 pleasure boat 등의 항행 또는 이를 사용한 레크레이션활동에 수반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수역에 관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에 한정되어야 한다.

④ 수역이용조정구역은 표식의 설치 기타 방법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9조(지정절차)** ① 지사는 수역이용조정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수역이용조정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사는 수역이용조정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구역이 속하는 시정촌의 장 및 해당 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사는 수역이용조정구역의 지정이 어업권의 침해방지등에 관계되는 것인 때에는 관계 해구어업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0조(지정구역의 고시등)** ① 지사는 수역이용조정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구역,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 및 기간을 고시해야 한다.

② 지사는 조종자, 소유자 및 제공사업자에 대해 수역이용조정구역의 소재지, 그 구역,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 및 기간에 관한 정보에 관해 강습회 기타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 2 절 시정등의 조치

**제21조(조종자에 대한 위험조종방지응급조치)** ① 지사가 지정하는 직원은 제2장 제1절에 정하는 책무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 수난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조종자에 대해 해당 위반 사실의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종자가 해당 pleasure boat 등에 승선하지 않고 기타 선박직원 및 소형선박조종자법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인접 경찰관, 해상보안관 또는 국토해양대신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지사가 지정한 직원은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 수난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해당 pleasure boat 등의 항행정지를 지시할 수 있다.

**제22조(제공사업자에 대한 개선조치)** 지사는 제공사업자가 제15조제1항에 규정하는 수난사고등 방지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경우에 수난사고등 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선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사업자는 지시된 개선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23조(보고, 출입조사등)** ① 지사는 전조의 개선조치 기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조종자, 소유자등, 제공사업자 기타 관계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지정하는 직원에게 pleasure boat 등 이용자대장의 비치장소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도록 하여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고 조종자, 소유자등, 제공사업자 기타 관계자에게 질문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조종자, 소유자등, 제공사업자 기타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전항에 정한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출입검사등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출입조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해 인정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제24조(증명서의 휴대)** 제21조의 위험조종방지 응급조치를 지시하거나 전조의 출입조사를 행하는 지사가 지정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 4 장 수역이용조정협의회

**제25조(설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조사심의 하고 지사의 자문에 응하는 수역이용조정구역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 하기 위해 지사의 부속기관으로서 수역이용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조직)** 협의회는 위원 15인 이내로 조직한다.

**제27조(위원)** ① 위원은 다음의 자 중 지사가 임명한다.

1. 학식경험을 가진 자
2. 해양에 관한 레크레이션 관계자
3. 어업에 관계하는 단체의 임직원
4.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회장 및 부회장)** ① 협의회에 회장 및 부회장을 둔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이 호선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9조(회의)** ① 협의회는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③ 회의의 의사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30조(회장에의 위임)** 이 장에 정하는 것외에 협의회는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협의회에 자문하여 정한다.

## 제 5 장 잡 칙

**제31조(관계기관등과의 연대)** ① 도는 국가,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단체 등과의 연대를 확보하면서 관련되는 시책을 추진한다.

② 지사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국가의 관계 지방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과의 연락 및 협의체제를 정비한다.

**제32조(관계단체의 육성)** 도는 pleasure boat 등의 사고방지등에 관계하는 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노력한다.

**제33조(이 조례의 해석 및 운용)** 지사는 이 조례의 해석 및 운용에 즈음하여 도민의 레크레이션활동 기타 수역이용자의 제반활동과의 조화가 도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4조(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 6 장 벌 칙

**제35조**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상자의 구호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역이용조정구역과 관련한 제한 또는 금지행위 중 사람이 유영하는 구역과 관련한 제한 또는 금지행위에 위반한 자
2.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시된 개선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자

**제37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역이용조정구역과 관련한 제한 또는 금지행위 중 사람이 유영하는 구역이외의 구역과 관련한 제한 또는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시 중 제6조의 구명동의착용과 관련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자

**제38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해 제35조부터 전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9조**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자는 2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평성 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공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현재 제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는 날(그 날이전에 제14조에 열거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까지의 기간은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전항에 규정하는 자가 시행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제공사업에 관해 제14조에 열거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행한 자는 동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이 조례의 시행당시 현재 동조에 열거한 사항을 신고하여 해당 제공사업을 영위한 자로 본다.
4. (검토) 지사는 평성 21년 4월 1일부터 기산하여 5년을 경과하는 때마다 사회경제정세의 변화등을 감안하여 이 조례의 시행상황등에 관해 검토를 하여 그 결과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12. 北海道 pleasure boat 등의 사고방지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03.4.1 제정

2010.3.31 최종개정

**제 1 조(취지)** 이 규칙은 北海道 pleasure boat 등의 사고방지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 2 조(위험의 우려가 있는 때)** 조례 제3조에 규정하는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험의 우려가 있는 때란 pleasure boat 등(수상 오토바이를 제외한다)이 유영자 기타 사람(이하 「유영자등」이라 한다) 또는 다른 선박의 부근에서 항행하는 때를 말한다.

**제 3 조(비정상상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 과로 또는 질병에 의해 주의력 또는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 또는 부상등으로 조종하기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

**제 4 조(위험한 조종방법)** 조례 제5조에 규정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방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1. 유영자등 및 다른 선박 부근에서 pleasure boat 등을 충돌 기타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속도로 항행하는 조종방법
2. 유영자 등 및 다른 선박 부근에서 pleasure boat 등을 급회전하거나 가로지르는 등의 조종방법

**제 5 조(구명동의)** 조례 제6조에 규정하는 구명동의란 선박직원 및 소형선박조종자법시행규칙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로서 착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 6 조(출항전의 검사등)** ① 조례 제7조에 규정하는 출항전의 검사란 다음을 말한다.

1. 연료 및 윤활유의 수량의 점검
2. 선체, 기관 및 구명설비 기타 설비의 점검
3. 전2호에 열거한 것 이외에 pleasure boat 등의 안전한 항행에 필요한 준비가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한 검사

② 조례 제7조에 규정하는 출입항장소 및 승선자에 관한 기록의 정리란 출항전에 pleasure boat 등의 명칭, 조종자명, 출입항장소, 출입항시각, 항행예정수역 및 승선자수를 기록하고 해당 기록을 수난사고등이 있는 경우등에 관계자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제 7 조(위험방지조치)** 조례 제8조에 규정하는 수역에서 위험을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란 스스로가 수난사고등을 발생시킨 수역에 해당 수난사고등에 의해 손괴된 선박 및 그 부품등을 방치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를 회수등을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 8 조(사업개시신고서등)** ① 조례 제14조에 규정하는 신고는 제공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양식의 사업개시신고서,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양식의 사업변경신고서에 따른다.

② 전항의 사업개시신고서 및 사업변경신고서에는 해당 신고와 관련된 모든 사용 pleasure boat 등의 선박안전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선박검사증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pleasure boat 등이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은 선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 조(이용자대장등)** ①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난사고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승선하는 자 전원의 성명, 주소 및 수난사고등 발생의 경우의 연락처

2. 조종자가 가진 소형선박조종사의 면허종류

3. 제공하는 pleasure boat 등과의 연락수단

② 제공사업자는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의 이용자대장을 해당 이용자와 관련한 pleasure boat 등의 이용종료일부터 기산하여 1주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설비는 제5조에 규정하는 구명동의를 말한다.

④ 조례 제1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수난사고등 방지상 필요한 사항이란 제6조제1항각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⑤ 조례 제15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제3조에 규정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수역이용조정구역의 지정)**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수난구호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란 pleasure boat 등이 유영자등 또는 다른 선박과 혼재되거나 혼재할 우려가 있거나 어업시설 또는 설비에 접근하거나 접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난사고등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② 조례 제18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타 관계하는 자란 다음을 말한다.

1. 북해도 경찰본부
2. 도내의 어업협동조합 및 어업협동조합 연합회
3. 도내에 해수욕장을 개설하는 자

③ 조례 제18조제2항에 규정하는 신고는 별지 제3호양식에 따른 수역이용조정구역지정신청서에 따른다.

④ 조례 제18조제4항에 규정하는 표식의 설치 기타 방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1. 지사가 별표에 정하는 양식으로 제작된 부표 및 입표를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구역을 식별하는 방법
2. 해수욕장, 어업시설 및 설비 기타 해당 수역이용조정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부표등으로 수역이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부표등 및 전호에 규정하는 입표로 구역을 식별하는 방법



**제11조(지정구역과 관련한 정보제공방법)** 조례 제20조제2항에 규정하는 강습회 기타 방법이란 강습회등을 개최하거나 지정된 수역이용조정구역과 관련한 정보를 해당 구역부근에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부착하는 등의 방법을 말한다.

**제12조(시정등 지시서)** 조례 제21조에 규정하는 지시는 별지 제4호양식의 시정등지시서로 한다.

**제13조(개선조치의 지시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지시는 별지 제5호양식의 개선조치 지시서로 한다.

**제14조(신분증명서)** 조례 제24조에 규정하는 증명서는 별지 제6호양식에 따른다.

#### 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별지양식 (생략)

## 【부 록 2】 관광수상레저 사업수행 관련 주요 인·허가 대상 법률

법률명	주요 인·허가 사항	비 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14조에 따른 건축 신고,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형질변경의 허가,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 인가,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관광진흥법」 제16조의 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대상 법률(제56조에 한함)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관광진흥법」 제16조의 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대상 법률(제8조, 제17조에 한함)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농어촌 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관광진흥법」 제16조의 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대상 법률

【부 록 2】 관광수상레저 사업수행 관련 주요 인·허가 대상 법률

법률명	주요 인·허가 사항	비 고
대기환경 보전법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 공사의 시행허가,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관 광 진 흥 법」 제16조의 사업 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대상 법률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 해제	「관 광 진 흥 법」 제16조의 사업 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대상 법률
산림자원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관 광 진 흥 법」 제16조의 사업 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대상 법률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제15조에 따 른 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 사용허가·신고	「관 광 진 흥 법」 제16조의 사업 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대상 법률
소방시설설 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법률명	주요 인·허가 사항	비 고
소방시설 공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소하천 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제14조 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수산업법	제67조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수산자원 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시행 의 승인	
어촌· 어항법	제38조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허가	
연안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 지역계획의 변경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제71조에 따른 공원 관리청과의 협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신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관 광 진 흥 법」 제16조의 사업 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대상 법률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 가 또는 신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부 록 2】 관광수상레저 사업수행 관련 주요 인·허가 대상 법률

법률명	주요 인·허가 사항	비 고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	「관 광 진 흥 법」 제16조의 사업 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대상 법률(제23조에 한함)
폐기물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관 광 진 흥 법」 제16조의 사업 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대상 법률(제30조, 제33조에 한함)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신고	
해상교통 안전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해상 레저 활동의 허가	